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한국사회의 자살률에 관한 분석

-지역사회의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민영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자살률이 한국사회의 병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사회의 자살률을 분석하였다. 국민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I)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발전 수준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산업 전부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어 가족관계의 약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이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민영 외, 2011; 이재열, 2007; 정진성,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로 인한 한국사회의 자살률 변화를 살펴보고, 증가하는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한 집합적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개별사회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경제위기 위기 이후 파편화된 사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촉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 등과 같은 요인이 자살률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성·연령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자살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면서 성별에 따른 격차 역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에 있어 성·연령별 집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집단이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상이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성·연령 집단별 자살률을 구분하였으며, 연령표준화를 통해 지역간 비교가능한 자살률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IMF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사회적 충격이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2년-2011년 동안 발생한 경제위기를 외환위기·신용카드 유동성위기·금융위기로 구분하고 15개 시도(울산 제외)의 성·연령별 집단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대상으로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고정효과 패널분석(two-way fixed effect with AR(1) disturbance)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경제위기는 자살률을 증가시켰으며 성·연령별로 상이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체 자살률은 외환위기 직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금융위기 순으로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내적 위기(신용카드 유동성위기)에 비해 산업 전반에 충격을 가져다주는 대외적 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로 인한 자살률 증가폭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분석(김민영 외, 2011)과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인구구조를 고려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분석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2011년까지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보다 분명히 분석할 수 있었기에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크게 증가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제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기준으로는, 향후 직업활동이 중요한 청년층(15-34세)의 자살률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노년층(65세이상) 자살률의 경우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대내적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식별하고 각 집단을 대상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같이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 등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social tie)가 지닌 긍정적 외부효과와 지역사회 소속감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복지지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2010년 동안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 및 연령별(전체 및 노년층) 자살률을 대상으로 시간 및 지역을 고려한 고정효과 패널분석(two-way fixed effec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적 사회자본은 자살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 비율과 자원봉사단체회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조적 사회자본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외부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은 함께 측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은 모든 자살률에 대해 동일하였고 전체 노인 및 남성 노인 자살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별로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계층구조가 뚜렷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non-hierarchical structure)와 같은 내부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단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가 구성원간 평등한 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일반신뢰, 호혜성 등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사회에 기반한 연고주의로 인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단체활동이 연계형 사회자본이 아닌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 외부효과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여연대와 같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단체를 이끄는 일부 전문가들이 학연과 지연 중심으로 닫힌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어(류석춘·김

용민, 2000; 류석춘·왕혜숙, 2006)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지닐 수 있다. 셋째, 등록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어(연고단체 및 종교단체 제외) 기대하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체 유형에 따른 사회단체 참여율을 세분화하여 횡단면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분야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아파트주민단체 등의 지역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년층 여성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친목·종교단체 참여율의 경우, 기대와 달리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내 연고주의로 인해 사회자본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지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단체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거나 혹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살률과 같은 지역내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자본의 대리지표로 활용되는 투표율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지역사회에서 지방선거투표율은 사회자본의 대리지표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사회가 정부에 대해 지닌 불만 수준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활동분야와 규모에 따라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특성이 달리 나타날 가능

성이 존재하며, 특히 연고주의에 기반한 한국사회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성원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단체 외부인에 대한 포용성을 갖춘 단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을 더욱 배제하여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노년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분석결과, 문화시설 이용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연령 여성 자살률 및 노년층 자살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내 문화시설이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사회내 소속감이 증진되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지역내 자살률을 낮출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그리고 노년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향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연령에 비해 노년층은 시간자원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화시설비율 및 동네체육시설비율은 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기반시설도 중요하나 실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배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반영하는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전년도의 노력이 다음 연도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여성자살률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주민이 받는 절대적 혜택을 나타내는 1인당 사회복지지출예산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전년도의 노력이 다음 연도 전체연령의 전체 자살률

및 여성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상대적(사회복지부문의 예산비중) 및 절대적(1인당 지원규모) 수준의 강화는 특히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내 자살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당해 연도 일인당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년층 남성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 남성에게는 그 시점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음해에 대한 전망보다 보다 중요하며, 개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액의 절대적 수준이 지역내 정책 정향과 같은 정부의 지원방향보다 의미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더불어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비율과 같이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지출은 분석 전반에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외 분석 전반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낸 분야는 지역사회내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1인당 광업제조업생산액)이었으며, 더불어 사회통합수준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산업화수준, 인구이동률, 인구밀도, 외국인비율 등과 같은 지표 역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통합수준을 대표하는 조이혼율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았으며 이는 특히 노인 자살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가족해체는 개인적 수준의 충격과 함께 기존 사회규범의 약화라는 문화적 충격도 함께 야기하여, 노인층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통합수준 저하에 따른 지지망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살률이라는, 개인이 아닌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현상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두 측면-구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단지 단체 활동과 같은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이 지니는 영향력만을 분석하였는바 향후 지역 사회내 신뢰, 상호호혜성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이 자살률과 지니는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 분석에 있어, 경제 혹은 정치제도가 아닌 사회적·정서적 관계 속에서 연고주의라는 한국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성별 자살률, 노인 자살률, 경제위기, 사회자본, 문화예술 활동, 사회복지지출

학 번: 2008-30651

제목 차례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 제3절 연구의 구성 | 6 |
| | |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8 |
| 제1절 지역 수준의 자살률 분석 | 8 |
| 제2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살률 논의 | 10 |
| 1. 성별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 | 10 |
| 2. 연령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 | 12 |
| 제3절 경제위기와 자살률 논의 | 13 |
| 1. 사회심리학적 관점 | 14 |
| 2. 경제학적 관점 | 16 |
| 3. 경제위기와 자살률의 성별·연령별 차이 | 18 |
| 제4절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논의 | 19 |
| 1. 사회자본과 자살률 | 19 |
| 1)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 | 19 |
| 2) 사회자본의 형태와 외부효과 | 21 |
| 3) 사회자본과 성·연령별 자살률 | 24 |
| 2. 문화예술활동과 자살률 | 27 |
| 1) 문화예술활동과 정신건강 | 27 |
| 2) 문화예술활동과 성·연령별 자살률 | 29 |
| 3.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 30 |
| 제5절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 33 |

| | |
|------------------------------------|-----------|
| 제6절 개념적 준거틀 | 35 |
| 제3장 연구설계 및 방법론 | 37 |
| 제1절 분석대상 | 37 |
| 제2절 분석방법 | 37 |
| 1. 성·연령별 자살률의 비교 분석 | 37 |
| 2. 고정효과분석 | 39 |
| 3. 지역 사례 비교 | 42 |
| 제3절 변수의 측정 및 분석자료 | 43 |
|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활용 | 43 |
| 2.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 | 46 |
| 1) 분석단위: 광역자치단체 | 46 |
| 2) 성별 전체연령 자살률과 청년층·장년층·노년층 자살률 .. | 46 |
| 3) 대내외 경제위기의 구분 | 47 |
| 4) 통제변수의 측정 | 48 |
| 3.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분석 | 49 |
| 1) 분석단위: 기초자치단체 | 49 |
| 2) 전체연령 자살률과 노년층 자살률 | 50 |
| 3) 사회자본의 측정 | 50 |
| 4) 문화예술활동의 측정 | 52 |
| 5) 사회복지지출의 측정 | 53 |
| 6) 통제변수의 측정 | 54 |
| 4. 지역 사례의 선정 | 56 |
| 제4장 분석결과 | 58 |
| 제1절 성별 및 연령과 자살률 비교결과 | 58 |
| 1. 성별 자살률 격차 | 58 |

| | |
|------------------------------------|-----|
| 2. 연령별 자살률 차이 | 60 |
| 1) 연령별 조자살률 | 60 |
| 2) 연령표준화 자살률 | 62 |
| 3. 성·연령별 자살률 차이 | 64 |
| 제2절 경제위기와 지역별 자살률 분석결과 | 69 |
| 1. 자살사유별 자살자 현황 | 69 |
| 2. 경제위기와 전국 자살률의 변화 | 71 |
| 3. 경제위기와 시도 자살률의 변화 | 74 |
| 1) 기술통계 | 74 |
| 2) 경제위기에 따른 시도 자살률 분석 | 75 |
| 제3절 사회문화적 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분석결과 .. | 85 |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85 |
| 1) 시군구별 자살률 기술통계 | 85 |
| 2) 이외 변수의 기술통계 | 88 |
| 2.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 92 |
| 1) 사회문화자본과 자살률 | 92 |
| 2)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 107 |
| 3. 지역 사례의 자살률 변화 | 112 |
| | |
| 제5장 결론 | 119 |
| | |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19 |
| 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 126 |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31 |
| | |
| 참고문헌 | 136 |

<표 차례>

| | |
|---|-----|
| <표 3-1> 시도 단위 주요 변수의 측정 및 자료 | 49 |
| <표 3-2> 시군구 단위 주요 변수의 측정 및 자료 | 55 |
| <표 3-3> 평균 전체 자살률을 기준으로 선정된 지역 | 57 |
| <표 4-1> 연령별 2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조사망률(2011년) | 62 |
| <표 4-2> 성·연령·자살수단별 조자살률(2008년) | 66 |
| <표 4-3> 성·연령·혼인상태별 조자살률(2008년) | 68 |
| <표 4-4> 경제위기시 전국 성·연령별 조자살률의 변화 | 74 |
| <표 4-5>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자료의 기술통계 | 75 |
| <표 4-6>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결과(1) | 83 |
| <표 4-7>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결과(2) | 84 |
| <표 4-8> 시군구 연령표준화 자살률 기술통계 | 85 |
| <표 4-9>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1) | 89 |
| <표 4-10>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2) | 91 |
| <표 4-11> 문화시설 연간 이용률 | 99 |
| <표 4-12>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 | 104 |
| <표 4-13> 분석결과: 분야별 단체활동 | 105 |
| <표 4-14>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지방선거투표율 | 106 |
| <표 4-15>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예산비중(전년도 포함) | 110 |
| <표 4-16>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전년도 포함) | 111 |
| <표 4-17> 행정구역별 주요 특성 비교 | 115 |
| <표 4-18> 지역 사례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1) | 117 |
| <표 4-19> 지역 사례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2) | 118 |

<수 식>

| | |
|---|----|
| <수식 3-1> 표준화 자살률 공식 | 39 |
| <수식 3-2>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분석 모형 | 41 |
| <수식 3-3>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 모형 | 42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1) | 36 |
| <그림 2-2> 연구의 분석틀(2) | 36 |
| <그림 3-1>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지도 | 40 |
| <그림 3-2> 전체 자살률 및 노인 전체 자살률의 분포 | 43 |
| <그림 3-3> 1992-2010년 범죄분석 및 사망원인통계의 자살자수 | 45 |
| <그림 4-1> 1983-2011 성별 조자살률 격차 | 58 |
| <그림 4-2> 1985-2010 조자살률과 1인당 GNI 변화 | 59 |
| <그림 4-3 > 1990-2011년 전국 연령별 조자살률 | 61 |
| <그림 4-4> 2000-2011년 전국 연령표준화 자살률 | 63 |
| <그림 4-5> 2003-2010년 전국 연령표준화 노인 자살률 | 64 |
| <그림 4-6> 1990-2011년 남성 연령별 조자살률 | 65 |
| <그림 4-7> 1990-2011년 여성 연령별 조자살률 | 65 |
| <그림 4-8> 성·연령·자살수단별 조자살률(2008년) | 67 |
| <그림 4-9> 성·연령·혼인상태별 조자살률(2008) | 68 |
| <그림 4-10> 경찰청 분류 원인별 자살 현황(2004-2008) | 70 |
| <그림 4-11> 경찰청 분류 원인별 자살 현황(2009-2010) | 70 |
| <그림 4-12> 1992-2011년 성별 조자살률의 변화 | 71 |
| <그림 4-13> 1992-2011년 노년층 조자살률의 변화 | 73 |
| <그림 4-14> 1992-2011년 연령별 조자살률의 변화 | 73 |
| <그림 4-15> 연도별 시군구 자살률의 상자그림 | 86 |
| <그림 4-16> 지역별 전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의 변화 | 88 |
| <그림 4-17> 행정구역 기준 각 연도 성별 평균 자살률 | 113 |
| <그림 4-18> 행정구역 기준 노인의 각 연도 성별 평균 자살률 | 114 |
| <그림 4-19> 자살률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각 연도 성별 자살률 비교 | 116 |
| <그림 4-20> 자살률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각 연도 노인 성별 자살률 비교 | 116 |

<부 록>

| | |
|--|-----|
| <부록 1> 표준인구: 2005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150 |
| <부록 2-1> 연도별 연령표준화 전체 자살률 하위 15대 지역(1) | 151 |
| <부록 2-2> 연도별 연령표준화 전체 자살률 하위 15대 지역(2) | 152 |
| <부록 2-3> 연도별 연령표준화 전체 자살률 상위 15대 지역(1) | 153 |
| <부록 2-4> 연도별 연령표준화 전체 자살률 상위 15대 지역(2) | 154 |
| <부록 3-1> 연도별 전체자살률과 실업률 간 산점도 | 155 |
| <부록 3-2> 연도더미를 제외한 분석결과 | 156 |
| <부록 3-3> 연도더미를 제외한 분석결과: 시 지역 | 157 |
| <부록 3-4> 연도더미를 제외한 분석결과: 도 지역 | 158 |
| <부록 3-5> 1인당 GRDP 및 실업률 각각을 제외한 분석결과 | 159 |
| <부록 4-1> 연도별 시군구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상자그림 | 160 |
| <부록 4-2> 연도별 시군구 자원봉사단체 및 회원 비율 상자그림 | 160 |
| <부록 4-3> 연간가구평균소득 기술통계 | 161 |
| <부록 4-4>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연평균가구소득 | 162 |
| <부록 4-5> 연평균가구소득 제외 분석결과 | 163 |
| <부록 4-6>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범죄율 | 164 |
| <부록 4-7> 성별 사회활동 인구(2010) | 165 |
| <부록 4-8> 연령별 사회단체활동 인구(2010) | 165 |
| <부록 4-9>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정신요양시설 | 166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자살률이 한국사회의 병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사회의 자살률을 분석하였다. 국민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I)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발전 수준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경제적 특성과 함께 다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자살률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최근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산업 전부분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어 가족관계의 약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로 인한 한국사회의 자살률 변화를 살펴보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간 관계를 확인하여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높은 수준의 자살률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자살은 개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의 반대편 극단에 위치하며 (Koivumaa-Honkanen et al., 2001), 삶의 만족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사회의 건강(Durkheim, 1897)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자살은 일견 개인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사실’로 간주되어야 한다(Durkheim, 1897). 즉,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기존 연구들은 자살을 개인의 내적 심리현상으로 간주하거나, 우울증·유전성·약물효과 등의 신체 및 정신질환에 기인하였다고 보거나(병리학적 관점), 혹은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간주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Stack, 2000a; 2000b). 자살률이 한 사회의 병리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사회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개념화하여 연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왔던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역할, 그리고 사회자본과 같은 사회적 역량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살률에 있어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연구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Blakely et al., 2006; Islam, Gerdtham, Gullberg, Lindstrom, & Merlo, 2008; van Hooijdonk, Droomers, Deerenberg, Mackenbach, & Kunst, 2008; Wilkinson, 2005 등).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한 집합적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개별 사회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경제위기 위기 이후 파편화된 사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촉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 등과 같은 요인이 지역 자살률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실증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내외적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살률 간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상황을 중시하여, 경제위기와 같은 대규모의 급작스러운 충격은 자살률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Catalano et al., 2011). 특히 한국은 대외적 경제 충격인 1998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9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대내적 요인인 2003년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김민영 외,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분석시기를 확장하여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분석에 활

용함으로써 분석시기 및 지역의 인구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자살률을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률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살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자본과 문화예술활동이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지출은 상대적으로 물질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두는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촉진되거나 혹은 저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과 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은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부여하여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우울증에 기인한 자살을 예방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살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Berkman, Glass, Brissette, & Seeman, 2000; Islam et al., 2008: 37). 만약 한 사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믿고 신뢰한다면 물질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주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즉, 기존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이 높은 곳에서는 자살률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Islam et al., 2008; van Hooijdonk et al., 2008),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Blakely et al., 2006: 신상진·조영태, 2007; 하미옥 외, 2013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자본과 자살률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주민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켜 자살위험을 낮추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도 주목하였다.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의 향유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Staricoff & England, 2004). 게다가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은 주민의 사회적 소속감을 향상시킨다 (Kwak, Shah, & Holbert, 2004). 문예예술회관에서 공연을 감상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치나 소속감

을 인식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러한 활동을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속감을 인식할 것이다(Kwak et al., 2004: 654). 이처럼 문화예술활동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소속되었다는 안정감을 부여하므로 지역내 자살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지출이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지출은 주민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최저생활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은 그의 자살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박재영·채유미·정상혁·문기태, 2008),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노인빈곤율과 더불어 노인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이소정, 2010). 특히 시장경제에 기반한 사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황을 일부 해소하거나 혹은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Flavin & Radcliff, 2009: 198). 그렇기에 사회복지지출 지출의 증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내 자살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자살률에 있어 성·연령별 자살률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연령별 집단을 구분하였다. 특히 성·연령별 집단은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그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가 상이하다(Ferlander, 2007; Kawachi & Berkman, 2001; 김형용, 2010 등). 따라서 성·연령별로 자살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집단에 보다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병리성을 반영하는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그 기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어떠한 역

할 수 있는지, 성·연령별로 어떤 집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이다.

최근 자살률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Greenberg et al., 2003; 정상혁, 2005), 본 연구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였던 기존 정책들과는 달리 사회자본은 정부의 직접적 간여가 아닌 시민 사회를 통해 교육, 경제적 발전, 건강과 행복 등 여러 부문에서 정부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Putnam, 2000)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활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는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에 주목하였다. 자살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자본과 문화예술활동이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지출은 상대적으로 물질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두는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성·연령별 자살률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 가능성을 구분하고 한국 사회의 성·연령별 자살률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산출하여 이후 분석에 활용하였다.¹⁾

다음으로 1992년-2011년 동안 발생한 세 번의 대내외적 위기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의 충격이 성·연령별

1) 아래에서는 별도로 조자살률로 구분하지 않는 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줄여 자살률로 기술하였다.

집단에 어떠한 충격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발생한 자살률을 대상으로 2003년-20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함께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즉, 지역내 사회문화자본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정향에 따른 성·연령별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회귀분석결과의 적절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기간 동안 평균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행정구역적 특성 및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선정하여 지역사례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이후, 제2장에서 자살률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지역 수준에 있어 자살률 분석의 의의를 검토한 이후, 자살률에 있어 성·연령별 격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논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이후 파편화된 지역사회의 문제(자살률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고유한 역량으로서 사회문화자본의 역할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복지지출의 과 자살률간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후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논문의 개념적 준거틀을 설정하고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설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제4장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자살률에 있어 성·연령별 격차를 조자살률 및 연령표준화 방식을 통해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대내외적 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일부 지역사례를 선정하여 분석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설명한 이후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지역 수준의 자살률 분석

자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살을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하는 흐름과 사회적 수준에서 분석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살이라는 행위가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수준의 분석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개인은 사회에 속하여 그 사회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준의 연구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단독 행위가 아닌 사회적 사실로서 자살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뒤르케임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연구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이미 퀘틀렛(1984)과 모르셀리(1882) 등과 같은 계량학자들은 국가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근대화 이루어짐에 따라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전통적 가치 변화에 따라 자살률이 증가(Masaryk, 1970/1881)한다는 사회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Wray et al. 2011: 507 재인용). 하지만 뒤르케임은 이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자살률과 사회통합·사회규제의 관계를 직관적이면서도 실증자료를 통해 설명하였기에 그의 연구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²⁾ 유럽의 각 지역의 자살률을 살펴본 결과, 자살행위 그 자체는 개인이 행하는 것이라도 단지 개인의 결정으로만 볼 수 없었는데, 그러한 선택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영향-사회의 집합적 경

2) 뒤르케임의 자살론은 그가 이전에 작업한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에서 제시한 '사회적 사실이 사물으로써,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로써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작업의 결과물이다(뒤르케임, 1897: 2008 12). 그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구분되는 '사회적 사실'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현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그리고 양적으로 분석가능한 자살을 대표적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향(collective disposition)의 차원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Durkheim, 1897; 송재룡, 2008: 125 재인용)-을 받기 때문이었다(Durkheim, 1897). 구체적으로 뒤르케임은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모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Durkheim, 1897). 사회 통합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 사람들은 소속감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이기적 자살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너무 높은 수준의 사회 통합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대의를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하는 이타적 자살을 야기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에서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사례를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Minagawa, 2013). 이후 지역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민의 건강, 특히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Rehkopf & Buka, 2006).

개인적 관점에서는 합리적 개인을 가정하는 경제학(미래기대효용의 현재가치에 따른 합리적 판단결과)에서의 연구와 심리학(개인의 내적 투쟁)·신경정신의학(호르몬 등의 신경전달물질, 유전적 요인 등)·보건학(자살위험도 평가)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ray et al., 2011: 510-511). 특히 의학, 역학, 심리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는 정신질환과 자살간 높은 관련성으로 인하여 개인이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나 유전적 소인, 복용약물 등의 생리학적 요인들이 자살위험을 높이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문 분야에서도 자살을 사회적 수준에서 살펴보려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과 같은 생리적 문제는 전체 인구 중 일부에게만 발견된다는 비판(Li et al., 2011)과 함께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는 단지 생리적 요인에만 기인하지 않으며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Wilkinson,

2005). 게다가 이들 요인은 그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더욱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기에, 이들 요인들을 단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반영된 직접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송재룡, 2008: 134).

또한 사회의 특성이 주민 개개인이 지니는 특성의 단순한 합계로서 구성효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고유의 맥락효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오랜 연구가 축적되면서 지역 고유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와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Lochner, Kawachi, & Kennedy, 1999; Wilkinson, 2005; 김윤희·조영태, 2008; 김형용, 2009 등).

제2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살률 논의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자살률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집단과 청년·장년·노년층 연령집단의 특성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성·연령 집단별 특성 차이로 인해 대내외적 경제위기의 충격과 지역사회의 특성(사회문화자본의 수준,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통합 수준의 약화 등)이 각 집단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경제위기 및 사회문화자본과 성·연령별 자살률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성취 지향적 삶을 추구하여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Girard, 1993).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성에게 가장으로서 보다 많은 역할(breadwinner role)이 기

대되는 만큼 그 역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더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자살을 실행에 옮길 때 약물 등에 의존하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아파트 혹은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등과 같이 과격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자살시도는 여성이 높을지라도 실제 자살률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McIntosh, 2002; Joiner, 2005: 155-156 재인용). 특히 남성은 격한 싸움이나 스포츠, 게임 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내성이 커지면서 치명적 자해능력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여성보다 자살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Joiner, 2005: 156). 이외에도 남성은 강해야 하며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문화적 스트레스, 도움을 청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성, 상대적으로 높은 술 소비량과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 성역할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³⁾ 등의 요인도 남성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Möller-Leimkühler, 2003).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한 해 동안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 중 75%는 여성인 반면 자살한 사람의 75%는 남성이었을 만큼, 남성은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Angst & Ernst, 1990; Möller-Leimkühler, 2003: 3 재인용).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직업활동에 있어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은 반면 친구나 가족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리거나 도움을 청하여 해결할 수 있기에 여성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중국에서만 예외적으로 여성 자살률이 남성 자살률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농촌지역의 20-30대 여성 자살률이 상당하여, 전체 여성 자살률은 남성 자살률보다 25%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Phillips, et al., 2002; Yip, P. F.,

3) 이는 여성에게도 성별 역할 갈등을 일으켜 자살률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직업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자살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면 사회적 연계가 강화되어 여성 자살률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Chuang & Huang, 2007: 468).

et al., 2005). 이에 대해 중국이 지니는 강한 유교주의⁴⁾, 강한 남성 선호 등으로 인한 여성의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문화적 배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Pearson, 1995; Zhang, 2010).

이러한 성별 차이로 인해 이혼, 출산 등과 같은 생애사건과 경제 위기의 발생 등과 같은 외부적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2. 연령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의료비용 증가, 신체 기능저하로 인한 운명주의 심화, 직업역할 상실, 배우자 상실, 동년배 감소로 인한 사회적 관계 약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Stack, 2000b: 166-167).

특히 직업역할의 상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하지만 고령으로 인해 의료비용은 증가하게 되며, 은퇴 이후 개인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가치를 재고하게 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노인이 되면 자녀 양육 등의 역할도 요구되지 않는 반면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화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이 커지게 되어 자살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Joiner, 2005).

게다가 현대 사회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지위는 하락하게 되어 이로 인한 상실감과 고독감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집단의 자살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오랜 경험에 기반하여 축적된 지식, 기술, 지혜 등이 생활을 유지해나

4) 특히 중국 농촌 지역은 강한 유교주의로 인해 결혼 등과 같은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이 기혼여성에게 심리적 지지망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결혼 이후 사회적 관계가 감소하여 도움을 요청할 외부 자원이 감소하는 등의 자살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Zhang, 2010).

는 필수적인 자원이었기에 노인들의 지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Cowgill & Holmes, 1972; Cowgill, 1986; 이철수, 2005: 재인용). 그러나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과거 경험적 지식의 가치는 저하되고 이에 따라 노인의 지위는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이들은 강한 상실감을 경험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이다.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비용(신체적 고통, 질병 증가 등)이 증가하는 반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을 감소시켜 노인의 자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한다(Hamermes & Soss, 1974).

이외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줄어들고, 생활 반경도 좁아지고 자녀들은 분가하며 사별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독거노인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독감의 증대, 무망감의 증대 등으로 인해 자살을 이러한 고립상황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권중돈 외, 2012).

특히 송재룡(2008)은 뒤르케임의 자살유형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연령별 자살의 특성을 구분하였는데, 청소년층에 있어서는 과열된 교육문화로 인한 숙명적 아노미형 자살이 나타나고, 장년층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이기적 아노미형 자살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년층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살하게 되는 나이에 속박된(age-locked) 이타형 자살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제3절 경제위기와 자살률 논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크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악화시켜 결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Chang, Gunnell, Sterne, Luc, & Cheng, 2009; Khang, Lynch, & Kaplan, 2005; Ruhm, 2000 등).⁵⁾ 이러한 경

제위기와 자살률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사회심리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Catalano et al., 2011).

1. 사회심리학적 관점

먼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는 그의 생리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요인에 따라 구성된다(Wilkinson, 2005: 60-61). 그렇기에 다양한 사회적 특성에 따라 구성원의 건강 혹은 자살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로 연구한다. 이들은 주로 스트레스 메커니즘과 좌절-공격 메커니즘을 통해 자살을 설명한다(Henry & Short, 1954; Hamermes & Soss, 1974: 84 재인용). 스트레스 메커니즘(stress mechanism)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의 역할에 주목하여 자살률의 증가나 감소를 설명하며, 좌절-공격 메커니즘(frustration-aggression mechanism)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생겨나는 좌절감이 (내부) 공격으로 표출되어 자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경제위기는 기업 도산·실업·소득감소·가족해체 등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며 더불어 사회적 지위 하락 등으로 인한 좌절감으로 인해 자신을 공격하도록 하여, 결국 사람들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경제위기는 기업의 파산, 산업 및 노동계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실업률을 급격히 증대시키는데, 이러한 사회 전반의 갑작스러운 실업률 증가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경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업 이후, 소득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우울감을 증대시켜 자살위험도를 증진시키게 된다(Blakely, Collings, &

5) 아래 경제위기와 자살률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김민영 외(2011)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Atkinson, 2003: 594). 더불어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더불어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새롭게 직장을 구하더라도 신규 업무 숙지 및 동료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등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일련의 활동이 요구된다(Preti, 2003). 이로 인해 실업에 따른 우울감 등을 고려하여도 취업자에 비해 실업자의 자살위험도는 두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Blakely et al., 2003).⁶⁾

또한 경제위기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가계부채는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정신건강을 저하시키며 결국 사소한 외부적 사건에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오히려 취업 여부나 자산 대비 부채의 규모가 소득 수준보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Zimmerman & Katon, 2005). 특히 신용카드 이용 등과 같은 소비행위로 발생한 부채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Drentea & Lavrakas, 2000). 즉 소득 수준이 낮은 것보다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Hintikka et al., 1998). 실제 홍콩에서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들은 부채가 없는 자살자들보다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적었다(Yip, Yang, Ip, Law, & Watson, 2007).

게다가 경제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증

6) 다만 개인의 실업과 사회의 실업률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실업률과 자살률은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살률 역시 높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더 낮은 관계가 나타났다(노용환, 2006; Neumayer, 2004; Platt, Micciolo, & Tansella, 1992). 이는 실업은 개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자살위험을 증대시키지만, 그 스트레스 수준은 사회전반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실업자의 정신건강은 실업 그 자체로 인해 낮아지지만 만약 주변 사람들도 함께 실업 상태라면 실업이라는 상황이 개인의 능력 부족보다는 비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덜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Clark, 2003).

대시키는데서 멈추지 않고 사회통합 수준을 저하시켜 결국 자살률을 증대시키게 된다. 경제위기는 가족간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가족해체 현상을 야기하고 더불어 기존 사회의 관습 혹은 그 규율 수준을 약화시켜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Durkheim, 1897/2008: 249-261; 296-345). 구체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이 생활고를 경험하게 되면 그 영향은 단지 금전적 측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여 가족생활 전반에 타격을 준다. 대표적으로 가장의 실업이나 소득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그 개인과 더불어 부부 및 가족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대화단절, 가족폭력, 가출, 이혼 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여 가족을 와해시킨다(정진성, 2001). 특히 개인 수준에서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가족해체는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자살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Kposowa, 2003). 특히 이는 유교적 배경을 지닌 한국사회에서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야기할 것이다.

2. 경제학적 관점

반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자살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데, 평생 동안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의 현재가치가 일정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자살하게 된다고 본다(Hamermes & Soss, 1974). 따라서 소득이 자살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기대효용이 낮아지면서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령과 자살가능성은 단순한 선형관계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남은 삶의 현재가치는 소득과 연령 이외에도 인적자본, 불확실성과 불가역성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삶의 현재가치에 대한 기대효용은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Koo & Cox, 2008:

Chen et al., 2012: 273 재인용), 경제위기는 이러한 인적자본을 저하시켜 자살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과 같은 상황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중단에 따른 개인의 인적자본을 낮추게 되고 결국 향후 기대소득을 낮추어 자살을 선택하도록 하며, 그 부정적 영향은 노년층보다 직업활동이 더욱 활발한 청년층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디시트와 핀딕의 주장에 따르면, 자살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행위는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계속 살아가는 선택(option value of staying alive)의 가치에 따라 자살을 결정하게 된다(Dixit & Pindyct, 1994: 24-25). 이들은 투자자들이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경우,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고민하고 기다리면서 잠시 선택을 보류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자살을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Dixit & Pindyct, 1994).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삶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계속 살아가는 선택의 가치가 높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클 경우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경제위기 시에는 소득감소, 실업과 그에 따른 인적자본의 감소, 전반적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삶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저하(즉, 불확실성 감소),⁷⁾ 취업의 어

7) 다만 디시트와 핀딕은 예상되었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potential bad outcomes)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이는 그 결과를 바로 버리도록 하는 유인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예상되었던 잠재적인 긍정적 결과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계속 살아가는 선택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Dixit & Pindyct, 1994: 41). 즉, 자살이 지닌 불가역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계속 살아가는 선택의 현재가치가 더 낮아지더라도 이로 인해 바로 자살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반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계속 살아가는 선택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살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려움, 부채증대 등으로 인해 향후 기대효용의 현재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다.

3. 경제위기와 자살률의 성별·연령별 차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살가능성에 있어 성 및 연령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위기에 취약하여 남성 자살률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위기는 실직자들을 양산하게 되는데, 남성은 실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담감, 실업자라는 사회적 지위 약화 등으로 인해 여성 실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을 수 있다(Chuang & Huang, 2007: 480). 이는 남성에게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기대되는 역할(breadwinner role)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생활과 같은 직업이 필수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에게는 주된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경제위기 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여 성별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직업활동과 같은 사회생활은 남성의 주된 역할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이 약화되면서 남성과 여성간 역할갈등이 야기되어 자살률이 증대하거나 혹은 여성의 경우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연계가 강화되어 여성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Chuang & Huang, 2007: 468). 게다가 경제위기 시 증가하는 이혼과 같은 사건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혼을 경험한 여성보다 남성이 자살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Kposowa, 2003).

성별 차이 이외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그 수준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닥치면 노년층이 경험하게 되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크게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신체적 기능약화,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직업활동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노인자살률이 실업률과 같은 경기지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용, 2004). 하지만 특정한 경제지표보다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속화된 가족해체가 노인자살률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노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가족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고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약화되는 등 상실감과 고립감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유정균, 2008).

제4절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논의

1. 사회자본과 자살률

1)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

사회자본은 그 학문적 중요성이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사회학·범죄학·보건학·노동경제학·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에 대해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정치학 분야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푸트남(Putnam)은 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의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핵심은 네트워크와 그와 관련된 상호호혜성(reciprocity)에 관한 규범에 있다고 주장한다(Putnam, 1993; 2001: 1). 또한 콜만(Coleman)은 친밀도(closure)라

는 용어를 통해 개인간 상호지식과 사회적 연계가 존재하기에 서로 지지해주거나 통제하는 영향력이 존재하며 친밀도를 강화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노미와 같은 부정적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Coleman, 1988). 특히 그는 사회자본은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 관계와 단체간 구조에 존재한다고 언급하여, 사회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으로 간주하는 린(Lin), 부르디외(Bourdieu) 등의 학자와는 달리 사회자본의 집합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이란 개인과 그 가족이 지닌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원으로서 경제적 혹은 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사회에 영향을 지니게 된다고 보며 그 근간이 개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Bourdieu 1979; 1980; Portes, Vickstrom, 2011: 462 재인용). 하지만 최근 사회네트워크 이론분야에서도 방법론적 발전과 더불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이 지닌 관계의 수와 특성, 그 개별관계의 유용성 등을 살펴보는데 머무르지 않고 네트워크 그 자체의 밀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개인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을 벗어난 사회수준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mith & Christakis, 2008).

이처럼 사회자본의 개념이나 수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반신뢰, 상호호혜성(reciprocity), 단체활동에 기반한 네트워크 등을 사회자본의 주요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Coffe & Geys, 2005). 즉, 대부분의 논의에서 사람들간 직접적 만남을 통한 사회적 관계(social tie)에 기반을 두어 사회자본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구성원은 서로 믿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규범을 준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렇기에 뉴튼은 단지 회비만 낼 뿐 그 구성원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힘든 조직(checkbook organization)은 다원적 민주주의에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도 구성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Newton, 1997: 582).

푸트남 역시 회비만 내고 소식지를 간간히 받아보는 대규모의 자발적 결사체(mass-membership organization)가 증가하여도 그 구성원들은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힘들다고 보았다(Putnam, 1995: 71). 즉,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일차적으로 구성원간 상호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인 것이다.⁸⁾ 또한 일단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 이는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그 구성원 전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별개의 존재로 구성되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2) 사회자본의 형태와 외부효과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이 어떠한 형태를 지니는지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자본을 인지적 사회적 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과 구조적 사회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지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신뢰, 소속감, 상호지지 등과 같이 사람들간 관계에 있어 감각적이고 인지적 측면을 의미하는 반면 구조적 사회자본은 자원봉사 활동, 단체 참여 활동 등과 같이 사람들의 구체적 행동을 의미한다(De Silva, Huttly, Harpham, & Kenward, 2007; Blakely et al., 2006; Kawachi, 2006; Geys & Murdoch, 2010). 두 형태의 사회자본은 상호연결되어 있다. 사람들간 사회적 관계라는 구조적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적 신뢰, 상호지지

8)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접으로 만나는 빈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대신 기술 발전에 따라 편지, 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존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다. 다만 푸트남은 이러한 간접적 연락 수단이 기존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만남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았다(Putnam, 2000:169). 물론 노년층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을 습득하지 못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 동호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 관계에서는 정보교환 등의 상호호혜성 역시 형성될 수 있어도 그 익명성으로 인해 구성원간 신뢰가 형성되기란 쉽지 않기에 사회자본으로 의미를 지니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등의 감정적·인지적 사회자본이 형성되며, 사람들의 감정적·인지적 사회자본을 통해 사회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⁹⁾

또한 사회자본은 그 집단의 형태와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 혹은 개방성을 기준으로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¹⁰⁾ 서로 다른 인종·연령·지위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연결하며 수평적 구조를 형성하는 연계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동질성(homogeneity)을 지닌 특정 사회집단 내부의 사람들만을 연결하며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는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Gittell & Vidal, 1998: 8; Putnam, 2004). 어떠한 유형의 사회자본이 더욱 풍부한지는 사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상당히 분열된 북아일랜드나 보스니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연계형 사회자본은 부족하지만 결속형 사회자본은 부족하지 않다(Nelson, Kaboolian, & Carver, 2003; Putnam, 2004 재인용).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태에 따라 그 외부효과는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이한 집단일수록 혹은 그 집단이 다양한 다른 집단과 연결될수록, 구성원의 개인주의와 위험인식(insecurity)을 감소시키고 이민자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연계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Geys & Murdoch, 2010). 자원봉사단체나 민간단체와 같은 자발적 단체활동은 구성원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부적 신뢰와 상호호혜성을 증진시키며, 이는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퍼져나가 지역사회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Stolle, 2003; Coffe & Geys, 2005: 489 재인용).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공식 단체는 구성원간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구성원간 활발한 의

9)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와 다양한 측면의 신뢰, 상호호혜성 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구조적 사회자본과 인지적 사회자본을 함께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10) 서로 다른 집단 혹은 지위를 지닌 사람들간 연결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을 linking social capital로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계형 사회자본과 상당히 유사하며 구별의 실익이 없기에 연계형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Szreter & Woolcock, 2004).

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며(Newton, 1997).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자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Putnam, Leonardi, & Nanetti, 1993: 290-296).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자본의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Putnam, 2000). 특히 결속형 사회자본에서 그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구성원간 동질성(inward-looking)을 강조한 나머지 지역주의, 외부구성원에 대한 배타성과 불신 등의 특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갱조직, 종교적 근본주의자, 우익극단주의자, 마피아 등은 내부 구성원간의 결속력과 응집력은 강하지만 외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조장하여 구성원에게는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Newton, 1999; Stolle & Rochon, 1998; 유재원, 2000: 37 재인용).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지역이나 학연에 기반한 연고주의 현상 혹은 조선시대 이후 이어지고 있는 출세와 성공지향의 강력한 문화정서적 경향(송재룡, 2008)으로 인해 연계형 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출세지향주의 문화나 개인과 집단간 동질적 속성만 강조된다면 사회자본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약화되거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박태정, 2010; 정재기, 2007). 다만 혈연·지연·학연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연고집단은 과거의 고유한 특성(혈연, 동일한 시기 동일한 지역의 교육)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연고집단에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는 폐쇄적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집단을 유지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인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기에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 형성될 수 있어도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류석춘 외, 2008a).

또한 한국의 시민단체는 그 성취지향적 특성과 유교주의 배경으로 인하여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서 내부적으로 수직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외부적으로 긍정적 과급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내 다양한 집단¹¹⁾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결망의 형태와 속성, 신뢰와 호혜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시민단체는 아파트 입주민회와 더불어 연결망의 강도, 신뢰의 수준, 호혜성의 규범에 있어 비교적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바 있다(정병은·장미혜, 2008). 시민단체 회원들은 해당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 개인간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고 호혜성 역시 인력시장 구성원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난 것이다(정병은·장미혜, 2008).

3) 사회자본과 성·연령별 자살률

사회자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그리고 집단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Kawachi & Berkman, 2001; Ferlander, 2007; 김형용, 2010 등). 다만 자살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연구결과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거의 없으며, 대신 자살행동이 자살생각·계획·시도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는 점(Beck, Kovacs, & Weissman, 1979; Kessler, Borges, & Walters, 1999)에 기반하여, 사회자본이 이러한 자살 전의 상태 혹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자본 논의에서 주요 개념으로 강조하는 네트워크, 즉 사회적 관계(social tie)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¹²⁾ 예를 들어,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

11)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입주민회, 인력시장 등

12)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Cohen과 Wills(1985)의 연구에 기반하여 주영향모형(main effect model)과 스트레스대처모형(stress buffering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만 사회적 관계(social ties)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반면 전자는 스트레스 상황과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 발생하여도 풍부한 사회자본은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Schutt, Meschede, & Rierdan, 1994; De Silva et al., 2007; 하미옥 외, 2013). 따라서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의 주민들은 불면증, 걱정, 외로움,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 경험할 것이다(Putnam, 2000: 331-335). 이외에도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지역내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부여하여 건강에 유익한 행태를 증대시키며, 지역 사회의 무질서를 감소시켜 살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방식으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Berkman et al., 2000; Islam et al., 2008: 37). 이 때문에 다른 건강행태에 비해 개인의 '고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행위인 자살에 대한 사회자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관계(social tie) 속에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촉진되거나 혹은 저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규명해낼 필요성은 더욱 크다.

특히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이 자살률을 낮추지 않는다는 반론도 존재하는데, 집합적 수준의 사회자본이 자살충동 혹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무관하며 개인의 상황 혹은 특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Blakely et al., 2006; 신상진·조영태, 2007). 또한 사회자본의 개념적 불명확성, 측정의 불명료성 등으로 인해, 사회자본 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론 역시 존재한다(Sobel, 2002; Fine, 2001 등). 사회자본이 지니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은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계형 사회자본과 결속형 사회자본이 긍정

Kawachi & Berkman, 2001: 459 재인용). 즉, 두 모형 모두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가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을 함께 지니므로 사회자본의 각 측면이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질적 구성원을 지닌 결속형 사회자본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간 형성된 연계형 사회자본에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사람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지니기에 자살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부터 우울증과 같은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생활에 중요한 취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회가 확장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자살위험을 낮출 수 있다. 관련하여 빈곤지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형성하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자살위험을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Kushner & Sterk, 2005). 또한 빈곤지역에서 연계형 사회자본은 정신스트레스를 낮추는 반면 결속형 사회자본의 강화는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Mitchell & LaGory, 2002).

이외에도 사회자본은 성별(남성과 여성), 연령(청년층과 노년층) 등과 같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줄 것이다(Kawachi & Berkman, 2001).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성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으려하기 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는 경향이 높아 그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는 사회자본의 유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동창회나 향우회와 같은 연고집단이나 직업과 관련된 단체, 정치단체, 사회단체 등의 참여가 활발하며, 여성은 이러한 공식단체 활동보다는 친구나 이웃 등의 비공식단체 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편이다(Norris & Inglehart, 2006).

또한 노년층일수록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청년층은 새로

운 가정을 구성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지니는 반면, 노년층은 직업상실, 친구 및 배우자의 사별,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점점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층은 지역내 모임이나 사회적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Glass & Balfour, 2003). 사회자본의 유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노년층은 주로 개인적 친목모임을 가지며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정치단체 등에 참여하는 비율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통계청, 2011b: 35). 따라서 지역내 사회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강하다면, 가족 혹은 친지와 같은 일차집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특히 확장된 사회적 지지망으로서 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예술활동과 자살률

1) 문화예술활동과 정신건강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의 향유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Staricoff & England, 2004). 이 때문에 음악·미술·춤 등 여러 방식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가 널리 실시되고 있다. 굳이 치료를 위해 집중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나아질 수 있다. 즉, 문화예술은 직간접적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을 자주 즐기는 사람일수록 장수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문화예술의 효과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사회적 관계, 장기질병, 흡연, 운동 등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였다(Bygren, Konlaan, & Johansson, 1996; Konlaan, Bygren, & Johansson, 2000).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Michalos & Kahlke, 2010). 이러한 문화예술의 효

과는 여러 무작위실험을 통해서도 그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스웨덴에서는 두 달 동안 매주 영화, 콘서트, 전시회, 합창 등 각각의 문화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 건강과 사회적 활동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Bygren et al., 2009). 미술작품을 접한 노인들 역시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정신건강(행복감, 평온함, 만족감)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향상되었다(Wikström, Theorell, & Sandström, 1993).

또한 문화예술활동은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체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함께 즐기기 위하여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독서, 음악감상, 미술관 방문 등을 통해 문화예술서비스를 향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을 취하던지 문화예술활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은 사회적 소속감(a sense of belonging to that community)을 증진시켜 지역사회 주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문예예술회관에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public attendance)은 단체에 가입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특히 개인 공간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활동은 지역사회의 가치나 소속감을 인식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러한 활동을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속감을 인식할 것이다(Kwak et al., 2004: 654). 구체적으로, 도서관 방문, 전시회 관람 등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은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과 같은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며 일반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지닌다(Kwak et al., 2004). 즉, 지역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도서관, 문화원 등의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 소속감, 연대, 자부심 등을 느끼게 되며(Berkowitz, 1996) 이는 결국 주민 건강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

해 신뢰도가 높고 진보적 성향을 지니며 다른 문화에 개방적이며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DiMaggio, 1996), 문화예술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문화예술활동과 성·연령별 자살률

문화예술활동이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지닌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 없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수를 포함하고 있어 문화예술활동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문화예술활동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이다.

단지 대중음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컨트리 음악과 자살률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nipes & Maguire, 1995; Stack, Gundlach, & Reeves, 1994). 10대 후반(14-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헤비메탈과 찬송가에 대한 선호는 다른 변수(가족관계, 복용약물, 사회적 태도 등)를 통제하였을 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Lacourse, Claes, & Villeneuve, 2001).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중음악의 가사내용이 지닌 영향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 문화예술기반시설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이 때때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지역 수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Chapple & Jackson, 2010: 484).

더불어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성별(남성과 여성), 연령(청년층과 노년층) 등과 같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문화예술활동을 선호하며 적극적으로 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하용삼·문재원, 2011). 또한 지역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설·소득·시간 등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자원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청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시간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들이 문화예술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최저생활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은 그의 자살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데(박재영 외, 2008),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노인자살률도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수준의 노인복지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이소정, 2010). 또한 사회계층에 따라서도 자살사망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직업 및 학력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였을 때 낮은 계층에 속할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홍성철 외, 2003). 성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적 곤궁함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대한 스트레스를 더욱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할 위험이 더욱 높을 것이며 그만큼 정부의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스트레스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지지망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것

이다. 물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원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김효창, 2006). 스트레스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유발상황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고, 문제가 심각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하며,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해야 하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해야 한다(김효창, 2006: 18). 즉,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이를 오랜 기간 노력하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스트레스원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정부가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직업상담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을 보장하거나 일시적인 주거시설(부랑인시설, 모자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면 최소한의 지지망으로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은 시장기반 경제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강조되기도 한다. 린드블롬(1977: 82)은 시장경제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이 계속 제기되며 특히 생계비조차 별기 힘든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언급한바 있다(Flavin & Radcliff, 2009: 198 재인용). 따라서 시장경제에 기반한 사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황을 일부 해소하거나 혹은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Flavin & Radcliff, 2009: 198). 게다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선호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민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적 공정성(fairness)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결국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Minoiu & Andres, 2008: 239).

특히 사회복지지출은 앞서 살펴본 사회자본이나 문화예술활동에 비해서는 물질적 측면에 초점을 둔 방안이지만, 사회복지지출 또한 주민들이 지닐 수 있는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심리적 측면도 일부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정부지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한 연구는 상당수 존재(Lynch, Smith, Kaplan, & House, 2000) 하나 정부지출과 자살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유럽 각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Yur'yev et al., 2011), 미국 주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지출이 높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Flavin & Radcliff, 2009; Minoiu & Andres, 2008; Zimmerman, 2002). 또한 미국에서는 1930년 이후 5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노인자살률이 1980년대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를 레이건 정부의 사회복지프로그램 감소로 인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McIntosh, 1992; 1995; 김형수, 2002 재인용).

반면 로스 외(Ross et al.)의 연구에서는 미국 주정부의 정신보건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여도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Ross et al., 2010). 일부 국가수준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과의 역의 관계는 이탈리아(Preti & Miotto, 1999)와 폴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나타났다(Yur'yev et al., 2011). 반면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자살률과 사회복지지출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박유진·김명희·권순만·신영진, 2009). 이렇듯 상이한 분석결과는 국가간 비교에 있어, 국가별 복지제도와 역사, 문화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질성을 지니기 때문에 역의 관계가 나타났거나 무관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박유진 외, 2009: 127).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수준의 특성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것으로 통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이 지역 자살률과 부정적 관계를 지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5절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한 사회의 병리적 측면을 반영하는 자살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 두 가지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역내 자살률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측면(성역할·인종·언론·음주량 등), 경제적 측면(절대 소득·소득불평등·사회계층·실업 등), 사회통합 측면(가족·종교·지역사회 등), 사회발전 측면(산업화·도시화·교육 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Stack, 2000a; 2000b).

이에 아래에서는 자살률과 관련하여 통제변수로서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사회통합 수준 등의 요인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만 푸트남은 결혼, 이혼, 자녀출산 등과 같은 가족관계 역시 사회자본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지만, 가족관계는 혈연에 기반한 관계로서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social tie)와는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자본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가족관계는 사회자본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 출산율 등은 개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현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혼, 출산 등과 같은 사회규범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자살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경제적 수준의 대표적 지표인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으면, 힘겨운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지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생활환경 역시 좋을 것이다(Burr et al., 1994). 그렇기에 스웨덴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총생산(GDP)로 대표되는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상당수 존재한다.

둘째, 사회통합 수준은 뒤르케임의 논의부터 오랫동안 자살률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사회통합 수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사회통합 수준이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과 애착(affiliation)과 같이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고(Berkman, et al. 2000), 실제 그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어왔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이론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혼율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 규범이 약화되고 사회의 기본인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자살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Kposowa, 2003). 스웨덴 등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이혼율이 지목되고 있다(Helliwell, 2007).

더불어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지역내 산업구조가 농림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벗어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가족구성원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지내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족간 유대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유교주의를 문화적 배경으로 하는 한국 사회는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이 수행해오던 가장 기본적인 보호기능, 가족주의적 문화·정서 및 언어 자원에 기반하여 구성원을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배려하며 위안하던 기능이 약화되었다(송재룡, 2008: 148). 이러한 가족의 유사상담체적 기능이 쇠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가족을 벗어난 사회집단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송재룡, 2008: 149),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국가간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

시에 거주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 서로 알고지내는 일이 낮아져 사회내 연결이 낮아지며, 아예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온 타국적 혹은 타인종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회내 동질감이 낮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사회통합 수준을 약화시켜 자살 가능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역 사회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를 반영함으로써 자살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는 현대화 혹은 도시화를 반영하는 대리지표로 활용되는데,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일 자리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 등을 찾아 도시로 모여드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사회통합수준이 약화되어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Burr et al., 1994). 하지만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inoiu & Rodriguez, 2008; Hooghe & Vanhoutte, 2011). 이는 지역사회의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으로 인해 자살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Kunze & Anderson, 2002; Siahpush & Singh,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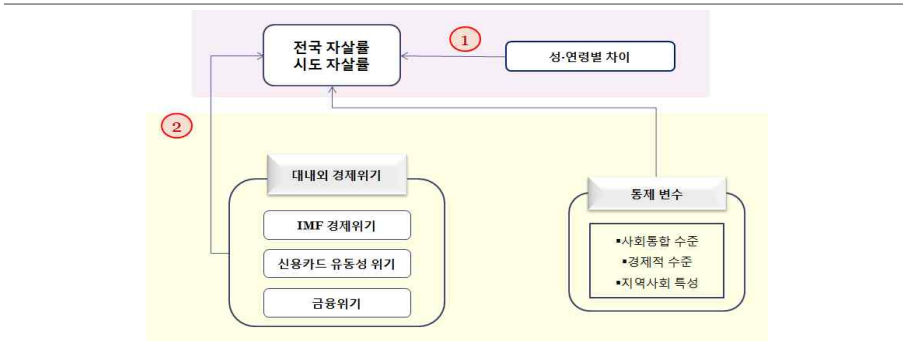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위험이 커지는 만큼 지역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동년배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제6절 개념적 준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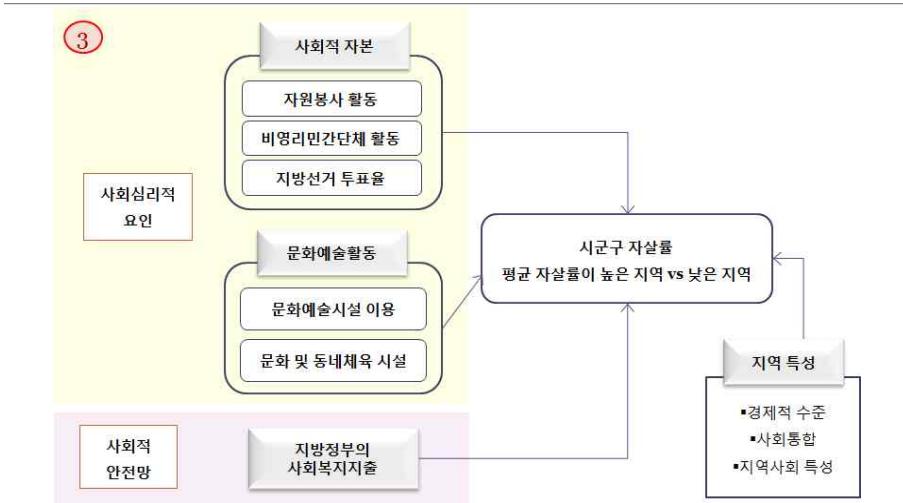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은 아래 그림과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자살률의 성·연령별 집단에 있어 전반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자본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향에 따라 자살률이 낮아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후 평균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 사회전반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1)



<그림 2-2> 연구의 분석틀(2)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성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미친 충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내외적 경제위기(1997년 IMF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구분하여, 경제위기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위기 이후 심각해진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개별 지역사회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역량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지출에 주목하여, 이들 요인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2절 분석방법

1. 성·연령별 자살률의 비교 분석

1) 성별 자살률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다. 그렇기에 전체 자살률을 척도로 개별 사회의 자살률을 비교한다면 지역별 남성과 여성의 비중에 따른 자살률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자살률 이외에도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의 자살률과 남성의 자살률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자살률과 연령표준화 자살률

개인의 자살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집단 혹은 사회적 단위의 자살률을 분석할 때는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기반하여 자살자 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사회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민이 많을수록 자살자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먼저 자살이 이루어지는 개별 단위로서 주민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집단 혹은 사회의 전체 인구 대비 자살자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조자살률이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살 혹은 자살률을 분석할 때는 성·연령에 따른 격차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인구비율로 계산되는 조자살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 자살이 여성 자살보다 더 많고 노년층의 자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다. 따라서 그 사회의 인구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자살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조자살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노년층이 많은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자살자수와 적은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자살자수를 단순히 비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별 인구구조를 통제한 비교지표로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연령표준화 자살률의 산출

인구학에서는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 사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표준화(direct standardization) 방식과 간접표준화(indirect standardiz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연령 구조의 영향을 통제한 사망률을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다(Preston, Heuvelin, & Guillot, 2001).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표준화 자살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직접표준화 방식을 활용하여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계산하여 인구구

조가 다른 시군구 간 자살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인구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령구간은 통계청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0세부터 5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0-4세, 0-5세, ..., 85세 이상의 17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자살률 역시 여러 요인에 의해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령과 함께 성별을 구분하여 성별·연령별 표준화자살률(이하 표준화자살률)을 각각 계산하여, 전체/남성/여성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식 3-1> 표준화 자살률 공식

$$\text{표준화 자살률} = \frac{\sum(\text{성별연령별 자살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text{성별연령별 표준인구}}$$

주1: 15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표준화 자살률을 계산함

주2: 성별연령별 자살률은 인구100,000명 기준으로 계산함

주3: 표준인구는 “2005년 전국인구(주민등록 연앙인구)”를 사용함

주4: 연앙인구(mid-year population)는 각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연말 및 연초 인구와 비교하여 그 해의 인구를 가장 잘 대표하는 특성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당해 연도 연앙인구 산출을 위해 전년도 주민등록인구 및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를 산술평균하여 작성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¹³⁾

2. 고정효과분석

1) 패널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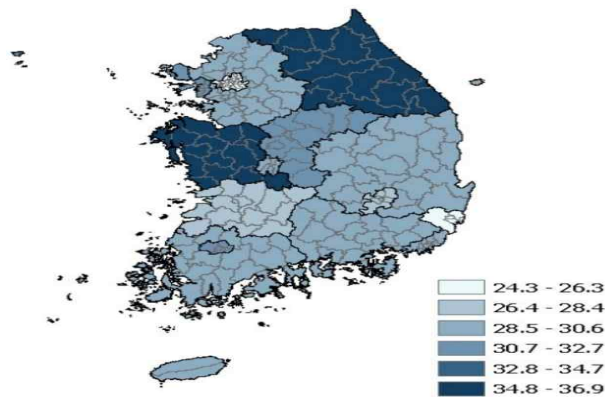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료는 패널자료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패널회

13)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주민등록인구 자료에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통계청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한 연앙인구를 계산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계산한 표준화 자살률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표준화 자살률과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다.

귀분석 중 시간 및 지역을 고정한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자료가 지닌 장점을 적극 활용하였다.¹⁴⁾ 특히 자료를 수집의 한계로 인해 미처 분석모형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변수(omitted variable)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고정효과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패널 분석에 앞서 Hausman검정을 실시한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별 미관측된 이질성과 설명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 경우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다면 추정치들은 편의(bias)를 지니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게다가 아래 그림에서 충청남도 및 강원도의 자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1>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지도



자료: 통계청(2011a: 24)

이처럼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분석단위의

14)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에는 고정효과 모형과 함께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가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패널분석에서 오차항이 확률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한 고정효과(fixed effect)분석을 실시하였다(노용환, 2006; Kuncze & Anderson, 2002).

개별적 특이성(individual heterogeneity)과 시간특성(time effect)을 통제하여 모형에서 관찰되지 않는 누락변수(unobservable omitted variable)로 인한 편의를 통제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와 같이 집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aggregate analysis)은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분석대상 선정에 있어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감안한 분석이 가능하다(Barstad, 2008: 51; Norstrom & Skog, 2001).

본 연구는 사회문화자본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을 위해 아래 분석모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수식 3-2>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분석 모형

$$\begin{aligned}
 Y_{it} = & \alpha + \beta_1 \ln(\text{Volgroup})_{it} + \beta_2 \ln(\text{Volmem})_{it} + \beta_3 \ln(\text{Nprofit})_{it} \\
 & + \beta_4 \ln(\text{Artsuser})_{it} + \beta_5 \ln(\text{Artsfacil})_{it} + \beta_6 \ln(\text{Comsports})_{it} \\
 & + \gamma_1 \text{welfare} + \gamma_2 \text{lag}(\text{welfare}) + \gamma_3 \text{Poverty} \\
 & + \delta_1 \text{Carrate}_{it} + \delta_2 \ln(\text{pceconoutput})_{it} \\
 & + \eta_1 \text{Divorce}_{it} + \eta_2 \text{Birth}_{it} + \eta_3 \text{Mobility} + \eta_4 \ln(\text{Foreign})_{it} \\
 & + \eta_5 \text{Industrialization}_{it} + \eta_6 \text{Urban}_{it} + \eta_7 \text{Density}_{it} + \theta_8 \text{Elderly} \\
 & + u_i + e_{it}
 \end{aligned}$$

- Y : 성별·연령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 **사회문화자본**: 자원봉사단체비율(Volgroup), 자원봉사단체회원비율(Volmem), 비영리단체비율(Nprofit), 문화시설이용자비율(Artsuser), 문화시설비율(Artsfacil), 동네체육시설비율(Comsprts), 이외 분석모형에 따라 지방선거투표율, 분야별 사회단체참여율을 추가하였음
- **사회복지지출**(welfare): 사회복지지출예산비중, 1인당사회복지지출액, 기초생활수급자비율(Poverty)
- **경제적 특성**: 자동차보유율(Carrate), 1인당광업제조업생산액(pceconoutput)
- **사회통합수준**: 조이혼율(Divorce), 조출생률(Birth), 안구이동율(Mobility), 외국인비율(Foreign), 산업화수준(Industrialization), 도시화수준(Urban), 인구밀도(Density)
- **지역사회 특성**: 전체·남성·여성 노인인구비율(Elderly)
- i : 232개 기초자치단체, t : 2003년-2010년

2) 자기상관을 고려한 고정효과분석

다만 시도 지역별 자살률은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¹⁵⁾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살률을 분석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보다 집합적 수준의 자살률이므로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살률에 대한 분석은 각 변수에 대해 Cochrane-Orcutt변환을 수행한 이후 고정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09: 200-202).

<수식 3-3>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 모형

$$\begin{aligned}
 Y_{it} = & \alpha + \beta_1 Crisis1 + \beta_2 Crisis2 + \beta_3 Crisis3 + \beta_4 time \\
 & + \gamma_1 \ln(PCGRDP)_{it} + \gamma_2 Unemployment_{it} + \gamma_3 Industrialization_{it} \\
 & + \delta_1 Divorce_{it} + \delta_2 Birth_{it} + \delta_3 Fparticipation_{it} + \delta_4 Hsize_{it} \\
 & + \eta_1 Old_{it} + \eta_2 \ln(Poverty)_{it} + u_i + \rho e_{it-1} + \nu_{it}
 \end{aligned}$$

- Y : 성별·연령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 Crisis : 경제위기 연도 더미 (1: 외환위기, 2: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3: 금융위기)
- time : 1~20의 연속형 시간변수
- **경제적 특성**: 1인당 지역내총생산(PCGRDP), 실업률(Unemployment), 산업화수준 (Industrialization)
- **사회통합수준**: 조이혼율(Divorce), 조출생률(Birth), 여성경제활동참가율(Fparticipation), 세대규모 (Hsize)
- **지역사회 특성**: 전체·남성·여성 노인인구비율(Old), 기초생활수급자비율(Poverty)
- i : 15개 시도, t : 1992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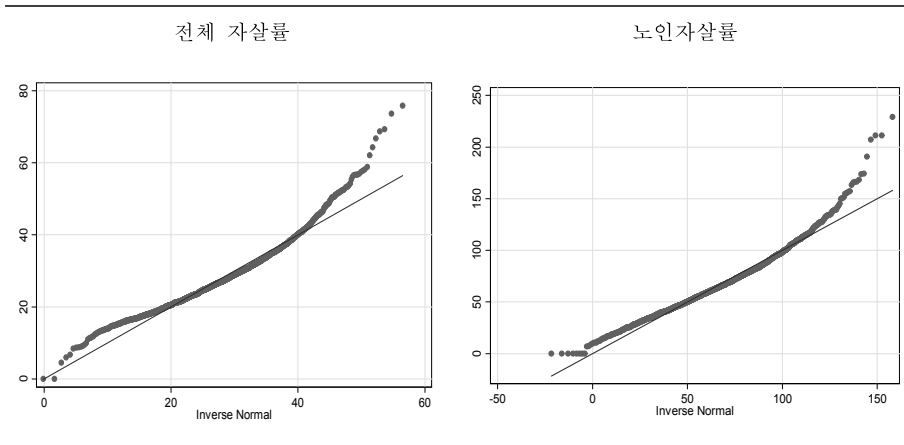
3. 지역 사례 비교

한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평균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의 적절성을 추가적으로 확인

15) 가까운 사람 중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확률이 높아지는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어 (이민아·김석호·박재현·심은정, 2010), 자살자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기 위하여 평균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의 자살률 및 관련 변수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림 3-2> 전체 자살률 및 노인 전체 자살률의 분포



특히 전체 자살률 및 노인 전체 자살률의 정규 분포여부를 살펴보면,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 자살률이 낮은 지역은 완만히 낮아지거나 아예 자살자가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즉, 양 극단에 존재하는 지역은 전반적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자살률이 낮은 지역을 선정한 이후, 이들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3절 변수의 측정 및 분석자료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활용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 자살사망자를 망라하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와 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가 존재한다.

경찰청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수사대상으로서

타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살자가 분류되어 자살사망자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특히 범죄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의 정황, 유서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개별 자살사건의 자살사유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자살사유는 2008년 이전까지는 경찰청에서 수립한 기준으로 분류되었고 2009년부터 국제손상외인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다만 경찰청의 자료는 미시자료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한 실증분석논문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는 국내외 국민이 사망할 경우 가족 등의 신고의무자가 의사의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사망신고서를 시·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수집되고 있다. 이후 이를 시·도에서 취합하고 통계청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에 맞도록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¹⁶⁾ 또한 이는 원시자료로 외부에 공개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이외 자살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구하기 쉽지 않다. 자살시도가 성공하였다면 이미 사망하였기에 더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유가족에 대한 인터뷰 역시 자살이라는 방식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성사되기 힘들다.¹⁸⁾ 이에 자살시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살 이전의 상황과 그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박지영, 2007; 임미영, 2010; 김현경, 2010 등).¹⁹⁾ 이외 설문조사를 통해 자살에 대한 생각 혹은 인식을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일부 자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 뿐만 아니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실제 자살사망자들과는 동일하다고 보기는

16) 특히 통계청은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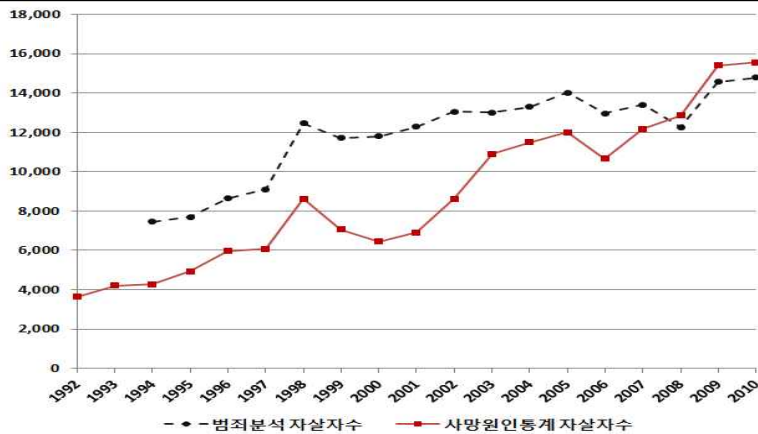
17)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범죄분석의 자살자수가 사망원인통계의 자살자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자료의 수집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최근에는 기관간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 국제표준질병코드 중 ‘고의적 자해(X600-X849)’로 사망한 사람들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청 자료는 특히 전국 사망자를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장기간 일관되게 수집되어 분석자료로서 신뢰성이 높다. 또한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보건기구(WHO)에 보고되는 자료 역시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외 지역별 자살률을 계산하기 위한 연앙인구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계산하기 위한 표준인구로는 통계청과 동일하게 2005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사용하였다.

<그림 3-3> 1992-2010년 범죄분석 및 사망원인통계의 자살자수



자료: 경찰청 범죄분석,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18) 다만 최근에는 심리학적 부검 방식을 활용하여 자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살상황을 파악하고 유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 19) 노인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임미영(2010)의 연구는 총15명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시도자를 인터뷰하고 최종적으로 4명의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경험을 분석하였고, 박지영(2006)의 연구 역시 동일하게 65세 이상 노인 자살시도자 4명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반면 김현경(2010)은 23-46세 성인남녀 7명의 반복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분석하였다.

2.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

1) 분석단위: 광역자치단체

한국 사회가 경험한 외환위기,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금융위기라는 세 번의 경제위기와 자살률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포함한 장기간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외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특히 경제적 부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1인당 지역총생산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본 연구의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²⁰⁾

2) 성별 전체연령 자살률과 청년층·장년층·노년층 자살률

개별 시도의 전체연령 자살률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더불어 청년층·장년층·노년층의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각 연령집단별로 전체·남성·여성의 자살률을 산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자살률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가 이들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최소 연령인 15세부터 사회생활의 초반기에 해당하는 34세까지는 청년층으로, 일정 기간 사회생활을 영위하였고 가족을 구성하여 생계부담이 가중되는 35-64세는 장년층으로, 65세이상 인구는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15세 미만은 아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층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로부터 받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20) 1992년~1996년 자살자 자료에는 주소가 시도 수준까지만 기록된 자살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시도 수준의 분석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97년을 기점으로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당시 충청남도)가 신설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제외하였으며, 1997년 이전에는 경상남도(당시 경상남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노용환, 2006).

별로 분석하지 않았다.

3) 대내외 경제위기의 구분

본 연구는 1990년대 이래 발생한 경제위기로서, 대외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IMF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와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유동성위기를 각각 구분하였다.²¹⁾ 이는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한국에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제위기인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외환위기 기간은 1998년부터 1999년으로 설정하였다(Chang et al., 2009). 당시 전국 실업률은 1998년 7%, 1999년 6.3%라는 높은 수치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4.1%로 낮아지면서 안정화되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1998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조원이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00년부터 다시금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2000년부터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시기적으로 두 번째로 발생한 경제위기인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2002년 하반기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한 이후, 2003년부터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면서 부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04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그 여파가 2005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세 번째 경제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는 2009년으로 설정하였다. 미국의 과도한 주택 담보 대출에서 비롯된

21) 경제위기(economic crisis)는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자율·실업률 등이 크게 증가하거나 국내총생산이 크게 감소한 시기를 의미한다(Chang et al., 2009; Ruhm, 2000: 617). 본 연구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이러한 수치적 기준에 기반한 경제위기(예: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한국사회의 금융부문에서 시작되어 경제부문에서 상당한 위기로 간주되었던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기간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Lehman Brothers)사가 파산하면서 그 충격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었고, 한국 역시 수출감소, 환율급등 등으로 인한 국내총생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기업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강화되었기에 상대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파장은 단기적 충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김봉근·윤상철, 2010).

4) 통제변수의 측정

이러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위기 더미와 함께 연속형 시간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자살률의 추세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경제적 특성으로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실업률·산업화수준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노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역내 인구구조를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 노인인구비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외 조이혼율, 조출생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세대규모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며 이는 성별·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3-1> 시도 단위 주요 변수의 측정 및 자료

| 변수 | 척도 | 자료 출처 |
|-----------------|---|----------------------|
| 경제적 특성 | | |
| 1인당 GRDP | 지역내총생산 (2005년 기준가격) | 지역소득 |
|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15세이상인구 및 구직기간 1주 기준) | 경제활동인구조사 |
| 산업화수준 | (100-전체취업자중 농림어업종사원 비율) | |
| 사회통합 수준 | | |
| 조이혼율 | 시도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 | 인구동향조사 |
| 조출생률 | 시도 인구 천 명당 출생인구수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전체경제활동인구)×100 | 경제활동인구조사 |
| 세대규모 | 시도 인구수/주민등록세대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
| 지역 사회 특성 | | |
| 노인인구비율 | 시도 인구 천 명당 전체·남성·여성 65세이상 인구수 | |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시도 인구 천 명당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대상자수 |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 |

주: 인구대비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인구수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를 평균한 연앙인구임

3.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분석

1) 분석단위: 기초자치단체

한국의 시군구 단위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동네(neighborhood)의 범위보다는 크지만(곽현근, 2008), 분석자료를 구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여러 기존 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김형용, 2009; 유정균, 2008 등). 물론 지역사회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소속감을 지니는 동네(neighborhood)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별도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를 기준으로 한 분석

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최소 자치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분석단위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232개²²⁾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

2) 전체연령 자살률과 노년층 자살률

각 지역사회의 전체연령 자살률 및 노년층(65세 이상)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각각 전체·남성·여성 자살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 및 연령에 따라 자살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연령별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이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사회자본의 측정

사회자본은 사회내 구성원들간 직접적인 만남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얼마나 빈번히 그들의 가족과 혹은 친구, 이웃, 동료와 만나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에 기존 연구는 개별 사회의 단체활동수준, 즉 단체의 수, 단체회원 수 등과 같이 보다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단순한 일회적 만남이 아닌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사람들간 만남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을 반영하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회원,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사회단체 참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사회자본은 그 측정지표로서 단체

22) 제주특별시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북제주군·남제주군이 통합되었다.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포함되고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포함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전의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자료를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포함하였다.

활동이 어떠한 형태를 지니는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 (Gittell & Vidal, 1998; Putnam, 2004).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체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일수록 그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다양한 단체 중에서 자원봉사단체는 일반적 타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로서(이재혁·박준식, 2000), 상대적으로 구성원에게 관용적 태도를 지니며 사회신뢰도 높은 단체이다(유재원, 2000).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공식 단체는 구성원간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구성원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며(Newton, 1997).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자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Putnam, Leonardi, & Nanetti, 1993: 290-296). 특히 자원봉사단체나 민간단체와 같은 자발적 단체활동은 구성원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부적 신뢰와 상호호혜성을 증진시키며, 이는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퍼져나가 지역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Stolle, 2003; Coffe & Geys, 2005: 489 재인용). 반면 지역이나 학연에 기반한 친목단체의 활동은 외부에 대한 배타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자원봉사센터 현황」에서 수집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는 2000년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라 여러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중앙부처 및 시도에 법인으로 등록한 자료인데, 지역사회의 단체활동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부처가 아닌 시도에 등록된 단체만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²³⁾ 분야별 사회

23) 두 자료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하는 단체가 일부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아 중복 산정하였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단체 회원이 100명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자원봉사센터의 단체 등록은 이와 같은 제한 사항이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

단체 참여율은 통계청이 2010년 수행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수집하였다.

이외 사회자본의 성과변수이지만 그 대리지표로 빈번히 활용되는 지방선거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4) 문화예술활동의 측정

각 지역별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수준은 시군구별 도서관²⁴⁾·문예회관²⁵⁾의 연간 이용자수, 지역별 문화시설수, 동네체육시설수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은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다양한 무료공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공적 공간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시설이용자수 자료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수집하였는데, 동 자료는 문화기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작성되고 있다.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중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 문화시설수는 광역자치단체별 통계연보에서 수집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수는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에서 수집하였다.

체는 보다 소규모의 봉사단체일 것으로 판단된다.

24) 도서관 이용자 수는 통계작성 기준 연도에 도서관 자료나 시설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또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도서관을 출입한 이용자 수(방문자수)로 산정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a).

25) 문화의 집은 지역문화복지시설로서 지역 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2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꽃꽂이·생활도예·서예·컴퓨터강좌·사진강좌·한문교실·창작동요·중이접기·풍물교실 등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08b: 371).

5) 사회복지지출의 측정

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의 비중 및 주민일인당 사회복지지출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시군구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지역내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사회복지정책 정향)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회계예산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추가로 구성된 특별회계예산과는 달리 사전에 상당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예산항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일인당 사회복지지출액을 통해 정부로부터 주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절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지역내 예산의 전체 규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지역내 복지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수준을 파악하는데 보다 적절한 지표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체계가 2008년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면서 예산항목을 연결하여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2007-2010년 시군구 기준 사회복지지출예산의 비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08년)과 기획예산처의 나라사랑(2007년) 세출구조의 '관'을 기준으로 각 사업분야를 검토한 이후 ①사회복지²⁶⁾, ②보건, ③교육, ④주택으로 분류하고 예산자료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다(고경환 외, 2009:96-97). 사회복지재정DB를 통해 현재 2007년-2010년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동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 두 지표와 함께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을 함께 분석하였다. 국민기초생활급여(구 생활보

26) 사회복지 항목에는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공적연금·보육·가족및여성·노인·청소년·노동·보훈, 그리고 사회복지일반이 포함되어 있다(고경환 외, 2009).

호제도)는 저소득이 생계·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 분야에서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 제도와는 달리 IMF 이후 급증한 빈곤층을 위해 강화된 제도로서 의의를 지니지만, 그 지원 수준이 부족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수급자 자격기준이 높아 일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금액 역시 많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박유진·김명희·권순만·신영전, 2009).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있다(김민영 외,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부문의 구체적 제도 중 하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역사회 내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6) 통제변수의 측정

이외에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이혼율, 출생률, 인구이동률, 외국인비율, 도시화수준, 인구밀도 등을 통제하였으며 이는 인구동향조사·주민등록통계·시도통계연보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외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으로서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대리 지표로서 자동차보유비율, 1인당광업제조업생산액²⁷⁾, 산업화수준,

27)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서울특별시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어 대신 광업제조업생산액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등과 함께 지역사회의 특성으로서 노인인구비율 등을 통제하였다.

<표 3-2> 시군구 단위 주요 변수의 측정 및 자료

| 변수 | 측정 | 자료 |
|---------------|---|----------------------------|
| 사회자본 | | |
| 자원봉사단체 비율 |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원봉사단체 수 | 자원봉사센터 현황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자원봉사단체 회원 수 | 자원봉사센터 현황 |
|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시도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 |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 분야별 사회단체 참여율 | 시군구 15세이상 센서스인구 천 명당 분야별 사회단체활동인구 | 인구주택총조사 |
| 지방선거투표율 | 시군구별 지방선거투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문화예술활동 | | |
| 문화시설 이용자 비율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도서관·문예회관 이용자 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상 공립 및 사립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포함) |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 ·국립중앙도서관연보 |
| 문화시설 비율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공연장·영화관·문화원·국악원·전수회관 수 |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 ·시도통계연보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축구·배구·농구·테니스·배드민턴·게이트볼·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구의 마을체육시설 수 | 전국공공체육 시설현황 |
| 사회복지정향 | | |
| 사회복지예산 비율 | ·시군구별 (사회복지지출예산/전체예산) × 100 ·전체예산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타·기금회계 등 전체 세입의 최종예산 | 사회복지재정 DB |
| 1인당 사회복지예산 | ·시군구별 사회복지지출예산 / 인구수 | 사회복지재정 DB |
| 기초생활 수급비율 | 시군구별 인구 천명당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 | 시도통계연보 |
| 경제적 특성 | | |
| 자동차보유비율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자동차수 ·관용차량 제외 | 시도통계연보 |
| 1인당 광업제조업 생산액 | ·시군구별 1인당 광업제조업 생산액 ·생산액은 부가가치와 주요생산비를 합하여 계산함 | 국가통계포털 |

역내 산업의 활성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지역내총생산과 광업제조업생산액의 상관관계는 0.8로 높게 나타났다.

| 사회통합 수준 | | |
|---------|-----------------------------------|--------|
| 조이혼률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 | 인구동향조사 |
| 조출생률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출생아수 | 인구동향조사 |
| 인구이동률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진입·전출 인구 수 | 주민등록통계 |
| 외국인비율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 | 주민등록통계 |
| 산업화수준 | 시군구별 (100-전체취업자 중 농림어업종사자비율) | 사업체조사 |
| 도시화수준 | 군=0, 시·자치구=1 | 시도통계연보 |
| 인구밀도 | 주민등록인구/시군구 토지면적(km ²) | 시도통계연보 |

| 지역사회 특성 | | |
|---------|---------------------------|--------|
| 노인인구비율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전체·남성·여성 인구수 | 주민등록통계 |

주1: 동네체육시설은 마을체육시설(축구장·배구장·농구장·씨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운동광장·베드민턴장·체조장·로울러장·수영장 등의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및 부대편익시설을 포함

주2: 인구대비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인구수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 주민등록인구를 평균한 연앙인구임

4. 지역 사례의 선정

지역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먼저 선정한 이후 해당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시군구)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였다.²⁸⁾

먼저 전체 자살률을 활용하여 각 시군구의 8년 평균 자살률을 계산하여 순위를 산정한 이후, 15개의 상위권 지역을 포함하는 8개 시도에서 최소 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단, 연도별 자살률이 하위권에 속한 적이 있는 지역은 상위권 지역에서 제외하여 총 16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자살률이 낮은 인근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시군구)과 같이 지역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자살률이 높은 대부분의 지역이 행정 구역 기준상 ‘군’에 속하였기 때문에 선정된 32개 지역 중 24개 지역(75%)이 ‘군’지역이었으며, 나머지 8개 지역이 ‘시’지역에 해당하였다.

28) 평균 자살률 상위 및 하위 15개 지역으로 선정된 전체 지역 관련 내용은 <부록 2-1>~<부록 2-4>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3-3> 평균 전체 자살률을 기준으로 선정된 지역

| 구분 | 자살률 높은 지역 | 자살률 낮은 인근 지역 | 차이 |
|------|-----------|--------------|----|
| 경기도 | 양주시(34.0) | 파주시(27.2) | 7 |
| | 안성시(32.0) | 광주시(26.2) | 6 |
| 강원도 | 정선군(45.5) | 평창군(36.4) | 9 |
| | 양양군(44.1) | 인제군(34.3) | 10 |
| 충청북도 | 괴산군(44.5) | 보은군(28.2) | 16 |
| | 진천군(38.3) | 음성군(31.5) | 7 |
| 충청남도 | 청양군(40.9) | 부여군(32.9) | 8 |
| | 공주시(34.7) | 천안시(28.2) | 6 |
| 전라북도 | 김제시(36.7) | 군산시(24.1) | 12 |
| | 임실군(34.9) | 진안군(29.2) | 5 |
| 전라남도 | 강진군(30.1) | 영암군(22.0) | 8 |
| | 보성군(30.0) | 고흥군(23.6) | 7 |
| 경상북도 | 봉화군(33.0) | 울진군(25.1) | 8 |
| | 성주군(29.7) | 고령군(21.9) | 7 |
| 경상남도 | 창녕군(38.2) | 의령군(25.4) | 13 |
| | 합천군(34.4) | 거창군(27.4) | 7 |

주1: 15개의 순위 지역을 포함하는 시도별로 최소 2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인근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시군구)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였음

주2: 괄호 안은 지역별 평균 자살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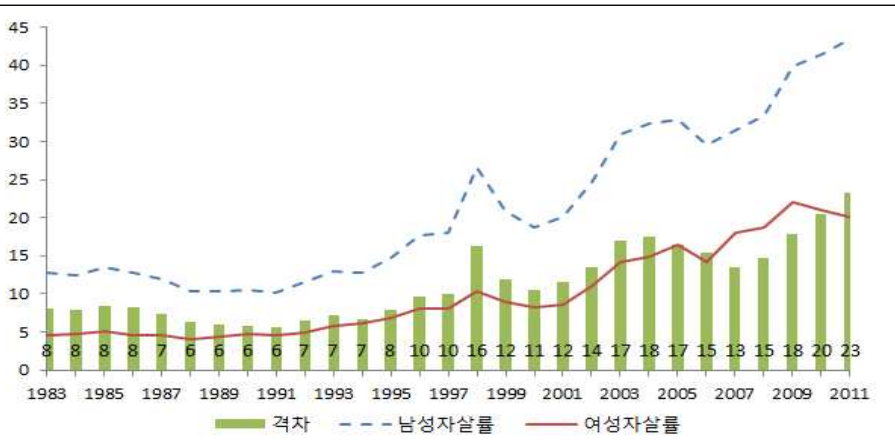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성별 및 연령과 자살률 비교결과

1. 성별 자살률 격차

실제적으로 한국의 성별 자살률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기존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남성 조자살률이 여성 조자살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조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성의 조자살률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성별 조자살률의 격차 역시 커지고 있었다. 1992년 남성 자살률은 11.5명, 여성 자살률은 5명으로 약 6명의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이 경과한 2009년에는 남성 자살률은 39.9명, 여성 자살률은 22.1명으로 양자간 격차가 약 17명으로 크게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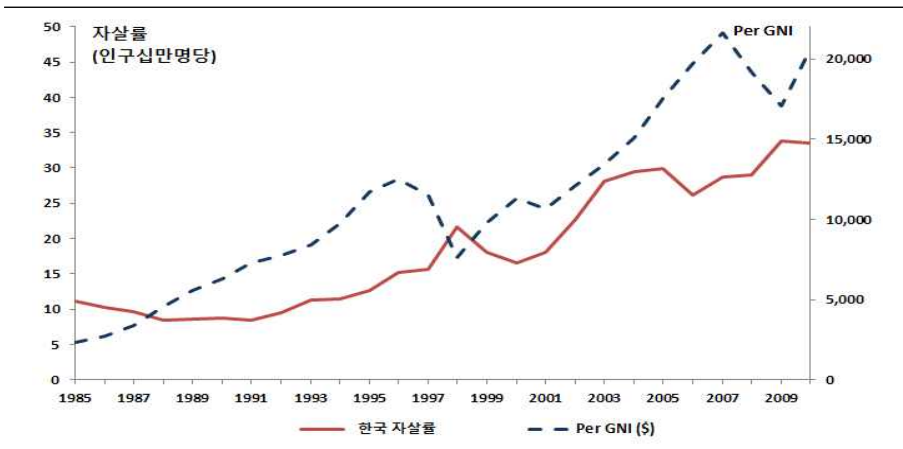
<그림 4-1> 1983-2011 성별 조자살률 격차



자료: 국가통계포털

시기적으로 볼 때,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점에 성별 조자살률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성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아 여성보다 자살률 증가분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커지기 시작하였고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남성의 조자살률이 여성 조자살률보다 16명가량 높았다. 이후 그 격차가 감소하였다가 신용카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양자간 격차가 벌어졌고 2006년을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다가 2009년부터 또다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자살률간 반비례 관계는 아래 <그림 4-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GNI²⁹⁾가 감소한 당해 연도 혹은 직후 연도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2003년경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기간은 대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GNI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민영 외, 2011).

<그림 4-2> 1985-2010 조자살률과 1인당 GNI 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29) Gross National Income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의미하며, 국민총생산(GDP)에 국외 순 수취 요소소득(국외 수취 요소소득-국외 지급 요소소득)을 더하여 만들어진 지표로, 한 국가의 국민이 발생시킨 소득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수치이다.

2. 연령별 자살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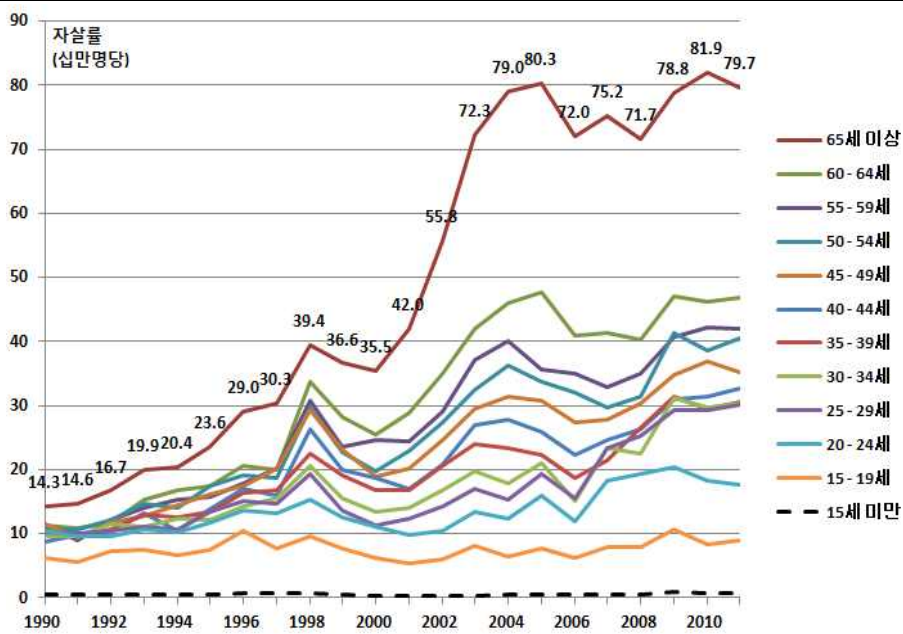
1) 연령별 조자살률

1990년대 이래 조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³⁰⁾,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낮은 수치를 지닌 15세 미만 및 15-19세 연령층의 조자살률은 매년 10명이 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 반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조자살률의 증가폭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조자살률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은 1990년에는 약 14.3명이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79.7명에 도달하였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39.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 초반 그 증가추세가 잠시 약화되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한국 사회의 내부적 사건인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하면서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연간 약70-80명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조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년층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자살률이 증가하였다고 단순히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단지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집단의 자살률을 전체 연령집단과 구분하여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30) 한국 사회 전반에 있어서도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총사망자는 25만7천명, 조사망률(인구10만 명당)은 514명으로 2007년 이래 매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원인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2).

<그림 4-3 > 1990-2011년 전국 연령별 조자살률



자료: 국가통계포털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청소년·청년층(10-29세)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이들 연령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질병 이외의 원인(자살, 운수 사고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의 절대적 수준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2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OECD 평균 자살률(12.9명, 2010년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이미 넘어섰고 그 이후 연령대의 조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률 분석에 있어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자살률 격차 역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4-1> 연령별 2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조사망률(2011년)

| 연령 | 1위 | | | 2위 | | |
|--------|-----------|------|--------|-----------|------|--------|
| | 사망원인 | 구성비 | 사망률 | 사망원인 | 구성비 | 사망률 |
| 1-9세 | 악성신생물(암) | 17.8 | 2.6 | 운수 사고 | 14.2 | 2.1 |
| 10-19세 | 고의적자해(자살) | 26.5 | 5.5 | 운수 사고 | 22.6 | 4.7 |
| 20-29세 | 고의적자해(자살) | 47.2 | 24.3 | 운수 사고 | 15.3 | 7.9 |
| 30-39세 | 고의적자해(자살) | 36.7 | 30.5 | 악성신생물(암) | 18.7 | 15.7 |
| 40-49세 | 악성신생물(암) | 28.1 | 52.7 | 고의적자해(자살) | 18.1 | 34.0 |
| 50-59세 | 악성신생물(암) | 37.6 | 153.5 | 고의적자해(자살) | 10.1 | 41.2 |
| 60-69세 | 악성신생물(암) | 42.3 | 390.9 | 뇌혈관 질환 | 8.5 | 78.1 |
| 70-79세 | 악성신생물(암) | 33.3 | 873.2 | 뇌혈관 질환 | 11.6 | 304.9 |
| 80세이상 | 악성신생물(암) | 16.1 | 1491.1 | 심장 질환 | 12.5 | 1155.9 |

주 1: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주 2: 통계청(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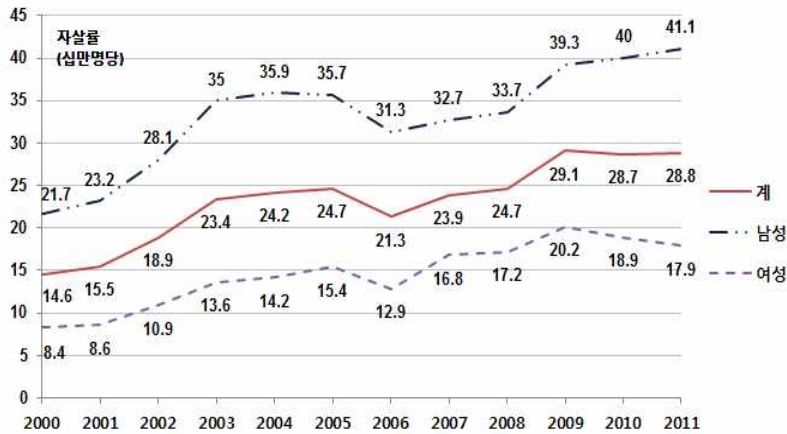
2) 연령표준화 자살률

단순히 국내 인구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조사망률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다른 국가와의 자살률을 국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살펴보아도 전반적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각각 21.7명, 8.4명이었던 남성 및 여성자살률은 십년이 지난 2011년에는 각각 41.1명, 17.9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그 증가폭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남성자살률은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여성자살률은 2009년을 기준으로 미약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3년-2010년 동안에도 전국 자살률은 그 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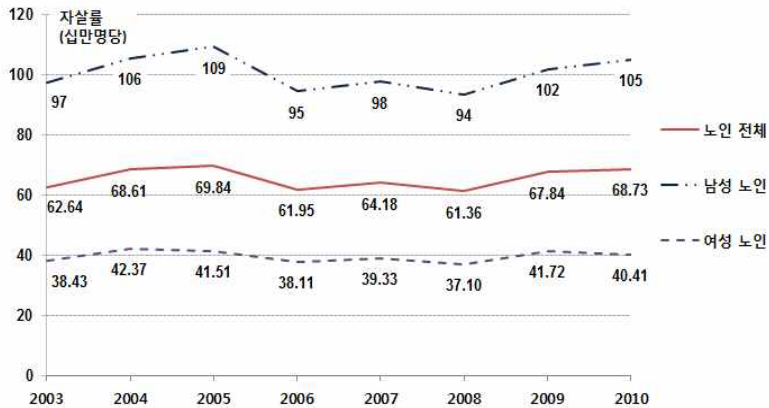
<그림 4-4> 2000-2011년 전국 연령표준화 자살률



자료: 국가통계포털(2013.6.12.)

특히 조자살률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노인 자살률의 규모는 큰 편인데, 한국의 2005년 표준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연령표준화 노인 자살률을 산출하여보면 남성 노인 자살률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03-2010년 동안 전체 노인의 조자살률은 약 72-82명 선이었으나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약 63-69명선으로 조금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노인자살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표준화 노인자살률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여성 노인 자살률은 약 39-41명에 불과한 반면 남성 노인 자살률은 노인인구 십만 명당 약 90-100명이상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성별 기준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을 기준으로 젊은 이에 비해 노인이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아주 높은 수치로서, 한국 사회 내 자살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4-5> 2003-2010년 전국 연령표준화 노인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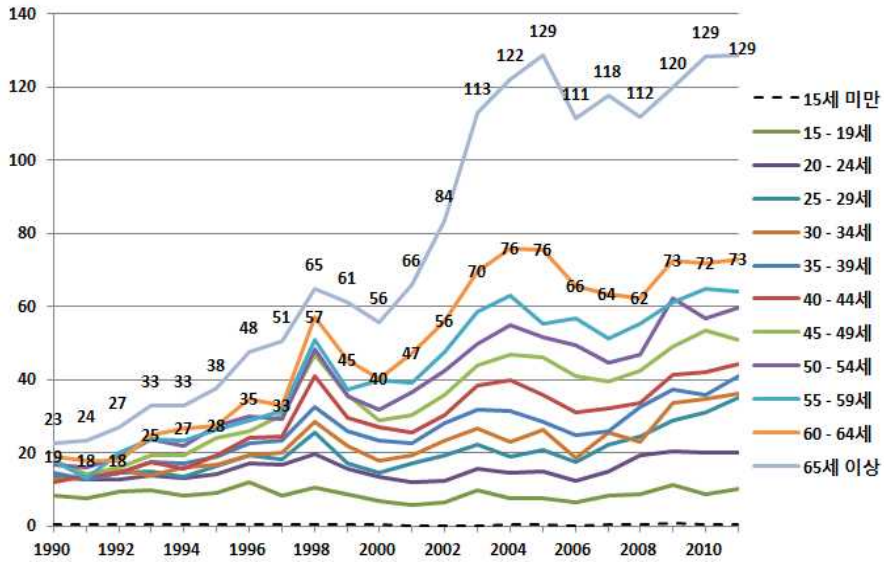
자료: 사망원인통계

3. 성·연령별 자살률 차이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 조자살률을 성·연령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이후, 자살수단과 혼인상태에 따른 성·연령별 자살률 차이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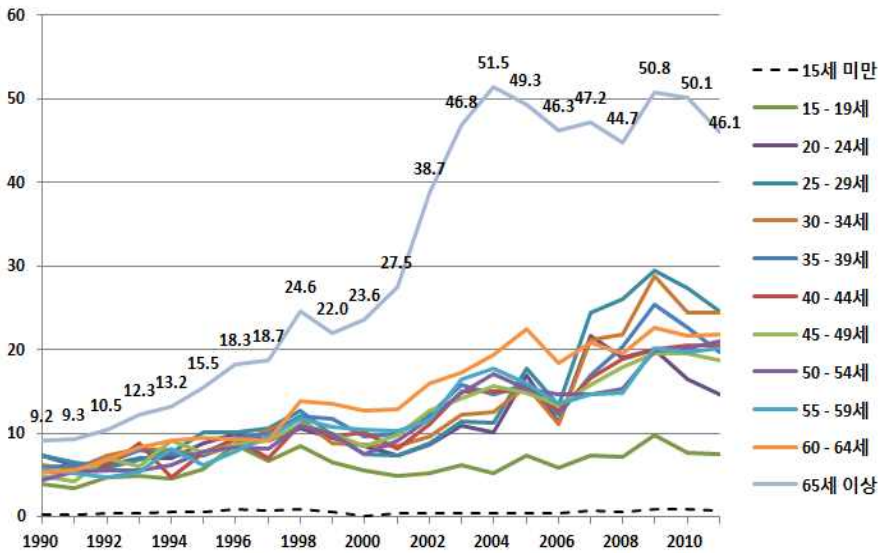
아래 그래프에서 남성 조자살률과 여성 조자살률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남성 조자살률의 증가추세가 전반적인 자살률 증가추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 조자살률의 경우, IMF 외환위기 시기 65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00년 5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부터는 연간 100여명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로 높은 편인데, 2000년 이후 약 30-50명의 연간 조자살률을 보유한 45-49세 남성 조자살률이, 여성 연령별 조자살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여성 조자살률과 비슷한 수준을 지니고 있다. 즉, 전반적인 자살률 증가추세는 남녀를 통틀어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6> 1990-2011년 남성 연령별 조자살률



자료: 통계청

<그림 4-7> 1990-2011년 여성 연령별 조자살률



자료: 통계청

이러한 성·연령별 자살률 격차를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살수단과 이혼여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자.

자살수단에 따른 조자살률은 목매(13.0명), 살충제중독(5.6명), 기타(3.7명), 추락(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충제중독에 의한 조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남성 노년층에서 살충제중독에 의한 자살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살충제에 대한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충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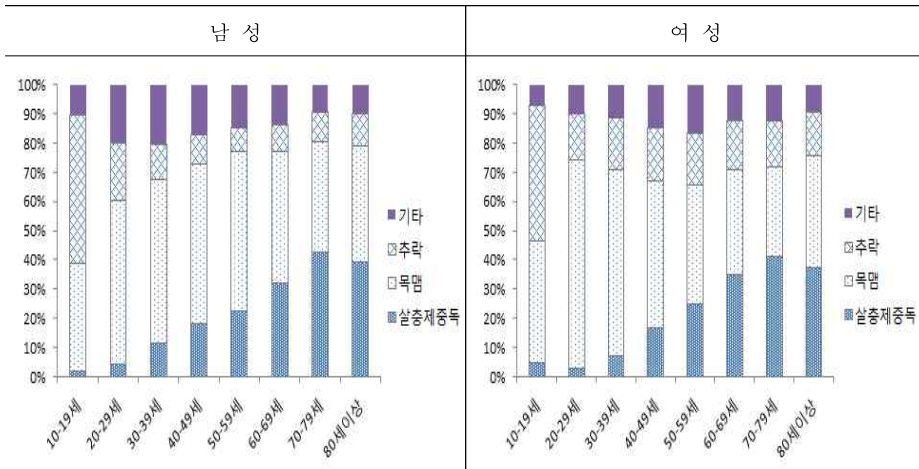
반면 과격한 수단인 추락에 의한 자살은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과격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살충제와 같이 강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락 등으로 자살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보다는 연령대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살충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다른 연령대의 경우, 10대는 추락에 의한 자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후에는 목매에 의한 자살 비중이 높았다.

<표 4-2> 성·연령·자살수단별 조자살률(2008년)

| 연령 | 남녀전체 | | | | 남자 | | | | 여자 | | | |
|--------|-------|------|------|------|------------|-------------|------------|------------|------------|------------|------------|------------|
| | 살충제중독 | 목매 | 추락 | 기타 | 살충제중독 | 목매 | 추락 | 기타 | 살충제중독 | 목매 | 추락 | 기타 |
| 계 | 5.7 | 13.0 | 3.6 | 3.7 | 7.6 | 16.7 | 4.0 | 5.1 | 3.7 | 9.4 | 3.3 | 2.3 |
| 10-19세 | 0.1 | 1.8 | 2.3 | 0.4 | 0.1 | 1.8 | 2.5 | 0.5 | 0.2 | 1.8 | 2.0 | 0.3 |
| 20-29세 | 0.9 | 14.4 | 4.0 | 3.4 | 1.0 | 12.4 | 4.4 | 4.4 | 0.7 | 16.5 | 3.6 | 2.3 |
| 30-39세 | 2.4 | 14.7 | 3.6 | 4.1 | 3.3 | 15.8 | 3.5 | 5.7 | 1.5 | 13.4 | 3.7 | 2.4 |
| 40-49세 | 5.0 | 15.1 | 3.6 | 4.7 | 6.9 | 20.8 | 3.9 | 6.5 | 3.1 | 9.3 | 3.3 | 2.7 |
| 50-59세 | 7.5 | 16.9 | 3.5 | 5.0 | 11.3 | 27.6 | 4.2 | 7.4 | 3.8 | 6.1 | 2.7 | 2.5 |
| 60-69세 | 15.6 | 20.1 | 5.4 | 6.2 | 23.8 | 33.3 | 6.9 | 10.1 | 8.2 | 8.3 | 4.0 | 2.8 |
| 70-79세 | 30.4 | 25.2 | 8.7 | 7.5 | 49.3 | 43.3 | 11.5 | 10.9 | 18.2 | 13.5 | 6.9 | 5.4 |
| 80세이상 | 43.3 | 44.2 | 14.7 | 10.7 | 76.7 | 77.6 | 21.2 | 19.0 | 29.7 | 30.6 | 12.0 | 7.3 |

자료: 통계청(2009)

<그림 4-8> 성·연령·자살수단별 조자살률(2008년)



자료: 통계청(2009)

이러한 수단 차이 이외에, 혼인상태별 조자살률에서 성·연령별 조자살률 격차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미혼자의 조자살률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결혼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 등과 같은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사회내고립감으로 인해 조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혼자의 경우, 남성은 미혼자의 조자살률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어 노인 남성의 이혼은 이들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이혼자의 경우, 20-30대에서는 미혼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조자살률을 나타내었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미혼자보다 낮은 수준의 조자살률을 나타내어 노인 여성은 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유배우자의 조자살률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자살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결혼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 등과 같은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미혼 혹은 이혼자의 조자살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인 수준에 있어서도 가족관계가 지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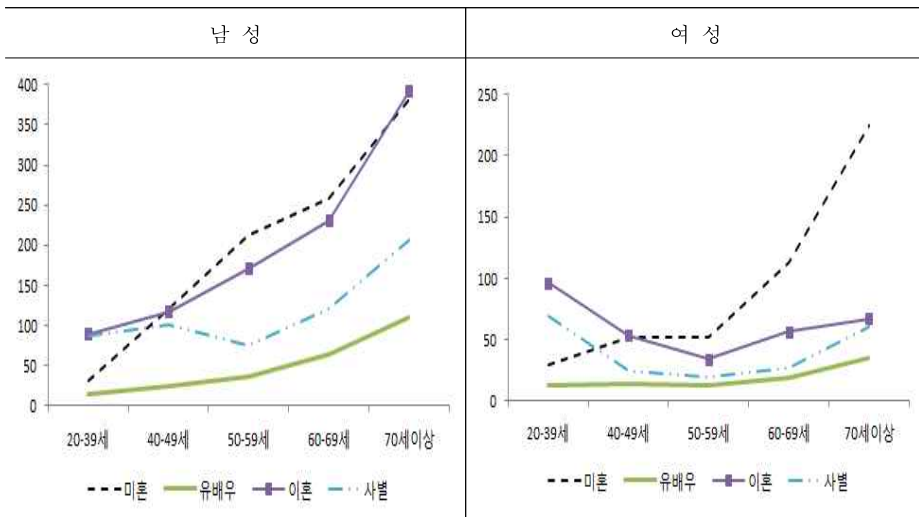
<표 4-3> 성·연령·혼인상태별 조자살률(2008년)

(단위: 혼인상태별 인구 10만명당)

| 연령 | 남성 | | | | | 여성 | | | | |
|--------|-------|-------|-------|-------|-------|------|-------|------|------|------|
| | 전체1) | 미혼 | 유배우 | 이혼 | 사별 | 전체1) | 미혼 | 유배우 | 이혼 | 사별 |
| 계1) | 40.7 | 32.4 | 35.9 | 142.2 | 142.8 | 22.3 | 24.4 | 14.4 | 59.7 | 42.6 |
| 20-39세 | 25.5 | 30.7 | 14.3 | 89.5 | 87.7 | 21.9 | 29.5 | 12.1 | 96.1 | 69.7 |
| 40-49세 | 38.1 | 120.3 | 23.5 | 117.0 | 100.8 | 18.4 | 51.5 | 13.7 | 53.5 | 24.4 |
| 50-59세 | 50.5 | 212.1 | 36.5 | 171.1 | 76.0 | 15.2 | 51.6 | 12.2 | 34.4 | 19.6 |
| 60-69세 | 74.1 | 258.4 | 63.3 | 230.7 | 120.6 | 23.3 | 113.2 | 18.6 | 56.7 | 27.2 |
| 70세이상 | 131.1 | 381.2 | 110.9 | 392.5 | 205.6 | 54.3 | 224.6 | 35.7 | 67.4 | 60.2 |

1) 15세이상, 혼인상태 미상은 제외
자료: 통계청(2009)

<그림 4-9> 성·연령·혼인상태별 조자살률(2008)



자료: 통계청(2009)

제2절 경제위기와 지역별 자살률 분석결과

1. 자살사유별 자살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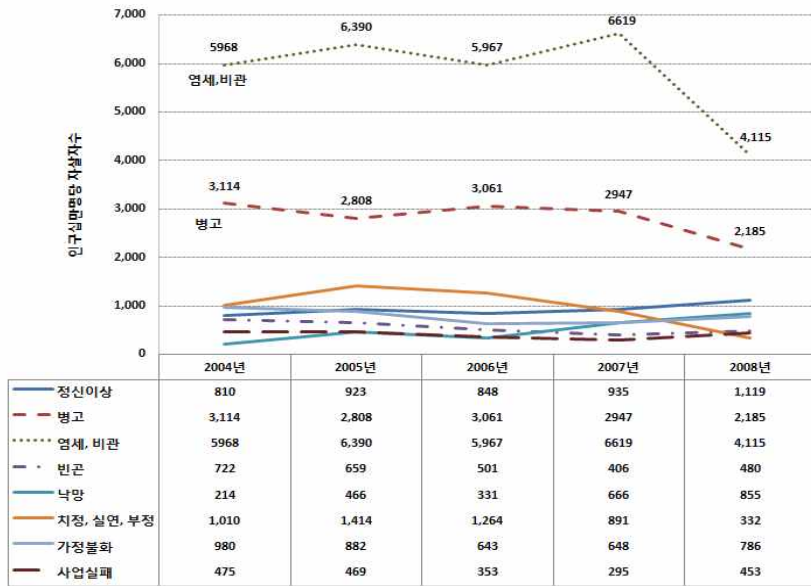
자살자의 자살사유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사망원인통계자료와는 달리 경찰청에서는 변사사건의 범죄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의 정황, 유서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개별 자살사건의 자살사유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자살사유는 크게 보건의료 사유(육체적 질병(병고), 정신적·정신과적 질병), 경제적 사유(빈곤, 사업실패/경제생활문제), 감정적 사유(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가정문제, 남녀문제), 대인관계 사유(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학대 또는 폭력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³¹⁾ 이를 기준으로 전반적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사유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던 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사유임을 재확인 시켜준다.

다만 자살자 중에서 유서를 남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자살자의 주변 정황, 유서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분류한 사유가 전체 자살자들의 자살 요인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정신적 혹은 정신과적 문제와 육체적 질병은 자살자의 진료기록과 행태적 특성에서 외부로 드러날 수 있으며, 경제생활문제 역시 자살 이후의 경제적 수준을 통해 그가 처해 있었던 어려움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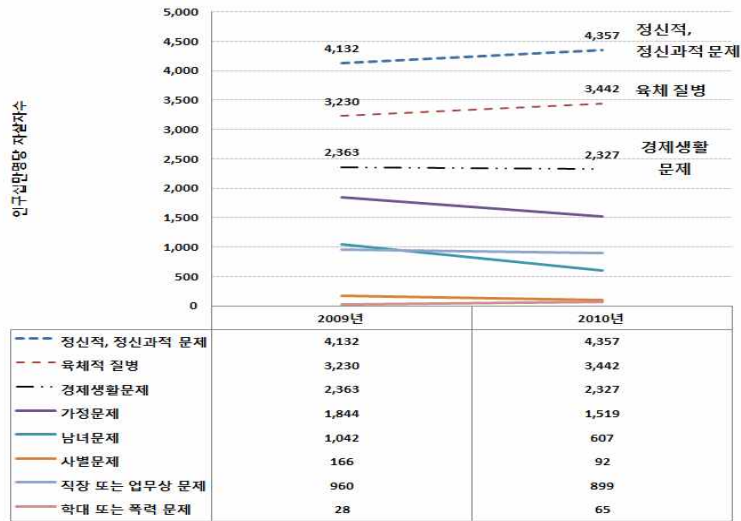
31) 2008년 이전 자료 중 국제손상외인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업세, 비판’ 및 ‘낙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미상·육체적 질병·정신과적 문제·경제생활문제 순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임정수 외, 2008).

<그림 4-10> 경찰청 분류 원인별 자살 현황(2004-2008)



자료: 경찰청(2007)

<그림 4-11> 경찰청 분류 원인별 자살 현황(2009-2010)



자료: 경찰청(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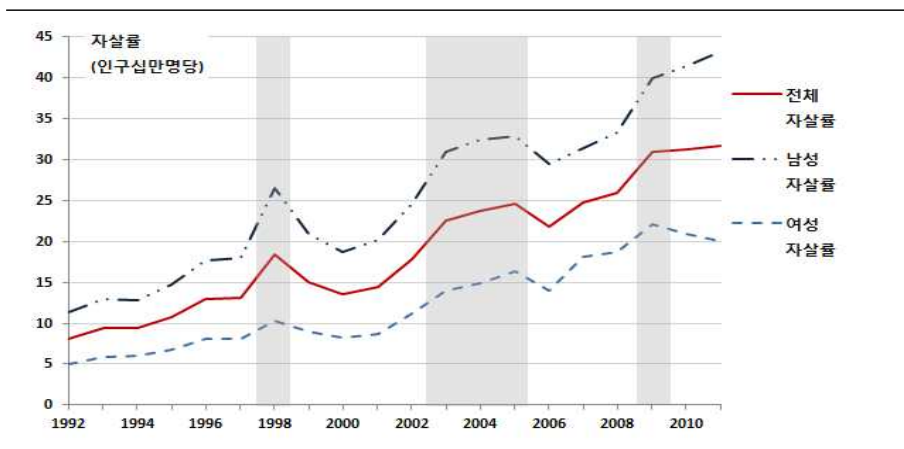
주: 자살원인은 2009년부터 국제손상외인분류체계에 따라 변경됨.

그러나 특히 사회적 통합이 혹은 사회자본이 약화된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 혹은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자살자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살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자살자들이 남기는 유서 역시 자살을 결심한 이후에는 그 압박감으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져, 타인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처리해야 할 고지서 등-에 대해서 기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유서는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위기와 전국 자살률의 변화

한국의 조자살률이 1992년 이래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한 특정 시기에 그 증가율이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7년 경제위기 직후와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위기가 발생한 2003년 이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2009년의 자살률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2> 1992-2011년 성별 조자살률의 변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조자살률은 1992년 약8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3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약 2.7명씩 조자살률이 증가한 것이다(남성 조자살률은 평균 3.6명, 여성 조자살률은 1.7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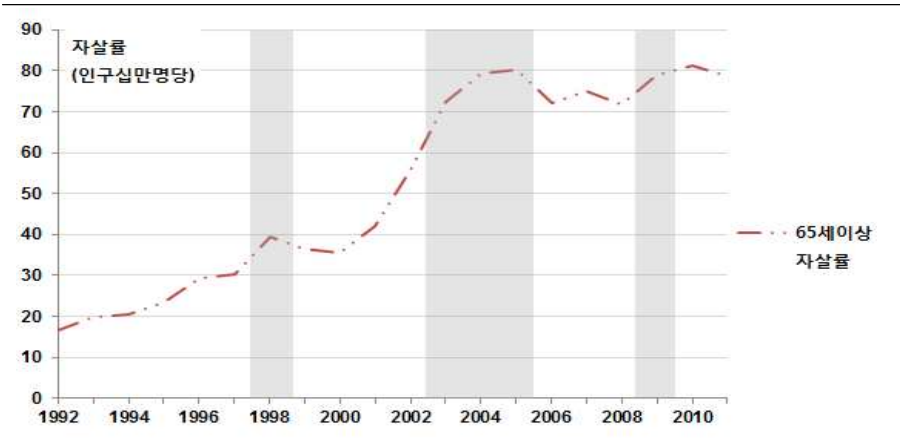
그러나 경제위기 시기에는 더욱 높은 증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외적 위기인 1997년 경제위기 직후의 충격으로 인해 1998년 전체 조자살률은 5.35명(13.06명→18.41명), 남성 조자살률은 8.51명(17.98명→26.49명), 여성 조자살률은 2.17명(8.08명→10.26명)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전체 조자살률은 4.66명(17.89명→22.56명), 남성 조자살률은 6.41명(24.59명→31명), 여성 조자살률은 2.91명(11.15명→14.06명) 증가하였다. 두 대외적 위기로 인해 남성의 조자살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03년 국내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위기가 수면위로 드러난 2003년 이후에도 전체 조자살률은 5.01 (26.03명→31.04명), 남성 조자살률은 6.58명(33.36명→39.94명), 여성 조자살률은 3.45명(18.65명→22.10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각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분 역시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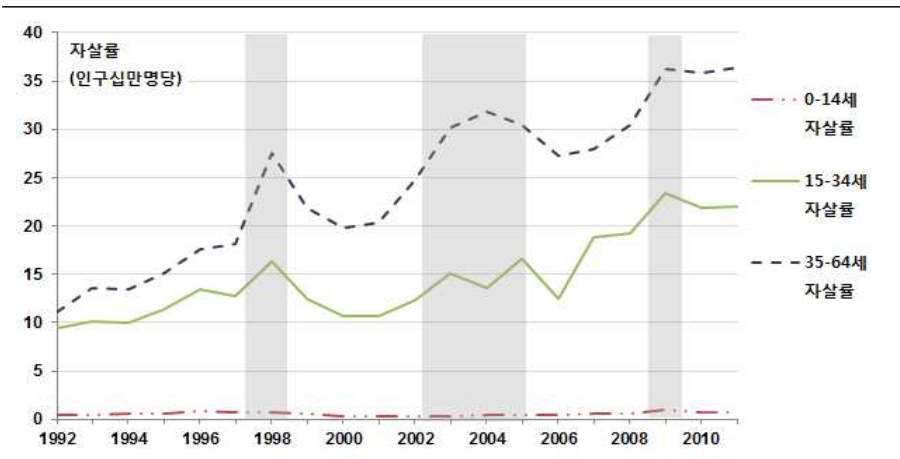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느 연령대가 경제위기에 더욱 취약한가? 노년층의 조자살률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는데, 1992년의 약17명에서 2011년 약79명으로 약5배가량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치자체가 크게 높아졌기에 별도로 그래프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조자살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노년층이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여 그 증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는 35-64세 장년층의 자살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제위기에 청소년층(0-14세)과 청년층(15-34세)의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1992-2011년 노년층 조자살률의 변화



<그림 4-14> 1992-2011년 연령별 조자살률의 변화



이러한 경제위기시 연령별 조자살률의 증가분 차이는 기간별 평균 조자살률에 대한 단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경제위기시 전국 성·연령별 조자살률의 변화

| 자살률 구분 | 1992 -1997 | 1998-1999 IMF 외환위기 | 2000 -2002 | 2003-2005 신용카드 위기 | 2006 -2008 | 2009 금융위기 | 2010-2 011 |
|-----------|---------------|--------------------------|---------------|-------------------------|---------------|--------------|---------------|
| 전체 | 10.6 | 16.7 | 15.3 | 23.6 | 24.2 | 31.0 | 31.5 |
| 남성 | 14.6 | 23.7 | 21.2 | 32.1 | 31.4 | 39.9 | 42.4 |
| 여성 | 6.6 | 9.6 | 9.4 | 15.1 | 16.9 | 22.1 | 20.6 |
| 0-14세 | 0.6 | 0.7 | 0.3 | 0.4 | 0.5 | 1.0 | 0.7 |
| 15-34세 | 11.2 | 14.4 | 11.2 | 15.1 | 16.9 | 23.5 | 21.9 |
| 35-64세 | 14.9 | 24.7 | 21.6 | 30.9 | 28.5 | 36.3 | 36.1 |
| 65세이상 | 23.3 | 38.0 | 44.5 | 77.3 | 73.0 | 79.0 | 79.9 |

주: 김민영 외(2011: 277) 수정

다만 2009년 시기 자살률의 증가분이 금융위기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는 증가분 차이만으로 분명히 확인하기 힘들다. 특히 전체 남성 조자살률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2008년 33.4명이었던 조자살률이 2009년 39.9명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43.3명으로 높아졌다. 반면 전체 여성의 조자살률은 2008년 18.7명에서 2009년 22.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21명, 2011년에는 20.1명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연령기준으로도 청소년층(0-14)과 청년층(15-34)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나 장년층(35-64)과 노년층(65세이상)의 조자살률은 증가한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한 것인지,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금융위기와 더불어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에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3. 경제위기와 시도 자살률의 변화

1) 기술통계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조자살률의 변화에서와 같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자살률은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자료의 기술통계

| 변수 |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 전체 자살률 | 전체 | 20.47 | 7.40 | 4.39 | 38.77 | |
| | 남성 | 27.93 | 9.61 | 7.12 | 49.72 | |
| | 여성 | 13.00 | 5.37 | 1.82 | 27.46 | |
| 청년층 자살률 | 전체 | 16.39 | 5.50 | 6.02 | 34.37 | |
| | 남성 | 19.76 | 6.17 | 7.77 | 45.73 | |
| | 여성 | 12.74 | 5.89 | 3.40 | 34.72 | |
| 장년층 자살률 | 전체 | 26.76 | 10.03 | 4.30 | 48.88 | |
| | 남성 | 39.35 | 14.47 | 7.50 | 74.79 | |
| | 여성 | 14.03 | 5.95 | 1.05 | 29.15 | |
| 노년층 자살률 | 전체 | 49.71 | 28.25 | 3.43 | 121.87 | |
| | 남성 | 79.37 | 44.11 | 0.00 | 185.89 | |
| | 여성 | 31.11 | 18.25 | 0.00 | 81.08 | |
| 경제적 특성 | 1인당 grdp | 14.97 | 4.87 | 7.52 | 37.75 | |
| | 실업률 | 3.07 | 1.51 | 0.70 | 9.10 | |
| | 산업화수준 | 85.67 | 12.76 | 55.73 | 99.92 | |
| 사회통합수준 | 조이혼율 | 2.21 | 0.65 | 0.80 | 4.50 | |
| | 조출산율 | 11.81 | 3.02 | 7.00 | 20.80 |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42.04 | 2.10 | 36.92 | 47.97 | |
| | 세대규모 | 2.97 | 0.32 | 2.37 | 3.66 | |
| 지역사회 특성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4.17 | 2.89 | 0.35 | 18.00 | |
| | 노년층 | 전체 | 8.79 | 3.49 | 3.83 | 20.96 |
| | | 남성 | 6.65 | 2.81 | 2.57 | 15.46 |
| | | 여성 | 10.94 | 4.21 | 4.93 | 26.45 |

주: 관찰치는 20개년도(1992-2011) 15개 시도 기준 300개임(울산 제외)

2) 경제위기에 따른 시도 자살률 분석결과³²⁾

한국사회가 경험한 대내외 사건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충격은 모두

32) 본 분석은 김민영·정광호·금현섭(2011)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의 분석자료를 확장하고 종속변수를 연령표준화자살률로 대체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직간접적으로 자살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전체 자살률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외환위기가 가장 크게 자살률을 증가시켰으며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금융위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겪은 다른 경제위기에 비하여 외환위기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사회경제 부문 전반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타 경제위기에 비해 그 충격이 가장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모든 연령층의 자살률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외환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발생한 신용카드 유동성 위기로 인해 다시금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내적 위기에 비해 산업 전반에 충격을 가져다주는 대외적 위기로 인한 자살률 증가폭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분석(김민영 외, 2011)과 상이한 결과이다. 시계열 자료를 확장하고 시도 간 인구구조를 통제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활용하여 살펴본 본 분석에서는 대내적 위기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자살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자살률에 대한 충격의 상대적 크기는 대내적·대외적 위기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인구구조를 고려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분석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2011년까지 분석범위를 확장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보다 분명히 분석할 수 있었으며, 금융위기의 충격이 외환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⁴⁾ 또한 연령에 따른 대내적·대외적 위기

33)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집합적 수준의 분석으로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패널 선형회귀모형의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있는지 여부를 왈도 테스트(waldo test)를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였다(청년층여성·장년층남성·노년층남성자살률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분석의 통일성을 위하여 모든 모형에서 각 변수에 대해 cochrane-ortcutt 변환을 수행한 이후 고정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34) 경제위기의 충격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9,161에서 2009년 \$17,041로 약간 낮아졌으나 2010년에

의 충격이 달리 나타는 결과는 동일하였다. 즉,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위기는 그 지속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대내적 요인에 의한 경제위기는 그 원인이 내부에 있는 만큼 강도는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자살률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의 충격은 성별 및 연령별에 따라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무 및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 여성에 비해 남성 자살률이 경제위기로 인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위기 시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자살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령별로는 대내적 위기가 청년층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대외적 위기는 노년층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 시 청장년층 자살률과 노년층 남성 자살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노년층 여성자살률의 증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금융위기 시에도 노년층 남성자살률의 증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동안 노년층 및 장년층 자살률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자살률은 유동성위기 첫 해에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이후 2005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크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기 특성에 따른 연령별 자살률 차이는 특히 평생기대소득의 효용차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청년층은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대내적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데, 이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양가족이 적어 부채에 따른 부담감이 낮을 것이며 또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 청년층에 비해 자살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Yip et al.,

는 \$20,562로 다시 회복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1997년 \$11,505에서 1998년 \$7,607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1999년 \$9,778으로 조금 나아졌으며 2000년에야 \$11,292로 회복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13.06.30접속).

2007: 293). 반면 대외적 경제위기에는 취약한데 이러한 위기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 자체가 둔화되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데, 이로 인해 청년층의 향후 기대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노년층 자살률은 평생기대소득이 낮은 만큼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대내적 위기로 인한 부채 부담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시기 자살률의 증가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이미 일정 취업 전선에서 물러나 있는 만큼 향후 기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노년층 자살률의 변화가 적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³⁵⁾

다음으로 각 부문별 요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남성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선행연구(노용환, 2006 등; Neumayer, 2004; Platt et al., 1992)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 실업률과 성별·연령별 자살률 간 부(-)의 관계는 시·도 지역에 있어 실업률과 자살률간 관계를 나타낸 산점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부록 3-1>참조). 예를 들어, 서울은 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평균4.2%, 최소2.5%, 최대7.6%) 전체자살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평균15.4명, 최소5.8명, 최대24.6명). 반면 강원도 혹은 충청남도는 실업률이 낮으면서도(강원: 평균1.8%, 최소0.7%, 최대4.1%) 항상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었다(강원: 평균26.8명, 최소13.5명, 최대38.1명). 이러한 부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았고 산점도 내 위치만 변화되었다. 1998년 이전까지는 양자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시 지역의 실업률은 5%를 훨씬 넘어선 수치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35)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가구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에, 전체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노인가구의 빈곤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현주·강신욱, 2009: 326). 따라서 자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던 노인들이 신용카드 유동성위기로 인하여 자녀 가구의 부채가 증가하여 생계비 지원이 줄어들고 자녀의 부양부담이 증가하자, 짐이 된다는 느낌으로 인해(Joiner, 2005)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이다.

안정적 수치로 돌아왔으나 자살률은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후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동안 다시금 자살률이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특히 도 지역의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시도 차이가 불분명해지면서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 속에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겪은 과도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의 단기 급증 현상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나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의 훼손에 따른 자살의 구조화된 증가 추이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실업률과 자살률간 부(-)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부 연구에서는 양자간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 (Neumayer, 2004 등).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유력한 설명은 개인 수준의 실업과 지역 수준의 실업률은 자살률에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사회적 규범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Clark, 2003) 경제위기시기를 더미변수를 이용해 통제하고 실업률 자체의 영향력을 살펴볼 경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³⁶⁾ 특히 노년층 자살률과 실업률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실업에 정년시기를 넘어선 노년층보다 근로연령인 청년층

36)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위기더미를 제외하여 분석할 경우, 전체연령 자살률 및 청·장년층 자살률에서는 실업률과 자살률 간 관계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전체연령 및 전체 남성자살률과 장년층 전체 및 남성 자살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부록 3-2>-<부록 3-4> 참조). 이는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실업률이라는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노년층 자살률과 실업률의 관계는 여전히 부(-)의 관계 존재하였다.

이 더 구속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둘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인천과 같은 지역은 성공하려는 의욕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낮은 반면, 강원도나 충청남도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의욕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이주하여 실업률은 낮지만 자살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³⁸⁾ 즉,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살률이라는 지역수준의 집계자료(aggregation data)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Kunze & Anderson, 2002).³⁹⁾ 넷째, 실업률에 주목한다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사회의 실업률이 일정 수준의 자연실업률에 도달하였기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외환위기 이외에는 실업률의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증가추세를 지닌 자살률과 부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소득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이후에는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비경제적 요인들이 자살률에 더 큰

37) 기존 분석(김민영 외, 2011)에서는 선행연구(Chuang & Huang, 2007)의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보다는 성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본 분석에서도 장년층 여성자살률에 있어 실업률과의 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8) 이러한 시도간 차이는 분석모형에서 위기터미를 제외하여 시 자료 및 도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 지역의 경우 위기터미를 제외하여도 장년층 전체 및 남성 자살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살률과 실업률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도 지역의 경우 위기터미를 제외하면 노년층 자살률을 제외한 전체 및 청·장년층 자살률과 실업률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9) 실업률과 자살률이라는 집계자료를 분석에 활용할 경우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홍콩에서 경제위기 동안 전반적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자살률도 증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자 집단의 자살률은 감소하였고 취업자 집단의 자살률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Yip & Caine, 2011). 저자들은 경제위기 동안 취업집단에서 실업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였는데, 취업집단에는 취약한 사람(vulnerable people)이 많이 남게 되어 이들이 취업집단 자살률의 분자 크기를 높여 자살률이 증가하였고, 실업집단에는 새로운 실업자들이 유입되면서 실업집단 자살률의 분모 크기가 커져 자살률이 낮아지는 구성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Yip & Caine, 2011).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Helliwell, 2007). 특히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 향상에 주목한 마지막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수준이 자살률과 정(+)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⁴⁰⁾ 일반적으로 1인당 GDP수준과 같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관련이 없거나 역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국가에서는 1인당 GDP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h, 2009). 또한 핀란드의 호황기와 불황기 동안 자살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호황기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불황기에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Hintikka, Saarinen, & Viinamaki, 1999).

한편 지역의 산업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청년층 자살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농림수산업 이외 산업에서 직업을 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산업화 수준이 높아지면 근로기회가 증가하여 양자간 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 노년층 및 장년층 자살률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지역 내 가족 관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사회통합 수준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별 지표가 반영하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즉, 1990년대 이후 변화한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에 따라 성별·연령별 자살률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이 증가할수록 여성 자살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반면 남성 자살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혼율 증가는 사회통합 수준이 약화되었다는 의미이지만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여성 활동의 자유가 향상되었음을 의

40) 주민1인당 GRDP는 실업률과 함께 지역내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양자간 상호관련성이 분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수를 하나씩만 남기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각 변수와 자살률간 관계의 방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났다(<부록 3-5>참조).

미하여 이혼율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자살률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노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이혼율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여 사회적 통합수준의 약화가 노년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생률 감소는 노년층 전체 및 남성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층 전체 및 남성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부담에 따라 상이한 반응이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역시 청년층 남성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노년층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세대규모의 감소는 노년층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뒤르케임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에 따른 자살률 증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Kunze & Anderson, 2002: 160). 즉, 핵가족, 독신가구, 한부모가정 등 가족해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살률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년층 자살률이 세대규모 감소의 부정적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어 가족해체현상이 노인들에게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유정균, 2008). 반면 청년층 자살률에 있어서는 세대규모 감소에 따라 자살률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연령이 변화한 사회통합 수준에 적응하여 그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인 이들에게 있어 세대규모 감소는 자녀 혹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역사회 특성 중에서도 지역내 노인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노년층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가 일정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즉, 여러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절대적 액수가 적어 제도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연구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소한의 제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체 자살률 및 전체 남성 자살률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6>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결과(1)

|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65세 이상) 자살률 |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경제 위기 | 외환 위기 | 1998 | 8.787*** (0.970) | 13.907*** (1.432) | 3.871*** (0.962) | 9.549** (4.651) | 20.914** (8.556) | 3.240 (3.939) |
| | | 1999 | 4.724*** (0.809) | 7.337*** (1.191) | 2.310*** (0.826) | 3.878 (3.775) | 12.021* (7.055) | -0.593 (3.234) |
| | 유동성 위기 | 2003 | 4.721*** (0.644) | 5.782*** (0.951) | 3.828*** (0.663) | 10.649*** (3.026) | 18.100*** (5.624) | 6.550** (2.578) |
| | | 2004 | 4.239*** (0.555) | 6.001*** (0.818) | 2.460*** (0.563) | 13.965*** (2.607) | 22.493*** (4.851) | 8.548*** (2.227) |
| | 금융 위기 | 2005 | 3.856*** (0.545) | 5.277*** (0.801) | 2.140*** (0.577) | 12.470*** (2.421) | 23.902*** (4.674) | 4.592** (2.119) |
| | | 2009 | 3.893*** (0.498) | 3.682*** (0.710) | 3.976*** (0.536) | 6.047*** (2.245) | 5.255 (4.129) | 6.284*** (1.975) |
| | 시간특성 | | 0.785*** (0.252) | 0.894** (0.376) | 0.721*** (0.232) | -2.379* (1.374) | -1.830 (2.333) | -2.734*** (1.062) |
| 경제적 특성 | 1인당 GRDP | 0.972 (2.601) | 1.978 (3.923) | -0.532 (2.358) | 19.680 (14.112) | 22.398 (24.286) | 13.374 (11.154) | |
| | 실업률 | -1.003*** (0.236) | -1.516*** (0.349) | -0.517** (0.229) | -1.063 (1.161) | -2.694 (2.103) | -0.544 (0.970) | |
| | 산업화수준 | -0.138 (0.111) | -0.212 (0.163) | 0.003 (0.102) | 0.441 (0.602) | 1.614 (1.013) | 0.060 (0.482) | |
| 사회 통합 수준 | 조이혼율 | 0.049 (0.498) | 1.682** (0.759) | -1.723*** (0.463) | 3.401 (2.699) | 1.102 (4.673) | 3.042 (2.138) | |
| | 조출생률 | 0.016 (0.194) | 0.108 (0.278) | -0.077 (0.190) | -2.182** (0.980) | -3.004* (1.689) | -2.483*** (0.813) | |
|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097 (0.209) | -0.196 (0.307) | 0.064 (0.203) | 1.015 (1.019) | 1.194 (1.847) | 0.642 (0.858) | |
| | 세대규모 | -3.621 (3.586) | -2.824 (5.437) | -4.022 (3.206) | -84.901*** (21.249) | -108.790*** (34.204) | -64.287*** (16.014) | |
| 지역 사회 특성 | 노인비율 (전체:남성:여성) | 0.282 (0.258) | 0.728 (0.541) | -0.177 (0.174) | -0.542 (1.453) | -2.326 (3.396) | -0.324 (0.832) | |
| | 기초생활 수급자비율 | -0.993* (0.548) | -1.404* (0.819) | -0.582 (0.500) | -2.633 (3.014) | -0.866 (5.087) | -2.785 (2.376) | |
| | 상수항 | constant | 36.261** (15.562) | 42.551* (23.133) | 23.839 (17.453) | 219.087*** (58.869) | 224.757* (129.828) | 212.027*** (56.087) |
| R2 | within | 0.889 | 0.850 | 0.854 | 0.712 | 0.734 | 0.650 | |
| | between | 0.346 | 0.424 | 0.002 | 0.027 | 0.079 | 0.003 | |
| | overall | 0.794 | 0.765 | 0.775 | 0.657 | 0.658 | 0.523 | |
| F값 | | 126.704 | 89.691 | 93.157 | 39.242 | 43.878 | 29.494 | |
| 관찰치 |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표 4-7> 경제위기와 자살률 분석결과(2)

| | | | 청년층(15세-34세) 자살률 | | | 장년층(35세-64세) 자살률 |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경제 위기 | 외환 위기 | 1998 | 10.833*** (1.206) | 15.493*** (1.695) | 5.862*** (1.458) | 10.936*** (1.684) | 18.188*** (2.703) | 3.933*** (1.348) |
| | | 1999 | 6.005*** (1.021) | 8.326*** (1.409) | 3.412*** (1.274) | 6.018*** (1.398) | 9.377*** (2.243) | 2.847** (1.169) |
| | 유동성 위기 | 2003 | 4.175*** (0.817) | 3.652*** (1.124) | 4.725*** (1.029) | 5.914*** (1.115) | 8.288*** (1.789) | 4.154*** (0.942) |
| | | 2004 | 0.450 (0.698) | 0.763 (0.968) | -0.016 (0.865) | 6.934*** (0.961) | 10.188*** (1.541) | 3.839*** (0.795) |
| | | 2005 | 2.481*** (0.703) | 3.004*** (0.949) | 1.370 (0.905) | 4.695*** (0.941) | 6.440*** (1.507) | 2.646*** (0.825) |
| | 금융 위기 | 2009 | 5.307*** (0.615) | 3.906*** (0.816) | 6.914*** (0.809) | 3.532*** (0.809) | 4.115*** (1.295) | 3.298*** (0.734) |
| | 시간특성 | | 1.879*** (0.245) | 2.317*** (0.359) | 1.261*** (0.284) | 1.377*** (0.357) | 1.531*** (0.574) | 1.146*** (0.264) |
| 경제적 특성 | 1인당 GRDP | 0.308 (2.903) | 2.878 (4.327) | -0.596 (3.281) | -4.574 (4.308) | -6.114 (6.939) | -3.162 (3.075) | |
| | 실업률 | -1.578*** (0.288) | -2.384*** (0.409) | -0.657* (0.342) | -0.977** (0.406) | -1.508** (0.653) | -0.472 (0.318) | |
| | 산업화수준 | -0.347*** (0.126) | -0.542*** (0.187) | -0.173 (0.143) | -0.080 (0.186) | -0.206 (0.300) | 0.029 (0.134) | |
| 사회 통합 수준 | 조이혼율 | -1.908*** (0.594) | 0.744 (0.871) | -4.995*** (0.687) | 1.053 (0.867) | 2.828** (1.395) | -1.142* (0.641) | |
| | 조출생률 | 0.793*** (0.216) | 1.186*** (0.309) | 0.195 (0.257) | 0.240 (0.307) | 0.221 (0.494) | 0.191 (0.238) |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0.167 (0.247) | -0.653* (0.353) | 0.411 (0.292) | -0.407 (0.351) | -0.464 (0.563) | -0.131 (0.271) | |
| | 세대규모 | 12.537*** (4.163) | 21.302*** (6.275) | 2.298 (4.686) | -4.055 (6.251) | -10.498 (10.078) | 1.949 (4.392) | |
| 지역 사회 특성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0.864 (0.621) | -1.510 (0.929) | -0.594 (0.698) | -0.808 (0.925) | -1.295 (1.491) | -0.603 (0.655) | |
| 상수항 | constant | -5.311 (20.748) | -9.766 (26.728) | 2.124 (27.906) | 57.460** (26.456) | 102.490** (42.266) | 9.032 (25.221) | |
| R2 | within | 0.763 | 0.594 | 0.770 | 0.805 | 0.758 | 0.768 | |
| | between | 0.682 | 0.732 | 0.365 | 0.454 | 0.568 | 0.088 | |
| | overall | 0.663 | 0.573 | 0.612 | 0.732 | 0.737 | 0.600 | |
| F값 | | | 54.790 | 24.847 | 56.921 | 70.126 | 53.122 | 56.146 |
| 관찰치 | |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제3절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분석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시군구 자살률 기술통계

사회문화적 자본 및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자살률의 변화를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4-8> 시군구 연령표준화 자살률 기술통계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 전체 연령 자살률 | 전체 자살률 | overall | 28.186 | 8.655 | 0 | 75.836 |
| | | between | | 5.882 | 15.353 | 45.456 |
| | | within | | 6.360 | 3.985 | 68.712 |
| | 남성 자살률 | overall | 37.262 | 12.507 | 0 | 120.898 |
| | | between | | 8.372 | 18.315 | 62.382 |
| | | within | | 9.306 | -1.867 | 104.056 |
| | 여성 자살률 | overall | 18.632 | 8.543 | 0 | 76.922 |
| | | between | | 4.116 | 9.185 | 35.547 |
| | | within | | 7.490 | -8.134 | 68.788 |
| 노인 자살률 | 전체 노인 자살률 | overall | 78.065 | 34.077 | 0 | 299.896 |
| | | between | | 23.091 | 24.605 | 170.245 |
| | | within | | 25.102 | -26.044 | 234.749 |
| | 남성 노인 자살률 | overall | 122.459 | 61.426 | 0 | 570.860 |
| | | between | | 36.131 | 40.444 | 265.266 |
| | | within | | 49.756 | -59.959 | 428.053 |
| | 여성 노인 자살률 | overall | 48.882 | 29.216 | 0 | 232.881 |
| | | between | | 17.142 | 8.422 | 117.645 |
| | | within | | 23.683 | -39.116 | 167.872 |

주1: 모든 변수의 관찰치는 8개년도(2003-2010) 232개 시군구 기준 1,856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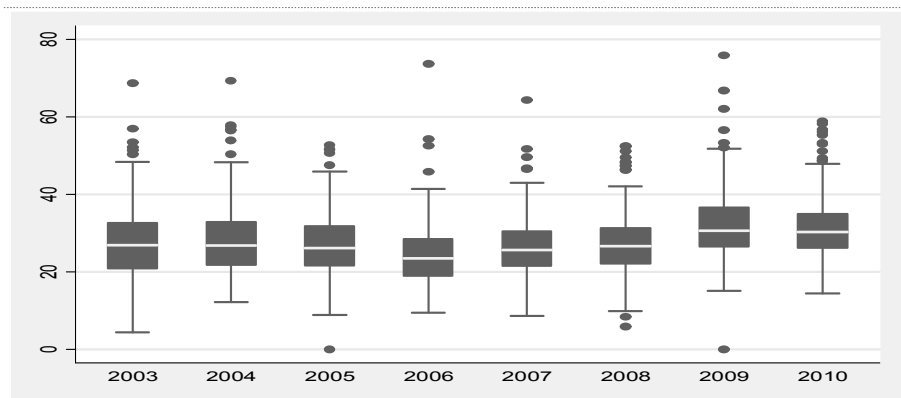
주2: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로서, 2005년 전국인구(주민등록 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하여 연령별 직접표준화 방식을 통해 산출함

분석기간 동안 전체 자살률은 평균 28.2명이었으며 남성 자살률은

이보다 높은 37.3명, 여성 자살률은 이보다 낮은 18.6명이었다. 특히 전체 및 여성 자살률은 최소 0명에서 최대 80명 미만의 자살률 변화를 나타낸 반면 남성 자살률은 최대 120여명까지 높아진바 있어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폭은 노년층 자살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동일하게 노인 남성자살률이 0명에서 최대570여명까지 변화하는 동안 노인 여성자살률은 0명에서 최대230여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도별 지역 자살률의 변화분은 적지 않은데, 이를 그래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15> 연도별 시군구 자살률의 상자그림



시군구별 자살률의 연도별 변화분을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연평균 자살률의 중간값은 약 20-40명 이내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전체 관측치값의 75%를 초과하는 이상값(outlier)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매년 전국의 시군구 자살률 수치의 75%를 초과하여 이상값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살률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은 것이다. 또한 평균보다 아주 높은 이상치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평균보다 아주 낮거나 혹은 지역 주민 전체를 통틀어 자살률이 0명이었던 지역(2005년 및 2009년의 울릉군41))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살률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적지 않다는 점을 통해 개별 지역이 지니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자살률이 달라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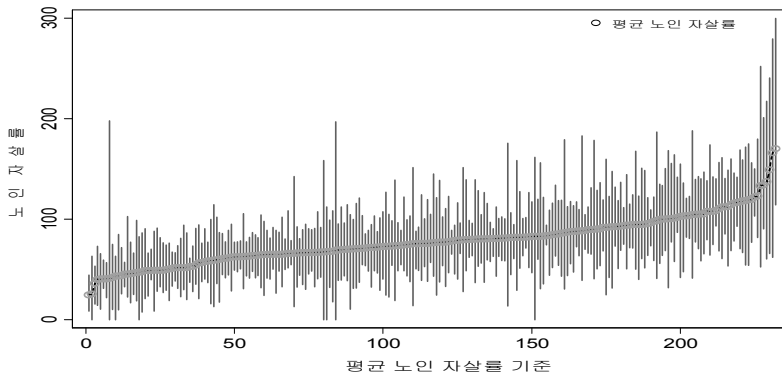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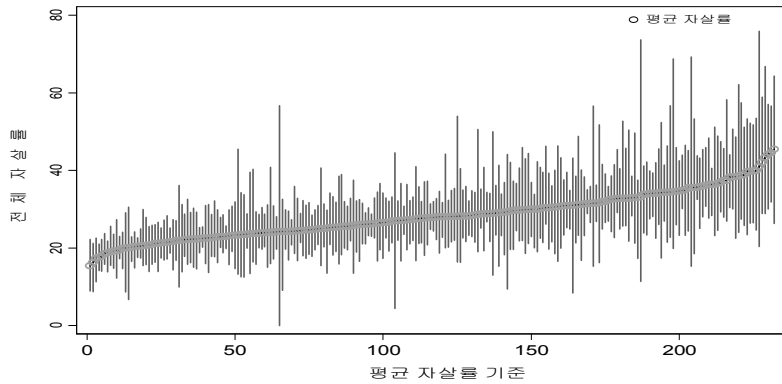
또한 전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의 지역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그 변화량을 살펴보면, 자살률이 낮은 지역이 변화폭이 적으며 자살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변화폭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2003-2010년 평균 전체연령 및 노인 자살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평균자살률인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일렬로 세우고, 각 지역의 최저 자살률과 최대 자살률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균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특정 시기에 높은 수준의 자살률이 발생하여 전체 평균이 높아진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 지역의 최저 자살률 역시 자살률이 낮은 지역의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자살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지라도, 2003-2010년 기간 동안 전체연령의 평균 자살률은 약28명이라는 점이다. 이는 2012년 OECD국가 연평균 자살률인 12.9명의 2배를 넘는 수치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물론 국가별 자살률을 분석한 양과 레스터(Yang & Lester, 2009)는 일정규모의 자연 실업률(natural unemployment rate)이 존재하듯이 자살률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의 자연 자살률(natural suicide rates)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일정 수준의 자연 자살률이 존재할지라도 한국 사회의 자연 자살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 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1) 울릉군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자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발생하였더라도 자살자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6> 지역별 전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의 변화



2) 이외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자살률이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풍부할 것으로 생각된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변수들-자원봉사단체 비율, 자원봉사단체 회원 비율, 비영리민간단체수 비율, 지방선거투표율-에 관한 기술통계와 함께,⁴²⁾ 문화예술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문화시설 이용자비율, 문화시설비율, 동네체육시설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예산비율 및 1인당사회복지지출예산 등에 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42) 성·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의 기술통계량은 <부록 4-6>과 <부록 4-7>에 제시하였다.

<표 4-9>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1)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관측치 |
|---------------------------|---------|---------|---------|----------|----------|--------|
| 구조적 사회자본 | | | | | | |
| 자원봉사단체 비율 (십만 명당) | overall | 99.26 | 87.64 | 0.65 | 816.88 | 1842 |
| | between | | 52.47 | 14.20 | 307.64 | 지역=232 |
| | within | | 70.25 | -201.51 | 608.49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십만 명당) | overall | 5467.61 | 5253.84 | 20.14 | 68953.94 | 1842 |
| | between | | 3415.98 | 990.50 | 29572.86 | 지역=232 |
| | within | | 3993.42 | -21484.9 | 44848.69 | |
| 비영리 민간단체비율 (십만 명당) | overall | 15.30 | 13.12 | 0.00 | 106.13 | 1856 |
| | between | | 12.01 | 0.00 | 83.05 | 지역=232 |
| | within | | 5.33 | -23.20 | 52.84 | |
| (전체)사회단체 참여율 (천명 당) | overall | 0.43 | 0.07 | 0.28 | 0.79 | 232 |
| 지방선거 투표율 | overall | 58.74 | 11.60 | 35.30 | 87 | 694 |
| | between | | 11.27 | 41.14 | 84.67 | 지역=232 |
| | within | | 2.78 | 49.01 | 66.74 | |
| 문화 자본 | | | | | | |
| 문화시설 이용자 비율 (천 명당) | overall | 3869.8 | 3595.2 | 0.0 | 41612.61 | 1856 |
| | between | | 3152.7 | 633.8 | 32393.55 | 지역=232 |
| | within | | 1738.9 | -5549.8 | 26778.74 | |
| 문화시설 비율 (천 명당) | overall | 9.08 | 8.64 | 0.00 | 89.62 | 1856 |
| | between | | 8.14 | 1.17 | 73.36 | 지역=232 |
| | within | | 2.94 | -13.00 | 30.52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천 명당) | overall | 27.79 | 25.87 | 2.37 | 187.87 | 1856 |
| | between | | 23.25 | 2.65 | 150.74 | 지역=232 |
| | within | | 11.45 | -69.19 | 146.86 | |
| 복지지출 | | | | | | |
| 사회복지지출 비율(%) | overall | 24.65 | 11.67 | 8.90 | 64.40 | 917 |
| | between | | 11.18 | 11.50 | 57.95 | 지역=230 |
| | within | | 3.39 | 13.67 | 36.07 | |
| 1인당 사회복지지출예산 (만원) | overall | 679.15 | 377.42 | 133.00 | 2085.00 | 917 |
| | between | | 354.36 | 171.75 | 1734.50 | 지역=230 |
| | within | | 130.98 | 81.65 | 1254.65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천 명당) | overall | 43.60 | 23.26 | 6.24 | 125.40 | 1853 |
| | between | | 22.81 | 6.98 | 116.53 | 지역=232 |
| | within | | 4.73 | 18.90 | 70.19 | |

주1: 지방선거투표율은 2002/2006/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2년 수치를 2003년 자료로 활용하였음

주2: 지방선거투표율·1인당사회복지지출예산을 제외한 변수는 분석 시 자연로그로 전환하였음

특히 구조적 사회자본을 반영하는 자원봉사단체 비율, 자원봉사단체 회원 비율, 비영리민간단체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국 사회 전반에 있어 사회적 활동을 통한 연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자원봉사단체수 비율의 평균은 2003년 40.52개에서 2010년 182.35개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자원봉사단체회원 비율의 평균은 2003년 3951.83명에서 2010년 8729.0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역시 2003년 10.13개에서 2010년 20.31개로 약 2배 증가하였다.⁴³⁾

추가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자동차 비율, 1인당 광업제조업 생산액,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사회통합 수준(조이혼율, 조출생률, 인구이동률, 외국인 비율, 산업화수준, 도시화수준, 인구밀도),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노인비율) 등을 통제하기 위해 분석에서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 통계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43) 이들 변수의 연도별 변화는 <부록 4-1>과 <부록 4-2>에 상자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표 4-10>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2)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관측치 |
|----------------------------|---------|---------|---------|---------|----------|--------|
| 경제적 특성 | | | | | | |
| 자동차보유 비율 (천 명당) | overall | 336.03 | 58.61 | 181.76 | 597.22 | 1853 |
| | between | | 50.86 | 194.25 | 512.64 | 지역=232 |
| | within | | 29.33 | 234.16 | 501.51 | |
| 1인당 광업제조업 생산액(만원) | overall | 189.84 | 348.90 | 0.26 | 2799.99 | 1850 |
| | between | | 332.16 | 0.64 | 1934.04 | 지역=232 |
| | within | | 107.56 | -834.02 | 1209.17 | |
| 사회통합 | | | | | | |
| 조이혼율 (천 명당) | overall | 2.47 | 0.59 | 1.00 | 5.70 | 1856 |
| | between | | 0.46 | 1.49 | 4.30 | 지역=232 |
| | within | | 0.37 | 1.50 | 4.27 | |
| 조출생률 (천 명당) | overall | 8.63 | 2.19 | 4.20 | 16.70 | 1856 |
| | between | | 2.07 | 4.75 | 15.48 | 지역=232 |
| | within | | 0.70 | 5.71 | 12.30 | |
| 인구이동률 (전입·전출) (%) | overall | 323.35 | 82.68 | 149.50 | 751.51 | 1856 |
| | between | | 75.50 | 162.99 | 619.49 | 지역=232 |
| | within | | 34.01 | 195.15 | 662.59 | |
| 외국인비율 (천 명당) | overall | 12.82 | 12.13 | 0.74 | 95.53 | 1856 |
| | between | | 11.03 | 2.75 | 59.07 | 지역=232 |
| | within | | 5.10 | -27.47 | 51.90 | |
| 산업화수준 | overall | 99.49 | 0.82 | 89.98 | 100.00 | 1853 |
| | between | | 0.75 | 92.68 | 100.00 | 지역=232 |
| | within | | 0.33 | 93.38 | 101.93 | |
| 인구밀도 (명/km2) | overall | 4004.44 | 6436.20 | 19.16 | 28908.05 | 1856 |
| | between | | 6445.22 | 19.53 | 28610.96 | 지역=232 |
| | within | | 201.54 | 2317.19 | 6177.17 | |
| 지역사회 특성 | | | | | | |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천 명당) | overall | 135.86 | 68.18 | 31.56 | 316.74 | 1856 |
| | between | | 66.53 | 41.31 | 277.05 | 지역=232 |
| | within | | 15.43 | 84.36 | 178.59 | |

주: 1인당광업제조업생산액 및 외국인비율은 분석 시 자연로그로 전환하였음

2.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1) 사회문화자본과 자살률

사회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강조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은 자살률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자살위험 혹은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을 반영하는 자원봉사단체 비율 및 자원봉사단체 회원 비율과 자살률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12>).

특히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 구조적 사회자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단체 비율 및 자원봉사단체 회원 비율을 통해 사회자본의 기반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실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신뢰수준이 높고 호혜성이 높은지), 그리고 외부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은 함께 측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인 자원봉사단체 활동이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블레이크리 외(Blakely et al., 2006)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연구는 다수준 분석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이후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여 개인특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⁴⁴⁾

44)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 중 신뢰와 같은 인지적 측면을 분석하지 못하였기에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범죄율을 사회신뢰의 대리 지표로 활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역의 사회신뢰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률을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율이 높은

반면 특이하게도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은 모든 자살률에 대해 동일하였고 노년층 전체 및 남성 자살률의 경우는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일부 연구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긴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도 구조적 사회자본이 자살률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게다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년층 전체 및 남성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지역별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살펴보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시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모 특성으로 인해, 등록 단체들은 계층구조가 뚜렷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non-hierarchical structure)라는 내부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단체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일반회원들의 참여보다는 일부 엘리트 위주의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과두제적 지배구조 혹은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류석춘·김용민, 2000). 이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가 구성원간 평등한 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일반신뢰, 호혜성 등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100인 이상의 대규모 단체에서는 활동하는 회원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연계형 사회자본

지역에서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고 쉽게 믿을 수 없기에 사회신뢰가 낮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Delhey & Newton, 2003; Rice & Sumberg, 1997; Coffe & Grey, 2006; 현승숙·금현섭, 2011: 171 재인용). 그러나 범죄율의 경우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등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신뢰변수로서 활용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부록4-6>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범죄율과 자살률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성별 자살률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회신뢰를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활용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회신뢰 자료를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bridging capital)이 형성되어 구성원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 비영리민간단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서로 만나 활동하는지 여부가 평가되지 않고 단순히 그 존재만으로 그 활동성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뉴튼은 단지 회비만 내는 조직(checkbook organization)은 다원적 민주주의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구성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Newton, 1997: 582). 푸트남 역시 회비만 내고 소식을 간간히 받아보는 대규모의 자발적 결사체(mass-membership organization)가 증가하여도 그 구성원들은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힘들다고 하였다(Putnam, 1995: 71). 특히 이들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혜택을 받거나 정부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단체도 존재할 것이므로 구성원간 네트워크 형성이 미비할 수 있다.⁴⁵⁾ 이미 한국 시민단체의 한계로서 설립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조직의 존립과 유지에 더욱 치중하는 시민단체 활동의 목적전치(goal displacement) 현상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류석춘·김용민, 2000).

둘째, 한국사회에 기반한 연고주의로 인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단체활동이 연계형 사회자본이 아닌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 외부효과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일반

45)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2013년 874개의 등록단체 중 53개 단체(6%)가 말소(신청28개, 직권15개) 및 기타사유(이중등록 등 10개)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바 있다(전라북도, 2013).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며, 참여연대와 같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단체를 이끄는 일부 전문가들이 학연과 지연 중심으로 닫힌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어(류석춘·김용민, 2000; 류석춘·왕혜숙, 2006)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지닌 이러한 속성은 단체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윅그 등(2006)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이웃과 자주 얘기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으며(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정치단체·사회단체·봉사단체 등 공식적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는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함)는 설문결과를 보고한바 있다(Twigg, Barnard, Moham, Jones, 2006: 2184). 즉, 자원봉사활동 혹은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직접적 활동 이외에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만나는 빈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대상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소외되어 지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역시, 비록 등록된 단체 중 봉사단체의 수가 적지는 않지만, 환경보호운동·재향군인지원·시민운동·새마을운동 등 단체가 설립된 목적을 위해 활동하며 지역내 소외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히려 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내 다양한 집단⁴⁶⁾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결망의 형태와 속성, 신뢰와 호혜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시민단체는 아파트 입주주민회와 더불어 연결망의 강도, 신뢰의 수준, 호혜성의 규범에 있어 비교적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바 있다(정병은·장미혜, 2008). 시민단체 회원들은 해당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 개인간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운

46)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입주민회, 인력시장 등

것으로 판단되었고 호혜성 역시 인력시장 구성원보다 낮게 나타나 (정병은·장미혜, 2008)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형성하는 사회자본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셋째, 등록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어 기대 하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구조적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사회단체의 유형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0년도에 설정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이 2006년 변경되어 선거활동을 위한 정당, 조합·학술단체·연구단체·예술단체·체육단체·종교단체(교회·절 등)·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본 분석에서 활용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자원봉사단체, 새마을운동단체, YMCA 등의 직업능력개발단체, 재향군인회, 시민운동·환경·여성·복지·교통질서·청소년·장애인 단체 등이 주로 등록되어 있다. 즉,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고단체와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교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연고주의에 기반한 시민단체와는 달리 연고단체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집단을 유지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인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 있다(류석춘 외, 2008a).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강한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구성원의 자살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⁴⁷⁾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회단체 참여율에 따른 구조적 사회자본을 구분하여 지역별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4-13>참조).⁴⁸⁾ 다만 사회단체의 분야에

47) 그러나 <표 4-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시민단체활동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친목·지역단체활동 요인과 자살률간 관계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48)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노인비율 변수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따른 참여율은 실제 참여자의 비율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지역별 시민단체의 비율과 동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2010년이라는 단년도 자료만 존재하여 본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별 고유한 특성(인지적 사회자본, 소득불평등 등)이 통제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며 횡단면 분석결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 분석결과, 경제단체(노동조합·직업단체 등) 참여율이 활발한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나 직업단체 등의 경제단체는 지역 내에 이러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산업이 활성화되어 근로자가 존재할 때 설립될 수 있으므로 이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력과 함께 지역사회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영향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35.1%)·서초구(34.9%)·울산북구(34.8%) 등의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단체 참여율을 보유한 반면 함평군(8.4%)·의성군(9.1%)·장수군(9.1%) 등에서는 참여율이 낮았다.

또한 특이하게도 지역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년층 여성 자살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⁴⁹⁾ 앞서 패널분석 결과에서 설명하였듯이, 아파트주민단체 등과 같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지역단체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외부구성원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등 결속형 사회자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차별적 대우에 따른 스트레스와 고립감으로 인하여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동창회·향우회 등과 같은 친목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이를 통해, 앞서 기대하였던 연고단체의 내

49) 지역단체 참여율은 영월군(107.1%)·평창군(98.4%)·홍천군(79.8%) 등의 지역에서 높은 반면 강북구(8.7%)·대구남구(9.3%)·관악구(9.6%) 등의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50) 친목단체 참여율은 평창군(353.8%)·홍천군(328%)·태안군(323%) 등에서 높은 반면 오산시(109.9%)·시흥시(112.3%)·대구남구(118.6%)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단체 분야에 따라 지역별 참여율을 구분하여 살펴 보면, 지역의 경제활성화 수준을 반영하는 경제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노년층 여성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단체활동의 분야에 따라 형성되는 구조적 사회자본의 특성이 다르며 지역사회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분야별 단체 참여율 자료는 2010년 자료만 존재하여 횡단면 분석만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인지적 사회자본으로서 신뢰와 상호호혜성 등의 영향력을 통제할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위의 논의 이외에도, 이들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하거나 관련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지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등록 단체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설립되었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거나 혹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살률과 같은 지역내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시계열분석결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를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노력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또다른 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 문화시설 이용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연령 여성 자살률 및 노년층 자살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내 문화시설이라는 공적공간을 통해 형성된 사회문화자본은 남

성에 비해 여성에게, 그리고 노년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활동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하용삼·문재원, 2011). 또한 공적 문화시설 이용은 다른 문화예술활동에 비해 이용비용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수준이 높은 편이며, 노년층에서도 이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ix).⁵¹⁾ 특히 문화예술활동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향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연령에 비해 노년층은 시간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문화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이 풍부한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지역 내 주민이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 사회자본의 성과 변수이지만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지표인 선거투표율과 자살률의 관계 역시 비영리민

51)

<표 4-11> 문화시설 연간 이용률

| | | 2010년 조사 | 2008년 조사 | 2006년 조사 |
|------|--------|----------|----------|----------|
| 전체 | 전체 | 52.2 | 45.2 | 41.9 |
| | 대도시 | 50.2 | 43.0 | 41.2 |
| | 중소도시 | 53.1 | 48.4 | 40.6 |
| 도시규모 | 중소도시 | 53.1 | 48.4 | 40.6 |
| | 군지역 | 58.5 | 41.6 | 50.7 |
| | 연령 | 10대 | 73.1 | 58.6 |
| 연령 | 20대 | 50.9 | 48.1 | 42.8 |
| | 30대 | 56.4 | 51.4 | 48.1 |
| | 40대 | 52.5 | 42.4 | 39.2 |
| | 50대 | 47.3 | 38.2 | 35.2 |
| | 60세 이상 | 42.9 | 35.9 | 31.4 |

주: 문화시설은 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를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ix)

간단체 비율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어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 역시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투표율은 사회자본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에서 투표와 같은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Putnam, 2000; Islam et al., 2008). 그러나 투표는 정부에게 지역내 불만 혹은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현승숙·금현섭, 2011: 181).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 혹은 어려움이 높은 지역에서 그에 대응하여 자살률이 높게 나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전반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낸 분야는 지역사회내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이었다.⁵²⁾ 일부 성·연령별 자살률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분석 전반에 있어 지역의 경제력을 대변하는 1인당 광업제조업생산액이 높은 지역에서 전체연령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경제적 수준이 자살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4-12>~<표4-16>). 반면 지역소득의 대리변수로 활용한 자동차보유비율은 자살률과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소득의 대리변수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⁵³⁾

52) 이처럼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의 소득수준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지역별 연간가구평균소득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일부 지역 및 연도에만 소득자료가 존재하여,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가 달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변수를 포함한 분석과 동일한 관측치를 활용하되 소득수준변수는 제외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소득수준변수가 분석에 추가되어도 주요 변수의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관측치가 한정되어 있는 소득자료 대신 자동차보유율을 소득 변수의 대리지표로 활용하였다(<부록 4-4>-<부록 4-5>참조).

53) 또한 일부지역의 연간가구 구간평균소득과 자동차보유율간 상관관계 역시 높지

또한 사회통합수준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변수인 인구이동률, 인구밀도, 외국인비율 등과 같은 지표가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인구이동률이 높은 지역에서 전체연령 및 전체 남성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표4-12>). 인구이동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입인구와 전출인구가 많아 주민간 연대가 형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국토면적이 좁아 이사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전출입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활발한 사회라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구이동률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⁴⁾ 둘째, 인구밀도 역시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반영하여, 전체적 추세를 고려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살률이 낮은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표4-12>,<표4-14>). 하지만 최근 몇 년의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인구밀도 증가와 같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노년층이 역할상실, 가족 및 사회 관계의 약화,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4-15>,<표4-16>). 셋째, 외국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주민간 이질성이 높아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이들 지역에서 남성 자살률이 더 낮은 경향이 존재하였다. 즉, 산업공단이 있는 지역일수록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이다. 반면 가장으로서 부담감이 덜한 여성의 경우 지역내 외국인과의 이질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 자살률이 높은 경향이 존재하였다(<표4-15>,<표4-16>).

다음으로 지역사회 사회통합 수준과 자살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조이혼율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았으며 이

않았다(-0.18).

54) 인구이동률은 경북의성군·경북영양군·경남거창군 등에서 낮게 나타난 반면, 대전계룡시·충남당진군·동두천시·화성시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는 특히 노인 자살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해체가 노인층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혼율 증가는 가족관계에 대한 기존 사회규범이 점차 약화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이기에 노년층에게는 문화적 충격도 함께 야기하여 이혼율이 높은 지역에서 노년층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표4-12>,<표4-14>).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사회의 전통적 규범이 완화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규범에 크게 기속되어 있었던 여성 노인의 권리 인식이 신장하여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이혼율이 높은 지역에서 노인 여성 자살률이 낮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4-15>,<표4-16>).

또한 조출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족간 지지망이 강하여 지역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전체 여성 자살률에 대해서만 부(-)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표4-12>~<표4-16>). 한국 사회의 저출산율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때, 가족이 형성되고 안정화되었다고 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의 소득 수준, 자녀 교육을 위한 환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자녀출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한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보다 직접적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출생률이 여성 자살률과 부(-)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일수록 지역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반면 가족관계 약화, 주민들간 관계 약화 등으로 자살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산업화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전체연령 여성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 수준 저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특히 여성이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4-12>). 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년층의 지위가 약화되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4-12>,<표4-14>), 산

업화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오히려 지역내 경제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4-15>,<표4-16>).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대부분의 자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특히 전체연령 남성 자살률과 노년층 전체 및 남성 자살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보장수준이 미미하여 빈곤층에게 큰 혜택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살률에 있어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자살률을 높이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도시화가 진행된 군지역보다 시·자치구에서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기에 각 성별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는 일부 노년층 자살률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성별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로당, 사회복지회관 등을 기준으로 노인들간 만남이 더 자주 이루어지는 등 상호지지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자간 영향력이 혼합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⁵⁵⁾

55) 이외 상대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하는 시설(정신요양시설)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부록 4-9>).

<표 4-12>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 자살률 |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 사회 자본 | 자원봉사단체 비용 | -0.136 (0.337) | -0.090 (0.513) | -0.147 (0.416) | -0.472 (1.441) | 0.631 (2.883) | -1.398 (1.384) |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용 | 0.050 (0.260) | -0.124 (0.397) | 0.220 (0.321) | 0.076 (1.112) | -2.010 (2.227) | 1.481 (1.068) | |
| | 비영리민간단체 비용 | 0.698 (0.677) | 1.274 (1.033) | 0.053 (0.836) | 6.993** (2.896) | 17.466*** (5.802) | 0.451 (2.782) | |
| 문화 예술 활동 | 문화시설 이용자비용 | -0.708* (0.426) | -0.504 (0.650) | -1.081** (0.526) | -4.264** (1.824) | -6.307* (3.651) | -3.425* (1.752) | |
| | 문화시설 비용 | 0.247 (0.834) | 0.194 (1.271) | 0.481 (1.029) | -2.248 (3.567) | -4.712 (7.141) | 0.170 (3.425) | |
| | 동네체육시설 비용 | -0.206 (0.561) | 0.047 (0.855) | -0.506 (0.693) | -1.268 (2.400) | -0.231 (4.803) | -2.025 (2.306) | |
| 경제적 특성 | 자동차보유율 | -0.009 (0.012) | -0.016 (0.017) | -0.005 (0.014) | -0.010 (0.049) | 0.077 (0.097) | -0.059 (0.048) | |
| | 1인당 광업 제조업 생산액 | -1.813*** (0.671) | -1.424 (1.027) | -2.365*** (0.828) | 2.142 (2.872) | 2.989 (5.766) | 1.529 (2.754) | |
| 사회 통합 수준 | 조이혼률 | 1.426** (0.692) | 1.639 (1.044) | 1.493* (0.857) | 10.546*** (2.962) | 19.371*** (5.861) | 6.060** (2.852) | |
| | 조출생률 | 0.011 (0.258) | 0.610 (0.394) | -0.640** (0.319) | -0.736 (1.106) | 0.728 (2.212) | -1.893* (1.062) | |
| | 인구이동률 | -0.013** (0.005) | -0.016** (0.008) | -0.007 (0.006) | -0.019 (0.022) | -0.007 (0.043) | -0.021 (0.021) | |
| | 외국인비율 | 1.049 (0.887) | 1.238 (1.357) | 0.972 (1.094) | -3.274 (3.797) | -9.833 (7.620) | 1.730 (3.642) | |
| | 산업화 수준 | 0.467 (0.446) | -0.250 (0.680) | 1.317** (0.552) | 2.126 (1.910) | 3.832 (3.820) | 1.602 (1.836) | |
| | 도시화수준 | 0.275 (4.679) | -1.971 (7.132) | 2.713 (5.781) | 12.598 (20.021) | 13.557 (40.056) | 10.138 (19.241) | |
| | 인구밀도 | -0.001 (0.001) | -0.001 (0.001) | -0.001 (0.001) | 0.004 (0.003) | 0.009 (0.007) | 0.000 (0.003) | |
| 공공 부조 | 기초생활 수급자비용 | -0.043 (0.037) | -0.128** (0.056) | 0.046 (0.046) | -0.359** (0.158) | -0.829*** (0.315) | -0.075 (0.152) | |
| 사회 특성 | 노인비율 | -0.024 (0.027) | -0.092 (0.104) | -0.043 (0.052) | 0.309*** (0.114) | 0.784 (0.583) | 0.448*** (0.172) | |
| | 2004 | 1.525** (0.757) | 1.737 (1.159) | 1.588* (0.930) | 9.342*** (3.241) | 15.401** (6.507) | 6.049* (3.097) | |
| | 2005 | 1.239 (0.975) | 1.750 (1.497) | 1.047 (1.192) | 10.366** (4.172) | 22.835*** (8.407) | 2.321 (3.966) | |
| | 2006 | -1.601 (1.167) | -2.268 (1.803) | -0.684 (1.420) | 4.278 (4.994) | 9.331 (10.127) | 0.518 (4.726) | |
| | 2007 | 1.162 (1.380) | -1.331 (2.149) | 4.298*** (1.668) | 6.296 (5.904) | 13.667 (12.069) | 1.259 (5.553) | |
| | 2008 | 2.018 (1.609) | 0.512 (2.515) | 3.988** (1.941) | 0.361 (6.887) | 5.200 (14.124) | -3.726 (6.460) | |
| | 2009 | 6.901*** (1.736) | 6.689** (2.719) | 7.524*** (2.093) | 5.707 (7.429) | 9.892 (15.272) | 1.724 (6.965) | |
| | 2010 | 6.427*** (1.909) | 6.047** (2.997) | 7.448*** (2.298) | 6.627 (8.168) | 13.057 (16.831) | 0.677 (7.647) | |
| | 상수항 | 6.021 (45.200) | 87.302 (68.915) | -85.520 (55.838) | -178.654 (193.403) | -365.339 (387.040) | -112.599 (185.841) | |
| | R2 | within | 0.165 | 0.107 | 0.109 | 0.060 | 0.049 | 0.031 |
| | | between | 0.191 | 0.112 | 0.076 | 0.067 | 0.034 | 0.019 |
| overall | | 0.158 | 0.092 | 0.062 | 0.016 | 0.006 | 0.001 | |
| F값 | | 12.758 | 7.727 | 7.876 | 4.099 | 3.363 | 2.057 |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시군구 230개 및 관측치 1,807개

<표 4-13> 분석결과: 분야별 단체활동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단체 활동 참여율 | 사회 (환경·봉사·인권단체) | -0.031 (0.094) | -0.147 (0.158) | 0.120 (0.169) | -0.695 (0.559) | -0.866 (0.931) | -0.578 (0.437) |
| | ln(지역) (아파트 주민단체) | 3.407 (2.184) | 3.485 (3.471) | 3.185 (2.900) | 22.359 (15.239) | 19.716 (23.578) | 23.079* |
| | 친목 (동창회, 향우회) | 0.027 (0.022) | 0.045 (0.033) | 0.006 (0.026) | 0.073 (0.101) | 0.150 (0.174) | 0.016 (0.084) |
| | 경제 (노동조합, 직업단체) | -0.590*** (0.149) | -0.885*** (0.250) | -0.236 (0.177) | -2.098*** (0.754) | -3.719*** (1.366) | -0.922* (0.551) |
| | 교육 (학부모, 교사단체) | 0.139 (0.185) | 0.217 (0.331) | 0.031 (0.198) | 1.373 (0.841) | 2.407 (1.635) | 0.578 (0.693) |
| | 문화 (취미, 스포츠) | -0.001 (0.072) | -0.050 (0.122) | 0.068 (0.097) | 0.178 (0.352) | 0.370 (0.562) | 0.069 (0.292) |
| | 정치 (정당활동) | -0.455 (0.600) | -0.652 (0.930) | -0.418 (0.931) | -3.241 (3.110) | -6.234 (4.714) | -1.379 (2.833) |
| | 종교 | 0.015 (0.025) | -0.000 (0.038) | 0.027 (0.039) | -0.039 (0.109) | -0.001 (0.197) | -0.080 (0.081) |
| | 기타 | 0.533 (0.679) | 1.297 (1.050) | -0.164 (0.925) | 0.332 (3.713) | -1.834 (5.785) | 1.875 (3.113) |
| | 경제 적 특 성 | 자동차보유율 | 0.016 (0.010) | 0.021 (0.013) | 0.010 (0.016) | 0.011 (0.052) | 0.062 (0.086) |
| 1인당 광업 제조업 생산액 | | -0.388 (0.359) | -0.486 (0.573) | -0.350 (0.458) | 3.271* (1.978) | 5.828* (3.456) | 1.697 (1.553) |
| 사회 합 수 준 | 조이혼률 | 6.600*** (1.413) | 7.932*** (2.371) | 4.979** (2.036) | 18.994** (8.945) | 34.017** (15.400) | 8.410 (6.807) |
| | 조출생률 | 0.031 (0.292) | 0.571 (0.488) | -0.415 (0.440) | -0.837 (1.840) | -0.526 (3.112) | -0.818 (1.514) |
| | 인구이동률 | -0.016 (0.016) | -0.046* (0.024) | 0.021 (0.023) | -0.061 (0.068) | -0.141 (0.115) | -0.002 (0.054) |
| | 외국인비율 | -1.554* (0.877) | -3.045** (1.390) | -0.215 (1.059) | -3.338 (4.510) | -6.539 (7.368) | -2.204 (3.815) |
| | 산업화 수준 | 0.864 (0.752) | 1.612 (1.017) | 0.009 (1.049) | 3.354 (5.428) | 2.662 (8.277) | 3.586 (4.057) |
| | 도시화수준 | 0.837 (1.657) | 2.999 (2.437) | -1.346 (2.074) | 7.303 (8.160) | 6.550 (13.330) | 6.916 (6.860) |
| | 인구밀도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1 (0.000) | -0.001 (0.001) | -0.000 (0.000) |
| 공공 부 조 | 기초생활 수급자비율 | 0.004 (0.038) | 0.003 (0.055) | 0.023 (0.047) | -0.150 (0.182) | -0.128 (0.299) | -0.133 (0.154) |
| | 상수항 | -71.577 (75.623) | -126.008 (103.341) | -10.129 (105.415) | -323.608 (552.895) | -236.418 (838.186) | -354.447 (415.335) |
| R2 | | 0.373 | 0.333 | 0.155 | 0.234 | 0.223 | 0.125 |
| adjusted R2 | | 0.316 | 0.273 | 0.078 | 0.165 | 0.152 | 0.046 |
| F값 | | 8.218 | 6.860 | 1.541 | 4.324 | 4.467 | 2.061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관측치 229개

<표 4-14>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지방선거투표율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사회 자본 | 자원봉사단체 비율 | 0.008 (0.515) | -0.192 (0.781) | 0.381 (0.648) | -0.316 (2.327) | 1.038 (4.655) | -1.140 (2.324)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0.449 (0.424) | 0.606 (0.644) | 0.169 (0.534) | 0.086 (1.916) | -3.553 (3.835) | 2.192 (1.913) |
| | 비영리민간단 체 비율 | 0.147 (0.895) | 0.412 (1.359) | -0.095 (1.126) | 3.550 (4.043) | 13.853* (8.096) | -2.683 (4.036) |
| | 지방선거 투표율 | 0.468*** (0.116) | 0.593*** (0.176) | 0.339** (0.146) | 1.319** (0.524) | 2.305** (1.047) | 0.700 (0.523) |
| 문 화 예 술 활 동 | 문화시설 이용자비율 | -0.003 (0.697) | -0.571 (1.058) | 0.472 (0.875) | -5.372* (3.147) | -4.402 (6.305) | -5.856* (3.138) |
| | 문화시설 비율 | -1.057 (1.334) | -0.184 (2.024) | -2.005 (1.677) | -6.477 (6.026) | -10.360 (12.058) | -3.604 (6.012)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0.093 (0.789) | 0.068 (1.196) | -0.306 (0.993) | 3.263 (3.566) | 10.315 (7.129) | -1.027 (3.560) |
| 경 제 적 특 성 | 자동차보유율 | 0.027 (0.018) | -0.003 (0.026) | 0.051** (0.022) | 0.067 (0.080) | 0.145 (0.156) | 0.030 (0.081) |
| | 1인당 광업 제조업 생산액 | -2.488** (0.992) | -1.679 (1.515) | -2.962** (1.241) | 1.734 (4.482) | 6.086 (9.029) | 0.841 (4.450) |
| 사 회 통 합 수 준 | 조이혼률 | 1.853* (1.088) | 1.876 (1.623) | 1.643 (1.375) | 19.445*** (4.916) | 35.135*** (9.669) | 9.323* (4.929) |
| | 조출생률 | 0.046 (0.368) | 0.701 (0.556) | -0.658 (0.463) | -2.976* (1.660) | -3.934 (3.314) | -2.996* (1.660) |
| | 인구이동률 | -0.032*** (0.008) | -0.030** (0.012) | -0.032*** (0.010) | -0.059 (0.036) | -0.026 (0.071) | -0.068* (0.036) |
| | 외국인비율 | 0.314 (1.258) | 0.347 (1.916) | 0.029 (1.579) | -4.450 (5.683) | -17.162 (11.416) | 3.148 (5.663) |
| | 산업화 수준 | 0.009 (0.628) | -0.327 (0.952) | 0.369 (0.790) | 3.743 (2.836) | 11.152** (5.671) | -0.659 (2.832) |
| | 도시화수준 | 2.460 (5.113) | 1.597 (7.747) | 3.413 (6.435) | 25.320 (23.097) | 19.931 (46.163) | 26.539 (23.070) |
| | 인구밀도 | -0.002** (0.001) | -0.002 (0.002) | -0.002* (0.001) | 0.000 (0.005) | 0.009 (0.009) | -0.004 (0.005) |
| | 공공 부조 | -0.155*** (0.056) | -0.220*** (0.084) | -0.096 (0.070) | -0.362 (0.251) | -0.324 (0.503) | -0.441* (0.252) |
| 사 회 특 성 | 0.002 (0.038) | 0.150 (0.146) | -0.047 (0.074) | 0.372** (0.171) | 2.265*** (0.871) | 0.208 (0.267) | |
| 2006 | | -3.344** (1.630) | -4.853* (2.511) | -2.675 (2.011) | 4.147 (7.363) | -0.938 (14.961) | 2.434 (7.208) |
| | 2010 | 1.370 (2.814) | -0.401 (4.407) | 1.615 (3.437) | 2.373 (12.712) | -11.962 (26.260) | 1.037 (12.321) |
| | 상수항 | 24.243 (64.761) | 55.611 (98.167) | -11.799 (81.464) | -417.374 (292.523) | -1,357.140** (584.968) | 126.247 (292.074) |
| R2 | within | 0.364 | 0.240 | 0.228 | 0.157 | 0.136 | 0.066 |
| | between | 0.306 | 0.278 | 0.134 | 0.002 | 0.031 | 0.067 |
| | overall | 0.245 | 0.220 | 0.099 | 0.016 | 0.003 | 0.044 |
| F값 | | 11.952 | 6.569 | 6.175 | 3.870 | 3.289 | 1.478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시군구 230개 및 관측치 667개

2)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일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행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지출은 주민들로 하여금 그 해의 경제적 어려움을 물질적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어 자살결정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다음해의 자살률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의 사회복지예산비중 및 일인당 사회복지예산액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⁵⁶⁾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책적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사회복지예산비중을 통해 전년도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다음 연도의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연령 여성자살률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절대적 지원수준을 나타내는 일인당 사회복지예산 역시 전년도 지출액이 다음 연도 전체연령 자살률 및 전체 여성 자살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상대적(사회복지부문의 예산비중) 및 절대적(1인당 지원규모) 수준의 강화는 특히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내 자살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당해 연도 일인당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년층 남성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 남성에게는 그 시점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음해에 대한 전망보다 보다 중요하며, 개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액의 절대적 수준이

56) 사회복지지출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앞선 분석에 포함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변수는 사회복지지출의 각 변수에 포함되는 항목이기에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내 정책 정향과 같은 정부의 지원방향보다 의미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즉, 노년층 남성에게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예산비중 및 일인당 사회복지예산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자살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지출이 다중적 의미를 지닌 척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으로 구성되는 만큼 개별 지역의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그 비중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이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증가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2005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67개의 사업이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를 통해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증가할지라도,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능력으로 인하여 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의 변화는 크기 않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 예산에 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해 일괄적으로 집행되는 예산규모가 더 큰 상황이다. 따라서 일인당 사회복지예산과 같이 주민 지원에 대한 절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기 보다는 지역내 복지수요에 따라 이미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측정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예산은 지역내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예산비중 혹은 일인당 사회복지예산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측정하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공적연금·보육·가족및여성·노인·청소년·노동·보훈 그리고 사회복지일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예산(고경환 외, 2009)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자살률을 높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지원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그 효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여 전체 연령 및 노년층에서 자살률과 부(-)의 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앞선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4-12>~<표4-14>).

<표 4-15>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예산비중(전년도 포함)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사회 자본 | 자원봉사단체 비율 | -0.837 (1.082) | -1.556 (1.618) | 0.193 (1.364) | 2.319 (4.309) | 9.391 (8.526) | -2.309 (3.814)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0.611 (0.632) | 0.653 (0.946) | 0.548 (0.796) | -1.592 (2.516) | -4.051 (4.982) | 0.271 (2.225) |
| | 비영리민간단 체 비율 | -4.407 (3.818) | -9.792* (5.719) | 0.941 (4.807) | 30.060** (15.209) | 60.125** (30.129) | 12.430 (13.443) |
| 문 화 예 술 활 동 | 문화시설 이용자비율 | 0.206 (0.956) | 0.504 (1.434) | -0.133 (1.204) | -4.384 (3.810) | -10.661 (7.557) | -0.355 (3.368) |
| | 문화시설 비율 | -2.074 (2.412) | -8.573** (3.619) | 4.931 (3.033) | 8.578 (9.607) | 7.096 (19.065) | 9.211 (8.481)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0.309 (1.437) | 0.036 (2.153) | -0.986 (1.810) | 3.471 (5.725) | 8.076 (11.342) | 0.517 (5.061) |
| 사 회 복 지 정 향 | 사회복지예산 비중 | 0.039 (0.134) | 0.152 (0.200) | -0.108 (0.169) | -0.288 (0.533) | -0.729 (1.055) | 0.025 (0.473) |
| | 전년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 -0.080 (0.126) | 0.107 (0.190) | -0.300* (0.158) | -0.471 (0.502) | -0.247 (1.002) | -0.692 (0.442) |
| | 경제 특 성 | 자동차보유율 | 0.021 (0.024) | 0.023 (0.036) | 0.020 (0.031) | -0.045 (0.096) | -0.005 (0.188) |
| 사 회 동 합 수 준 | 1인당 광업 제조업 생산액 | -3.170* (1.904) | -1.829 (2.863) | -4.903** (2.395) | -8.679 (7.586) | -15.887 (15.087) | -3.703 (6.697) |
| | 조이혼률 | 0.267 (1.711) | 0.105 (2.564) | 0.849 (2.157) | -0.157 (6.818) | 0.244 (13.509) | -0.906 (6.033) |
| | 조출생률 | -0.585 (0.720) | 0.792 (1.070) | -2.295** (0.908) | -0.624 (2.867) | -0.707 (5.637) | -0.808 (2.541) |
| | 인구이동률 | -0.008 (0.012) | -0.014 (0.019) | -0.002 (0.016) | -0.040 (0.049) | -0.050 (0.098) | -0.034 (0.044) |
| | 외국인비율 | 3.463 (4.419) | -2.013 (6.595) | 11.451** (5.581) | 10.729 (17.605) | 13.085 (34.747) | 13.705 (15.609) |
| | 산업화 수준 | 0.385 (1.516) | -2.354 (2.270) | 3.459* (1.909) | -8.625 (6.038) | -20.209* (11.959) | -1.150 (5.339) |
| | 인구밀도 | 0.002 (0.003) | -0.000 (0.004) | 0.004 (0.004) | 0.022* (0.011) | 0.023 (0.023) | 0.021** (0.010) |
| 사 회 특 성 | 노인비율 | 0.049 (0.136) | 0.499 (0.516) | -0.305 (0.264) | 0.290 (0.541) | 0.832 (2.721) | 0.524 (0.738) |
| | 2009 | 4.464*** (1.189) | 5.969*** (1.824) | 2.956** (1.460) | 5.751 (4.737) | 6.654 (9.610) | 4.291 (4.083) |
| | 2010 | 3.938** (1.912) | 4.044 (2.927) | 4.364* (2.334) | 6.128 (7.618) | 8.741 (15.421) | 2.319 (6.526) |
| | 상수항 | 1.126 (156.309) | 283.755 (235.029) | -305.547 (196.247) | 812.046 (622.668) | 1,977.232 (1,238,294) | 38.453 (548.850) |
| R2 | within | 0.150 | 0.126 | 0.097 | 0.062 | 0.044 | 0.046 |
| | between | 0.092 | 0.114 | 0.036 | 0.106 | 0.129 | 0.042 |
| | overall | 0.036 | 0.088 | 0.010 | 0.063 | 0.063 | 0.022 |
| F값 | | 4.020 | 3.290 | 2.464 | 1.497 | 1.044 | 1.095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시군구 230개 및 관측치 681개

<표 4-16>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전년도 포함)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사회 자본 | 자원봉사단체 비율 | -0.588 (1.076) | -1.578 (1.618) | 0.719 (1.357) | 3.051 (4.304) | 10.574 (8.490) | -1.821 (3.804)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0.614 (0.628) | 0.694 (0.944) | 0.501 (0.792) | -1.798 (2.513) | -4.501 (4.952) | 0.185 (2.221) |
| | 비영리민간단 체 비율 | -4.735 (3.792) | -9.694* (5.699) | 0.188 (4.781) | 27.146* (15.168) | 53.538* (29.900) | 11.792 (13.401) |
| 문화 예술 활동 | 문화시설 이용자비율 | 0.340 (0.953) | 0.502 (1.436) | 0.142 (1.201) | -4.471 (3.814) | -11.070 (7.532) | -0.266 (3.368) |
| | 문화시설 비율 | -2.776 (2.434) | -8.922** (3.657) | 3.971 (3.065) | 8.470 (9.737) | 7.481 (19.187) | 9.380 (8.592)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0.329 (1.431) | -0.016 (2.152) | -0.952 (1.804) | 2.888 (5.725) | 6.490 (11.288) | 0.551 (5.058) |
| 사회 복지 지출 | 1인당 사회복지예산 | -0.000 (0.005) | -0.005 (0.007) | 0.007 (0.006) | -0.016 (0.018) | -0.073** (0.035) | 0.025 (0.016) |
| | 전년도 1인당 사회복지예산 | -0.007* (0.004) | -0.003 (0.005) | -0.010** (0.005) | -0.002 (0.015) | 0.004 (0.028) | -0.003 (0.013) |
| | 경제 적 특성 | 자동차보유율 | 0.025 (0.024) | 0.022 (0.035) | 0.030 (0.030) | -0.025 (0.095) | 0.037 (0.186) |
| 사회 통합 수준 | 1인당 광업 제조업 생산액 | -2.721 (1.903) | -1.716 (2.874) | -4.132* (2.391) | -7.371 (7.611) | -13.675 (15.080) | -3.211 (6.704) |
| | 조이혼률 | 0.872 (1.751) | 0.669 (2.634) | 1.328 (2.206) | 0.904 (7.004) | 3.726 (13.817) | -1.737 (6.183) |
| | 조출생률 | -0.521 (0.713) | 0.728 (1.064) | -2.081** (0.900) | -0.194 (2.851) | -0.401 (5.582) | -0.501 (2.524) |
| | 인구이동률 | -0.007 (0.012) | -0.016 (0.018) | 0.003 (0.016) | -0.039 (0.049) | -0.057 (0.097) | -0.030 (0.044) |
| | 외국인비율 | 4.591 (4.411) | -1.848 (6.626) | 13.472** (5.568) | 14.242 (17.643) | 20.653 (34.761) | 14.942 (15.609) |
| | 산업화 수준 | 0.233 (1.509) | -2.526 (2.269) | 3.382* (1.904) | -7.937 (6.038) | -18.597 (11.903) | -0.985 (5.338) |
| | 인구밀도 | 0.002 (0.003) | 0.000 (0.004) | 0.004 (0.004) | 0.022* (0.011) | 0.023 (0.022) | 0.020** (0.010) |
| 사회 특성 | 노인비율 | 0.135 (0.147) | 0.674 (0.527) | -0.156 (0.295) | 0.367 (0.587) | 1.003 (2.763) | 0.263 (0.826) |
| R2 | 2009 | 4.737*** (1.166) | 7.014*** (1.841) | 2.105 (1.429) | 6.260 (4.665) | 11.629 (9.659) | 2.023 (4.005) |
| | 2010 | 4.479*** (1.736) | 6.203** (2.817) | 2.575 (2.075) | 4.570 (6.944) | 12.713 (14.781) | -2.485 (5.817) |
| | 상수항 | -3.509 (154.837) | 299.514 (234.059) | -336.730* (194.407) | 705.602 (619.367) | 1,798.388 (1,227.934) | 2.732 (544.973) |
| F값 | within | 0.156 | 0.126 | 0.102 | 0.061 | 0.052 | 0.046 |
| | between | 0.048 | 0.111 | 0.036 | 0.106 | 0.134 | 0.040 |
| | overall | 0.017 | 0.082 | 0.010 | 0.063 | 0.064 | 0.021 |
| | | 4.218 | 3.292 | 2.592 | 1.475 | 1.252 | 1.104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시군구 230개 및 관측치 681개

3. 지역 사례의 자살률 변화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내 경제적 특성(1인당 광업제조업생산액, 경제분야단체 참여율 등)이 개별 지역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자살률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분야(환경·인권·봉사)단체 참여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기별 성·연령별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지역내 인구규모와 산업화수준 등과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성·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본 다음, 구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성·연령별 자살률이 2003-20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들 지역의 사회전반적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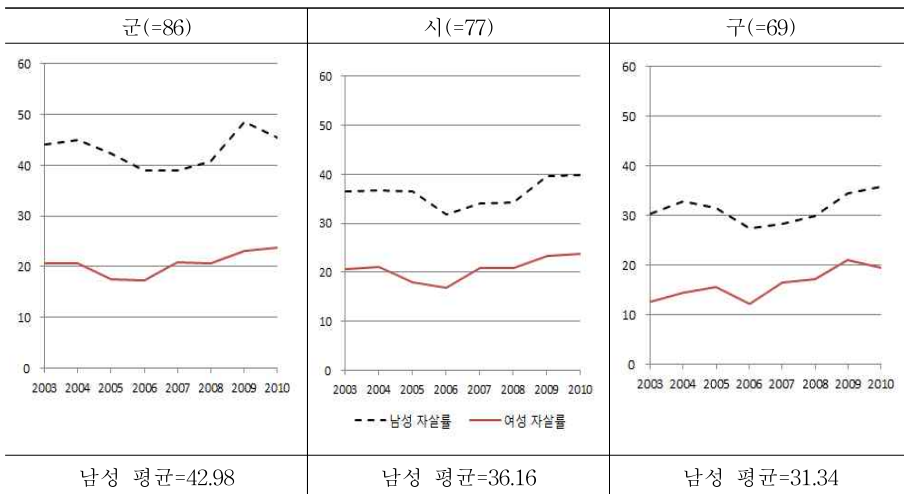
1) 행정구역기준 성·연령별 자살률의 변화 비교

아래에서는 지역사례를 살펴보기 이전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기에 따른 성별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서 지역 사례를 선정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군지역의 평균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57) 행정구역 조정기준에 있어 ‘일반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경우(세부적으로 도시적 산업종사가구가 전체가구의 60%이상-이라는 기준을 내포하고 있음),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혹은 당해 지역의 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 이상 혹은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 등의 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12: 392). 따라서 일차적으로 인구규모 및 산업화 수준과 같이 지역사회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성·연령별 자살률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이 시지역, 구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와 같은 순서가 남성 자살률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군지역에서는 평균 40-50명의 자살률이 존재하였으나 시 및 구지역에서는 평균 30-40명의 자살률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낮은 군 지역에서 높은 자살률이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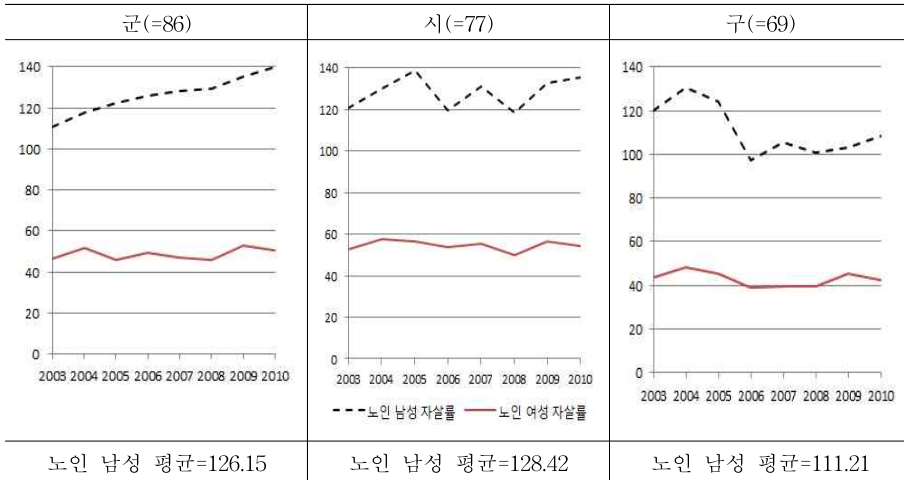
<그림 4-17> 행정구역 기준 각 연도 성별 평균 자살률



또한 신용카드 유동성 위기 및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남성 자살률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노인 남성 자살률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앞의 경제위기가 연령별 자살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패널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유동성 위기 및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 노년층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기에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그래프에서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노년층의 경우는 경제위기 발생시 그 충격을 다른 요인(가족관계 약화, 사회통합 저하 등)을 통해 받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8> 행정구역 기준 노인의 각 연도 성별 평균 자살률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니는 특성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물질적 수준이 상당히 낮은 곳이라는 점이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지역은 산업화수준이 99.1%로 전체 평균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역시 군지역은 주민 천명당 61.6명인 반면 구 지역은 29.1명에 불과하여, 군지역 내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조인혼율의 경우 군 지역이 2.1명인 반면 구 지역은 2.6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4-17> 행정구역별 주요 특성 비교

| 구분 | 산업화수준 | | 1인당 GRDP (백만) |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 조이혼율 | |
|----|-------|-------|------------------|-------|---------------|-------|------|-------|
| | % | 빈도 | 금액 | 빈도 | 천명당 | 빈도 | 천명당 | 빈도 |
| 군 | 99.1 | 690 | 19.1 | 631 | 61.6 | 690 | 2.2 | 690 |
| 시 | 99.6 | 611 | 18.9 | 585 | 36.4 | 611 | 2.6 | 614 |
| 구 | 99.9 | 552 | 20.4 | 286 | 29.1 | 552 | 2.7 | 552 |
| 전체 | 99.5 | 1,853 | 19.3 | 1,502 | 43.6 | 1,853 | 2.5 | 1,8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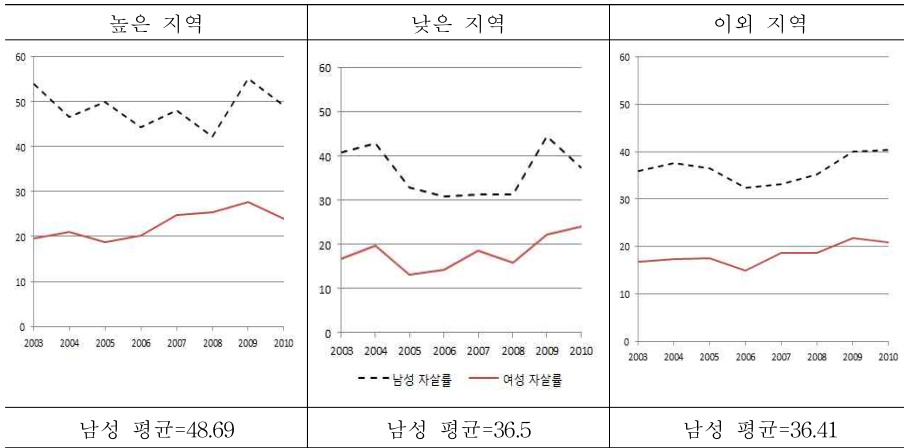
2) 지역 사례: 시기별 성·연령별 자살률의 변화

자살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자살률 증감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자살률 증가 현상만이 조금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자살률이 낮은 지역은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큰 충격에 의해 자살률이 변화하지만,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경제적 충격 이외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만 자살률이 증가하였기에, 이들 지역은 대내적 경제위기보다 대외적 경제위기와 같이 산업 전반에 더욱 충격을 받는다고 짐작할 수 있다.

성별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여성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증감현상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지만, 남성 자살률은 자살률이 낮은 지역과 이외 지역에서 경제위기 시 증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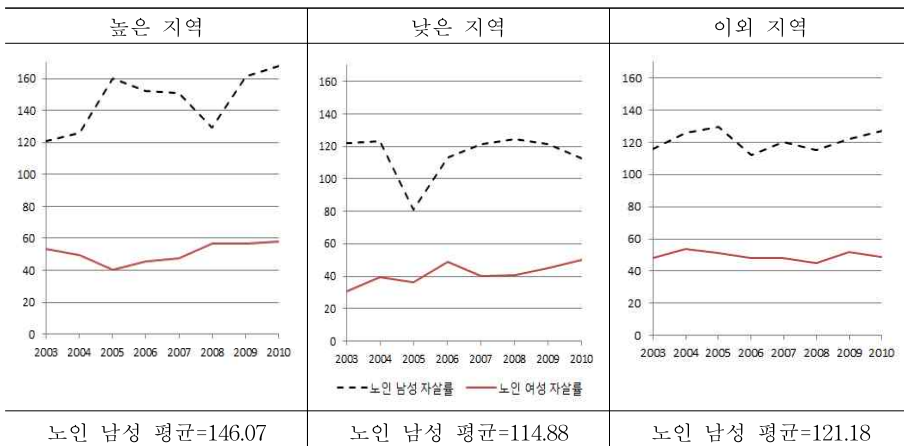
또한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성별 자살률 격차가 가장 높아 지역 간 자살률 격차는 여성에 비해 남성 자살률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9> 자살률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각 연도 성별 자살률 비교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기준으로 한 노인 자살률을 통해서도,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제위기에 따른 자살률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시기별로 지역마다 서로 다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살률이 높은 지역의 노인 남성 자살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약120명에서 조금씩 증가하다 2008년 감소한 이후, 2009년 약 160명으로 다시금 증가한 것이다.

<그림 4-20> 자살률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각 연도 노인 성별 자살률 비교



3) 지역사례의 사회진반적 특성 비교

구체적으로 지역사례의 주요 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성별·연령별 자살률은 전체 평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구조적 사회문화자본을 반영하는 지표 등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부 사회단체참여율의 경우, 자살률이 낮은 지역에서 평균치가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시계열 분석결과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구조적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이 자살률을 낮추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8> 지역 사례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1)

| 구분 | 자살률 높은 지역 | 자살률 낮은 지역 | 관측치 | 평균 비교 t-value | |
|-------------|-----------|-------------|-------------|---------------|------|
| 전체 자살률 | 36.3 | 27.7 | 256 | 7.67 | |
| 남성 자살률 | 48.7 | 36.5 | 256 | 7.49 | |
| 여성 자살률 | 22.7 | 18.1 | 256 | 3.68 | |
| 노인 전체 자살률 | 89.5 | 71.07 | 256 | 3.89 | |
| 노인 남성 자살률 | 146.07 | 114.89 | 256 | 3.37 | |
| 노인 여성 자살률 | 50.76 | 41.4 | 256 | 2.53 | |
| 자원봉사단체 비율 | 125.9 | 108.7 | 252 | 1.53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6609.9 | 5881.3 | 252 | 1.43 | |
| 비영리단체 비율 | 15.6 | 15.5 | 256 | 0.05 | |
| 사회단체 참여율 | 전체 단체 | 453.5 | 449.8 | 32 | 0.13 |
| | 사회 | 41.2 | 37.3 | 32 | 0.91 |
| | 경제 | 15.9 | 17.3 | 32 | -1.1 |
| | 정치 | 3.7 | 3.8 | 32 | -0.1 |
| | 교육 | 16.0 | 16.6 | 32 | -0.4 |
| | 문화 | 44.0 | 48.2 | 32 | -1.1 |
| | 종교 | 83.1 | 85.7 | 32 | -0.3 |
| | 지역 | 36.6 | 33.1 | 32 | 0.6 |
| | 친목 | 211.0 | 206.1 | 32 | 0.3 |
| | 기타 | 2.1 | 1.7 | 32 | 1.5 |
| 지방선거 투표율 | 68.7 | 65.7 | 96 | 1.49 | |
| 문화시설 이용자 비율 | 3249.7 | 3076.8 | 256 | 0.60 | |
| 문화시설 비율 | 11.4 | 11.7 | 256 | -0.32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41.6 | 37.1 | 256 | 1.32 | |
| 사회복지예산 비율 | 16.4 | 17.5 | 128 | -1.66 | |
|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 948.5 | 920.25 | 128 | 0.48 | |

주: 평균 비교 t-value는 두 지역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임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정향을 반영하는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전체 평균 자살률이 낮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패널분석결과와 같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평균 자살률이 낮은 지역에서 경제적 특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자살률 차이에 있어 경제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낮은 반면 인구이동률·외국인비율·인구밀도 등과 같이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개별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들의 수준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지역에서 지역 사회내 사회통합 수준을 반영하는 조이혼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조출생률 역시 더 높게 나타나 상반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외 노인인구비율은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의 고령화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데 일정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4-19> 지역 사례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2)

| 구분 | 자살률 높은 지역 | 자살률 낮은 지역 | 관측치 | 평균 비교 t-value |
|------------------|-----------|-----------|-----|---------------|
| 자동차보유 비율 | 348.9 | 359.6 | 256 | -1.56 |
| 연평균가구소득(만) | 2692.4 | 2806.1 | 80 | -0.56 |
| 1인당광업제조업 생산액(백만) | 1.8 | 2.1 | 256 | -1.12 |
| 1인당 GRDP(백만) | 19.1 | 21.0 | 240 | -1.80 |
| 조이혼율 | 2.2 | 2.3 | 256 | -1.1 |
| 조출생률 | 7.4 | 8.4 | 256 | -3.8 |
| 인구이동률 | 269.0 | 290.4 | 256 | -2.14 |
| 외국인 비율 | 14.3 | 16.5 | 256 | -1.24 |
| 산업화수준 | 99.0 | 99.2 | 256 | -1.09 |
| 인구밀도 | 125.2 | 210.8 | 256 | -3.51 |
|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 57.4 | 53.7 | 256 | 1.46 |
| 노인인구비율(65세이상) | 203.3 | 179.1 | 256 | 3.07 |

주1: 평균 비교 t-value는 두 지역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임

주2: 연평균가구소득은 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상세 사항은 <부록 4-3>을 참조할 것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국민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I)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발전 수준은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살률에 있어 성·연령이라는 요인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한 대내외적 경제위기의 충격에 따른 자살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산업부문이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사회적 연대감의 훼손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기에(김민영 외, 2011: 288; 이재열, 2007; 정진성, 2001) 그 대응방안으로서 사회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 등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연령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자살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면서 성별에 따른 격차 역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에 있어 이러한 성·연령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령표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비교가능한 자살률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IMF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사회적 충격이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분석한 결과,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유통성 위기,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가 자살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살률은 외환위기 직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신용카드 유동성위기가 오랜 기간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자살률 증가분이 가장 적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내적 위기(신용카드 유동성위기)에 비해 산업 전반에 충격을 가져다주는 대외적 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로 인한 자살률 증가폭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분석(김민영 외, 2011)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지역별 인구구조를 고려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분석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2011년까지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보다 분명히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크게 증가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제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충격 수준을 살펴보면, 향후 직업활동이 중요한 청년층의 자살률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반면, 노년층 자살률의 경우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대내적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같이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사회는 금융제도의 재편성, 산업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가족 해체 등과 같은 사회전반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 등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와해되고 있는 가족관계와 저하된 사회적 연대감을 보완하여 사회적 지지망 혹은 안전망으로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예상과는 달리 구조적 사회자본은 자살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 비율과 자원봉사단체회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구조적 사회자본이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블

레이클리 외(Blakely et al., 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구조적 사회자본의 수준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신뢰수준이 높고 호혜성이 높은지), 그리고 외부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은 함께 측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은 모든 자살률에 대해 동일하였고 전체 노인 및 남성 노인 자살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별로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등록 단체들은 계층구조가 뚜렷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non-hierarchical structure)와 같은 내부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단체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일반회원들의 참여보다는 일부 엘리트 위주의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류석춘·김용민, 2000). 이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가 구성원간 평등한 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일반신뢰, 호혜성 등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사회에 기반한 연고주의로 인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단체활동이 연계형 사회자본이 아닌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 외부효과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여연대와 같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단체를 이끄는 일부 전문가들이 학연과 지연 중심으로 닫힌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어(류석춘·김용민, 2000; 류석춘·왕혜숙, 2006)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공식적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한다(Twigg, Barnard, Moham, Jones, 2006: 2184). 따라서 오히려 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지닐 수

있다. 셋째, 등록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어 기대하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에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고단체와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교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다. 이에 단체 유형에 따른 참여율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횡단면 분석결과에서는 경제분야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아파트주민단체 등의 지역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친목·종교단체 참여율의 경우, 기대와 달리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자살률에 있어 경제적 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한국사회내 연고주의로 인해 사회자본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사회분야단체 혹은 시민단체는 그 활동분야와 규모에 따라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특성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논의 이외에도, 이들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하거나 관련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지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등록 단체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설립되었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거나 혹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살률과 같은 지역내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자본의 대리지표로 활용되는 투표율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지역사회에서 지방선거투표율은 사회자본의 대리지표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사회가 정부에 대해 지닌 불만 수준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현승숙·

금현섭, 2011: 181)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 문화시설 이용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연령 여성 자살률 및 노년층 자살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내 문화시설이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사회내 소속감이 증진되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지역내 자살률을 낮출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그리고 노년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향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연령에 비해 노년층은 시간자원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문화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이 풍부한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지역 내 주민이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향을 반영하는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전년도의 노력이 다음 연도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여성자살률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주민이 받는 절대적 혜택을 나타내는 1인당 사회복지지출예산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전년도의 노력이 다음 연도 전체연령의 전체 자살률 및 여성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상대적(사회복지부문의 예산비중) 및 절대적(1인당 지원규모) 수준의 강화는 특히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내 자살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당해 연도 일인당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년층 남성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 남성에게는 그 시점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음해에 대한 전망보다 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액의 절대적 수준이 지역내 정책 정향과 같은 정부의 지원방향보다 의미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더불어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비율과 같이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지출은 분석 전반에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외 분석 전반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낸 분야는 지역사회내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이었다. 지역의 경제력을 대변하는 1인당 광업제조업생산액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경제적 수준이 자살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수준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인구이동률, 인구밀도, 외국인비율 등과 같은 지표가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구이동률이 높은 지역에서 전체연령 및 전체 여성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인구이동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입인구와 전출인구가 많아 주민간 연대가 형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국토면적이 좁아 이사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전출입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활발한 사회라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구이동률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역시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 전체적 추세를 고려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살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의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인구밀도 증가와 같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노년층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외국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주민간 이질성이 높아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이들 지역에서 남성 자살률이 더 낮은 경향이 존재하였다. 반면 가장으로서 부담감이 덜한 여성의 경우 외국인과의 이질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 자살률이 높은 경향이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사회통합 수준과 자살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조이혼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았다. 특히 가족해체는 개인적 수준의 충격과 함께 기존 사회규범의 약화라는 문화적 충격도 함께 야기하여 노인층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어, 이혼율이 높은 지역에서 노년층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사회의 전통적 규범이 완화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규범에 크게 기속되어 있었던 여성 노인의 권리 인식이 신장하여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이혼율이 높은 지역에서 노인 여성 자살률이 낮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출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족간 지지망이 강하여 지역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 자살률에 대해서만 부(-)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자녀출산결정에 소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여성이 출산과 직접적 관련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산업화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전체연령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 수준 저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특히 여성이 크게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년층의 지위가 약화되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화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오히려 지역내 경제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 평균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행정구역적 특성 및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선정하여 회귀분석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전체 32개 지역사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 사회통합 수준의 중요성, 노인인구 비율의 중요성 등의 회귀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률의 단기적인 급증현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충격이 한국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경제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정책적 대안으로 사회자본, 문화예술활동, 사회복지지출 등의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이 지닌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양자간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존재하지 않기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의 사회자본과 자살률간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경제위기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정하여 공공부조제도를 강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대상자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경제위기의 충격이 국내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외부 사건에 기인한 것인지 등의 특성에 따라 성·연령별 자살률에 미치는 충격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집단을 위한 전략적 사회안전망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외적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그 충격을 크게 받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보조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내적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취약한 노년층을 위해 생계보조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이다.

예를 들어, EU국가에서는 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강화할수록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tuckler, Basu, Suhrcke, Coutts, & McKee, 2009). 또한 지난 1997년 경제위기의 충격을 경험한 동남아시아 사례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사회안전망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⁵⁸⁾ 결국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사회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지 않고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자살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적으로 그 부정적 여파를 남겨 가족 관계의 해체, 사회적 응집력의 약화,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으로서 사회자본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혹은 완화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구조적 사회자본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사회자본의 바람직한 외부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횡단면 분석결과, 패널분석 결과와는 상이하게 노동조합이나 직업단체 등의 경제분야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

58) 당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의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금융부문을 개편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건강지표는 나빠진 반면 IMF의 지원을 거절하고 독자적 정책처방을 내린 말레이시아의 건강지표는 상대적으로 덜 악화되었다(Hopkins, 2006).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 주고 확장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안정화되었다(Hopkins, 2006).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단년도 분석결과로 지역특성(인지적 사회자본, 소득불평등)이 통제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회자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나 지역사회단체 참여율 등과 같은 사회자본은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서구와는 달리 사회전반에 내재한 연고주의와 그에 기반한 한국 비영리민간단체가 상대적으로 연계형 사회자본보다는 결속형 사회자본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구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 이외에 한국의 사회자본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 지역사회단체, 연고집단 등 개별적 단체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횡단면 분석결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에서 연고집단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되고 있으며 연고집단은 다른 단체에 비해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류석춘 외, 2008a)도 존재하는바, 한국의 연고집단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자본의 역할을 부정하기 보다는 사회자본과 자살률간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한 이후 그 긍정적 외부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Halpern, 2005). 예를 들어, 2008년 이후의 변화에 주목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체 남성 자살률은 낮게 나타나 이들 단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분석기간을 2003년 이후로 확장하여 분석하면 이러한 관계는 사라지며, 노년층 자살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노년층 전체 및 남성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반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시간범위 및 연령집단과 사회자본간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정책을 구상해야지만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자본을 창출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계형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결속형 사회자본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자본에 담겨있는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를 감안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Leonard, 2004: 941-942).

다만 지역사회가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이 쉽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영국 사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McCulloch, Mohan, & Smith, 2012: 1131). 즉, 지역사회의 물질적 결핍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며 이는 사회자본 형성의 걸림돌이 되어 그 부정적 측면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⁵⁹⁾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회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미미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의 경제적 측면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1인당 광업제조업출하액, 인구이동률, 외국인비율, 인구밀도 등과 같은 변수에서 나타난 지역내 경제적 수준이 자살률에 지닌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정부는 지역의 사회자본 강화와 함께 경제적·물질적 결핍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왔던 조이혼율과 조출생률 등과 같이 가족관계에 기반한 사회통합 수준과 자살률간 관계 역시 중요하게 나타났기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 지표를 통해 전통적 규범의 변화와 가족관계의 변화가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기존 규범 약화 현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연령층 기준으로 노년층이 더욱 취약하였

59) 이를 고려한다면, 헨스트라(Henstra)가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위기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로서 자살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Henstra, 2010).

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로 받는 반면 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점차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년층 여성은 권리신장에 따라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핵가족화·1인가구증가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라 논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1차 집단이 형성하는 지지망과 안정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사회 내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 관계 약화에 따라 증대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이외의 지지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2차 집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내 사회자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외부 구성원을 포용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상호신뢰와 호혜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외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층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지역내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적 공간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주5일제, 40시간제와 같이 여가시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이러한 여가시간에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지역 축제 혹은 문화행사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적·심리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분석결과 사회복지예산비중과 일인당사회복지예산과 자살률간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방

정부가 사회복지부문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방안이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현금 및 현물 지원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개인이 아닌 개별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자살률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남성 노인이 경험하는 이혼은 그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 내부의 이혼율의 증가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혼으로 인해 경험하는 개인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청년층 혹은 여성에게는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기존 관습에서 보다 자유로워진 현상을 의미하고, 이는 노년층에게는 사회변화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며, 사회전반에 있어서는 사회집단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해체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분석단위로서 개인과 사회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면서도 사회의 특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집단 속의 개인을 살펴보는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도 혹은 시군구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렇기에 향후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이후 지역사회가 지니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수준에 내재된 사회자본 등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수준 분석

(multi-level analysis) 등을 실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분석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면 자살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미 기존 연구(노용환, 2006; Neumayer, 2004)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어, 앞으로 이러한 역설(paradox)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⁶⁰⁾

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성·연령별 분석에 있어 연령표준화 자살률 혹은 조자살률 등의 자료가 모두 주민등록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었기에 그 수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자료 상의 거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진학이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지내지만 주민등록주소는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자료에 기반하여 산출된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일정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강영호 외, 2005).

둘째, 사회문화자본과 자살률간 관계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사회자본의 두 측면-구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단지 단체활동과 같은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이 지니는 영향력만을 분석하였는바 향후 지역 사회내 신뢰, 상호호혜성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이 자살률과 지니는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60) 예를 들면, 집합적 자료에 내재된 구성적 오류는 없는지 또는 양자 관계에 대한 다른 이론적 관점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낮은 지역에 비해 실업의 부정적 효과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대도시처럼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경제밀집 지역의 경우 시골이나 도서벽지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 지역에서 오히려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 비도시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의 높은 실업률이 부정적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한편 실업률이 높은 시기는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Clark, 2003).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오히려 실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실업자간 연대감도 생기기 때문이다(Platt et al., 1992: 1198).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의 밀도를 추정하는데 활용된 자료들은 각 단체들이 단체 구성여부와 그 회원에 관해 자발적으로 직접 등록한 자료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비형식적인 단체의 존재와 그 활동은 분석에 활용되지 못하여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인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야별 단체활동 참여율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단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통제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패널분석에서는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분석모형에서 미처 포함하지 못한 지역별 특성(인지적 사회자본, 소득불평등 등)을 통제함으로써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횡단면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통제가 불가능하여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별 특성의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적실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문화자본과 자살률간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자본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연고집단이 지역사회 자살률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그리고 분야별 단체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친목단체(동창회·향우회)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연고집단에 대한 기존 연구의 긍정적 시각과는 상반된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혈연·지연·학연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연고집단은 과거에 공유하였던 강렬한 기억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고유한 특성(혈연, 동일한 시기 동일한 지역의 교육)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연고집단에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는 폐쇄적 집단으로 볼 수 있다(류석춘 외, 2008a). 그렇지만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기에 외부인에 대한 관용성은 높은 편이다. 즉, 이탈리아의 마피

아와 같이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 형성될 수 있어도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또한 연고집단 구성원들은 생활반경이 흩어져 있고 자주 만나지 않아 응집력은 낮은 편이며, 과거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기에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쉽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연계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서 긍정적 영향 역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류석춘 외, 2008a).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나 상과 같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들이 모두 협력하여 서로 도와나가기 때문에 자살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는 개인에게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와는 상반되었는데, 연고집단이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에 있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연고집단 내부적으로 강한 지지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그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의 고립감을 증대시키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경제 혹은 정치제도가 아닌 사회적·정서적 관계 속에서 연고집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향후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는 동년배의 수가 많은 만큼 다른 세대에 비해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서로 간 경쟁수준이 높으며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다(이지연·김소현, 2010; 송태민·진달래, 2013). 따라서 이러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자살률은 실제 자살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살에 대한 가족 및 주변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사망 사고를 조사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찰청의 자살자 수와 가족의 신고 및 의

사진단서에 기반하여 수집된 통계청의 자살자 수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실제 한국 사회가 지닌 자살 문제는 드러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자살률의 자료구성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참고문헌

- 경찰청. (2007). 자살자 현황-안경률 의원 요청 국회 제출 자료. Retrieved 03.25, 2013, from <http://www.police.go.kr/assembly/bbs/list.do?bbsId=B0000061&menuNo=800002>. 2013.03.25.
- _____. (2013). 최근 5년간 자살률, 자살 시도수, 지역권 분포도, 자살 방법, 자살 원인 관련 데이터-박덕흠 의원 요청 국회 제출 자료. Retrieved 3.25, 2013, from <http://www.police.go.kr/assembly/bbs/list.do?bbsId=B0000061&menuNo=800002>
- 강영호·황인아·윤성철·이무송·이상일·조민우·이민정. (2005). 센서스인구 대 주민등록인구: 지역별 사망률 연구에서 어느 인구를 분모로 사용하여야 하나. *예방의학회지*, 38(2): 147-153.
-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6.
- 권중돈·엄태영·김유진. (2012).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독감의 영향 및 무망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89-114.
- 고경환 외. (2009).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대명기획.
- 김민영·정광호·금현섭. (2011). 경제위기와 자살률 간 탐색적 연구: 15개 시도 성별·연령별 자살률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273-302.
- 김봉근·윤상철. (2010).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의 경제구조에 미친 단기영향과 경기회복 매커니즘 분석. *經濟研究*, 28(3): 1-25.
- 김승용. (2004).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81-205.
- 김윤희·조영태. (2008). 지역특성이 취약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인구학*, 31(1): 5-30.
- 김현경. (2010). 반복 자살 시도자의 생존 경험.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형수. (2002). 미국 노인자살과 예방대책의 연구 및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18(1): 163-182.
- 김형용. (2009). 지역사회 빈곤과 배제: 사회적 신뢰는 중요한가? -57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203-226.
- 김효창. (2006). 성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5-33.
- 노용환. (2006). 자살의 경제학적 분석 - 우리나라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접근. *經濟學研究*, 54(3): 177-200.
- 류석춘·김용민. (2000).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12(2): 5-38.
- 류석춘·왕혜숙. (2006). *참여연대 보고서*. 서울: 자유기업원.
- 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7: 203-269.
- 문화체육관광부. (2008a).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관종별 통계항목. http://www.libsta.go.kr/potal/bbsMng.do?task=get&brd_seq=544&brd_sctn=P1. 2013.05.09.접속
- _____. (2008b). *200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주)계문사.
- 민인식·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 박유진·김명희·권순만·신영진. (2009). 공공사회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예방의학학회지*, 42(2): 123-129.
- 박재영·채유미·정상혁·문기태. (2008). 인구사회적 요인, 암, 일부 전신질환 등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별 분석. *예방의학학회지*, 41(1): 51-60.
- 박지영. (2007). 노인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태정. (2010). 균형적 관점에서 본 사회자본의 재검토 및 개발방향. *社會保障研究*, 26(4): 525-552.
- 송재룡. (2008).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하여. *사회이론*, 34(0): 123-164.
- 송태민·진달래. (2013).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상진·조영태. (2007). 사회자본과 자살충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4(3): 35-49.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 유정균. (2008).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가족불안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1995-2005. *한국인구학*, 31(2): 21-44.
- 이민아·김석호·박재현·심은정. (2010). 사회적 관계 내 자살경험과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2): 61-84.
- 이소정. (2010).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6(4): 1-19.
- 이지연·김소현 (2010). 한국의 자살. *한국사회학*, 44(4): 63-94.
- 이재열. (2007).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 정운찬·조홍식 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재혁·박준식. (2000). 한국인의 사회 연결망과 연고주의. *아시아문화*(15): 117-141.
- 이철우. (2005). 한국에서의 노인문제와 노인소득보장제도: 영국·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평화*, 2(2): 188-231.
- 이현주·강신욱. (2009). 경제위기 시 빈곤율 추정 및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분석. *사회보장연구*, 25(4): 51-75.
- 임미영. (2010). 노인 자살시도 경험에 관한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서산.
- 임정수·홍진표 외. (2008).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 예방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전라북도. (2013). 비영리민간단체 점검결과 후속조치 추진. 2013.04.15. 공고
- 정병은·장미혜. (2008).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자본 실태와 특성. 류석춘 외.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199-246
- 정상혁. (2005).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재기. (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국제간 비교의 맥락에서. *한국인구학*, 30(3): 157-178.
- 정진성. (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 하미옥·김장락·정백근·강윤식·박기수. (2013). 사망률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참여와 신뢰의 자살 생각 및 시도와 연관성. *농촌의학·지역보건* 38(2): 116-129.
- 하용삼·문재원. (2011). 공공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哲學論叢* 66: 421-451.
- 현승숙·금현섭. (2011).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에 따른 주민참여. *한국행정학보* 45(2): 159-187.
- 홍성철·김문두·이상이. (2003). 사회계층이 자살 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4, 249-271.

-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서울: 삼영DP
- 통계청. (2009).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 _____. (2011a). 2010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 _____. (2011b).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여성, 아동, 고령자, 활동제한, 사회활동부문). 보도자료
- _____. (2012). 2011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 국외 참고문헌

- Angst, J., & Ernst, C. (1990). Geschlechtsunterschiede in der Psychiatrie. *Weibliche Identität im Wandel. Studium Generale. 1989/1990*(pp. 69 - 84)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 Barstad, A. (2008). Explaining changing suicide rates in Norway 1948-2004: The role of social integr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1): 47-64.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erkman, L. F., Glass, T., Brissette, I., & Seeman, T. E. (2000). From social integration to health: Durkheim in the new millennium. *Social Science & Medicine, 51*(6): 843-857.
- Berkowitz, B. (1996). Personal and community sustainabil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441-459.
- Blakely, T. A., Atkinson, J., Ivory, V., Collings, S., Wilton, J., & Howden-Chapman, P. (2006). No association of neighbourhood volunteerism with mortality in New Zealand: a national multilevel cohor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981-989.
- Blakely, T. A., Collings, S. C. D., & Atkinson, J. (2003). Unemployment and suicide. Evidence for a causal association?.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7*(8): 594.
- Bourdieu, P. (1979). Les trois états du capital culturel.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30*(1): 3-6.
- _____. (1980). Le capital social: notes provisoires. *Actes de la recherche en*

- sciences sociales, 31: 2-3.
- Burr, J. A., McCall, P. L., & Powell-Griner, E. (1994). Catholic religion and suicide: The mediating effect of divorce. *Social Science Quarterly*, 75(2):300-318.
- Bygren, L. O., Konlaan, B. B., & Johansson, S. E. (1996). Attendance at cultural events, reading books or periodicals, and making music or singing in a choir as determinants for survival: Swedish interview survey of living condi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313(7072): 1577-1580.
- Bygren, L. O., Weissglas, G., Wikstrom, B. M., Konlaan, B. B., Grijibovski, A., Karlsson, A. B., Andersson, S. O., & Sjoström, M. (2009). Cultural Participation and Healt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mong Medical Care Staff. *Psychosomatic Medicine*, 71(4): 469-473.
- Catalano, R., Goldman-Mellor, S., Saxton, K., Margerison-Zilko, C., Subbaraman, M., LeWinn, K., & Anderson, E. (2011). The Health Effects of Economic Decline.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2: 431-450.
- Cattell, V. (2001). Poor people, poor places, and poor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 Medicine*, 52(10): 1501-1516.
- Chang, S. S., Gunnell, D., Sterne, J. A. C., Luc, T. H., & Cheng, A. T. A. (2009). Was the economic crisis 1997-1998 responsible for rising suicide rates in East/Southeast Asia? A time-trend analysis for Japan, Hong Kong,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and Thai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68(7): 1322-1331.
- Chapple, K., & Jackson, S. (2010). Commentary: Arts, Neighborhoods, and Social Practices: Towards an Integrated Epistemology of Community Art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9(4): 478-490.
- Chen, J., Choi, Y. J., Mori, K., Sawada, Y., & Sugano, S. (2012). Socio-Economic Studies on Suicide: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6(2): 271-306.
- Chuang, H. L., & Huang, W. C. (2007). A re-examination of the suicide rates in Taiwa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3(3): 465-485.
- Clark, A. E. (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 323-351.
- Coffe, H., & Geys, B. (2005). 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social capital: An applic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level. *Journal of Urban Affairs*, 27(5): 485-501.
- Coffe, H., & Geys, B. (2006). Community heterogeneity: A burden for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1053-1072.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wgill, D. O. (1986). *Aging around the World*. Wadworth Publishing Co.
- Cowgill, D. O., & Holmes, L. D. (1972). *Aging and modernization*. Appleton-Century-Crofts New York.
- Delhey, J., & Newton, K. (2003). Who trusts?: The origins of social trust in seven societies. *European Societies*, 5(2): 93-137.
- De Silva, M. J., Huttly, S. R., Harpham, T., & Kenward, M. G. (2007).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low income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5-20.
- DiMaggio, P. (1996). Are art-museum visitors different from other peopl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dance and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Poetics*, 24(2-4): 161-180.
- Dixit, A. K. & Pindyck, R. S. (1994).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rentea, P., & Lavrakas, P. J. (2000). Over the limit: the association among health, race and debt. *Social Science & Medicine*, 50(4): 517-529.
- Durkheim, E. (1897)저. 「(에밀 뒤르캬의) 자살론」, 황보중우(역)(2008), 과주: 청아; *Le suicide; étude de sociologie*. Paris; F. Alcan.
- Fine, B. (2001). *Social capital versus social theory: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scienc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London: New York, Routledge.
- Flavin, P. & Radcliff, B. (2009). Public Policies and Suicide Rates in the American St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0(2): 195-209.
- Geys, B., & Murdoch, Z. (2010). Measuring the 'Bridging' versus 'Bonding' Nature of Social Networks: A Proposal for Integrating Existing

- Measures. *Sociology—the Journal of the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44(3): 523–540.
- Girard, C. (1993). Age, gender, and suicide— a corss-nation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4): 553–574.
- Gittel, R. J., & Vidal, A. (1998). *Community organizing: building social capital as a development strate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lass, T. A., & Balfour, J. L. (2003). Neighborhoods, aging, and functional limitations. In Kawachi, I., & Berkman, L.F. (Eds.). *Neighborhoods and health*(pp.303–334).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P. E., Kessler, R. C., Birnbaum, H. G., Leong, S. A., Lowe, S. W., Berglund, A., & Corey-Lisle, P. K. (2003). The economic burden of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How did it change between 1990 and 2000?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4(12): 1465–1475.
- Halpern, D. (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UK: Malden, MA.
- Hamermes, D. S., & Soss, N. M. (1974). Economic theory of suici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1): 83–98.
- Helliwell, J. F.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Economic Journal*, 116(510): C34–C45.
- _____. (2007).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Does suicide pose a puzz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1(3): 455–496.
- Helliwell, J. F., &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enry, A. F., & Short, J. F. (1954). *Suicide and homicide: some economic,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aggression*. Glencoe, Ill.,: Free Press.
- Henstra, D. (2010). Evaluating Local Government Emergency Management Programs: What Framework Should Public Managers Adop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2): 236–246.
- Hintikka, J., Kontula, O., Saarinen, P., Tanskanen, A., Koskela, K., & Viinamaki, H. (1998). Debt and suicidal behaviour in the Finnish general popula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8(6): 493–496.
- Hintikka, J., Saarinen, P., & Viinamaki, H. (1999). Suicide mortality in Finland

- during an economic cycle, 1985–1995: original article.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7(2): 85–88.
- Hooghe, M. and B. Vanhoutte (2011). An Ecological Study of Community-Level Correlates of Suicide Mortality Rates in the Flemish Region of Belgium, 1996–2005.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1(4): 453–464.
- Hopkins, S. (2006). Economic stability and health status: Evidence from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1990s economic crisis. *Health Policy*, 75(3): 347–357.
- Islam, M. K., Gerdtham, U.-G., Gullberg, B., Lindstrom, M., & Merlo, J. (2008). Social capital externalities and mortality in Sweden. *Economics & Human Biology*, 6(1): 19–42.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Kawachi, I. (2006). Commentary: Social capital and health: making the connections one step at a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989–993.
- Kawachi, I., & Berkman, L. F. (2001).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78(3): 458–467.
- Kessler, R. C., Borges, G., & Walters, E. E.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7): 617–626.
- Khang, Y. H., Lynch, J. W., & Kaplan, G. A. (2005).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cause-specific mortalit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4(6): 1291–1301.
- Kim, D., Subramanian, S. V., & Kawachi, I. (2006). Bonding versus bridging social capital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elf rated health: a multilevel analysis of 40 US communitie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0(2): 116–122.
- Koivumaa-Honkanen, H., Honkanen, R., Viinamaki, H., Heikkila, K., Kaprio, J., & Koskenvuo, M. (2001).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 20-year fol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3): 433–439.
- Konlaan, B. B., Bygren, L. O., & Johansson, S. E. (2000). Visiting the cinema, concerts, museums or art exhibitions as determinant of survival: a

- Swedish fourteen-year cohort follow-up.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8(3): 174-178.
- Koo, J. & Cox, W. M. (2008).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Suicide Cycles in Japan.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6(1): 162-174.
- Kposowa, A. J. (2003). Divorce and suicide risk.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12): 993-993.
- Kunce, M., & Anderson, A. L. (2002). The impa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state suicide rates: A methodological note. *Urban Studies*, 39(1): 155-162.
- Kwak, N., Shah, D. V., & Holbert, R. L. (2004). Connecting, trusting, and participating: The direct and interactive effects of social associa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7(4): 643-652.
- Lacourse, E., Claes, M., & Villeneuve, M. (2001). Heavy metal music and adolescent suicidal risk.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3): 321-332.
- Leonard, M. (2004).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Reflections from Belfast. *Sociology* 38(5): 927-944.
- Li, Z. Y., Page, A., Martin, G., & Taylor, R. (2011). Attributable risk of psychiatric and socio-economic factors for suicide from individual-level, population-based studies: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72(4): 608-616.
- Lochner, K., Kawachi, I., & Kennedy, B. P. (1999). Social capital: a guide to its measurement. *Health & Place*, 5(4): 259-270.
- Norris, P., & Inglehart, R. (2006). Gendering Social Capital: Bowling in Women's Leagues?. In O'Neill, B., & Gidengil, E. (Eds.). *Gender and social capital*,(pp.73-98). New York: Routledge.
- Lynch, J. W., Smith, G. D., Kaplan, G. A., & House, J. S. (2000).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importance to health of individual income, psychosocial environment, or material condi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320(7243): 1200-1204.
- Masaryk, T. G. (1970). [1881]. *Suicide and the meaning of civil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ulloch, A., Mohan, J., & Smith, P. (2012). Patterns of social capital, voluntary activity, and area deprivation in England. *Environment and*

- Planning A, 44(5): 1130–1147.
- McIntosh, J. L. (1992). Epidemiology of Suicide in the Elderl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2(1): 15–35.
- _____. (1995). Suicide-prevention in the elderly (AGE 65–99).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1): 180–192.
- _____. (2002). *U.S.A. Suicide Statistics for the Year 1999: Overheads and a Presentation Guide*.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 Michalos, A. C., & Kahlke, M. (2010). Arts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British Columbia.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1): 1–39.
- Miller, J. R., Piper, T. M., Ahern, J., Tracy, M., Tardiff, K. J., Vlahov, D., & Galea, S. (2005). Income inequality and risk of suicide in New York City neighborhoods: A multilevel case-control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4): 448–459.
- Minagawa, Y. (2013). The Social Consequences of Postcommunist Structural Change: An Analysis of Suicide Trends in Eastern Europe. *Social Forces* 91(3): 1035–1056.
- Minoiu, C., & Andres, A. R. (2008). The effect of public spending on suicide: Evidence from US state data. *Journal of Socio-Economics*, 37(1): 237–261.
- Mitchell, C. U., & LaGory, M. (2002). Social Capital and Mental Distress in an Impoverished Community. *City & Community*, 1(2): 199–222.
- Morselli, E. A. (1882). *Suicide: An Essay on Comparative Moral Statistics*. New York: Appleton.
- Möller-Leimkühler, A. M. (2003). The gender gap in suicide and premature death or: why are men so vulnerable?.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3(1): 1–8.
- Nelson, B. J., Kaboolian, L., & Carver, K. A. (2003). *The Concord Handbook: How to Build Social Capital Across Communities: Concord Project*, UCLA School of Public Policy and Social Research.
- Neumayer, E. (2004). Recessions lower (some) mortality rates:: evidence from Germany. *Social Science & Medicine*, 58(6): 1037–1047.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 40(5): 575–586.
- _____.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 W. V. Deth, M. Maraffi, K. Newton & P. F.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New York: Routledge.
- Noh, Y. H. (2009). Does unemployment increase suicide rates? The OECD panel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4): 575–582.
- Norstrom, T., & Skog, O. J. (2001). Alcohol and mortality: methodological and analytical issues in aggregate analyses. *Addiction*, 96, S5–S17.
- Pearson, V. (1995). Goods on which one loses: Women and mental health in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41(8): 1159–1173.
- Phillips, M. R., Xianyun, L., & Yanping, Z. (2002). Suicide rates in China, 1995–99. *The Lancet* 359(9309): 835–840.
- Platt, S., Micciolo, R., & Tansella, M. (1992). Suicide and unemployment in Italy—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cent trends. *Social Science & Medicine*, 34(11): 1191–1201.
- Poortinga, W. (2006). Social capital: An individual or collective resource for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62(2): 292–302.
- Portes, A. & Vickstrom, E. (2011). Diversity, Social Capital, and Cohes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7. K. S. Cook and D. S. Massey. Palo Alto, Annual Reviews. 37: 461–479.
- Preston, S. H., Heuvelin, P., Guillot, M. (2001). *Demography: mea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es*. Malden, MA;Blackwell Publishers.
- Preti, A. (2003). Unemployment and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8): 557–558.
- Preti, A., & Miotto, P. (1999). Social and economic influence on suicide: A study of the situation in Ital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5(2): 141–156.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13, 35–42.
- _____.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_____.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41-51.
- _____. (2004). Commentary: 'Health by association': some com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667-671.
- Putnam, R. D., Leonardi, R., & Nanetti,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Quetelet, A. J. (1842). *A Treatise on Man and the Development of His Faculties*. Edinburgh, UK: Chambers.
- Rehkopf, D. H., & Buka, S. L.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e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area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cal Medicine*, 36(2): 145-157.
- Rice, T. W. & Sumberg, A. F. (1997). Civic Culture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the American States. *Publius* 27(1): 99-114.
- Ross, J. M., Yakovlev A., & Carson, F. (2010). Does state spending on mental health lower suicide rates? *Journal of Socio-Economics*. 41(4): 408-417.
- Ruhm, C. J. (2000). Are recessions good for your heal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2): 617-650.
- Schutt, R. K., Meschede, T., & Rierdan, J. (1994). Distress, Suicidal Thoughts,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2): 134-142.
- Smith, K. P. & Christakis, N. A. (2008). Social networks and heal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Palo Alto, Annual Reviews. 34: 405-429.
- Snipes, J. B., & Maguire, E. R. (1995). Country-music, Suicide, and Spuriousness. *Social Forces*, 74(1): 327-329.
- Sobel, J. (2002). Can We Trust Social Capita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1): 139-154.
- Stack, S. (2000a).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45-162.
- _____. (2000b).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I: Modern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63-176.

- Stack, S., Gundlach, J., & Reeves, J. L. (1994). The Heavy-Metal Subculture and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1): 15-23.
- Staricoff, R. L., & England, A. C. (2004). *Arts in health: A review of medical literature*. Arts Council England.
- Stolle, D. (2003).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In M. Hooghe & 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 19-42).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tolle, D., & Rochon, T. R.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47.
- Twigg, L., Barnard, S., Mohan, J., & Jones, K. (2006). Developing and evaluating small-area indicators of the neighbourhood social environ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11): 2173-2192.
- van Hooijdonk, C., Droomers, M., Deerenberg, I. M., Mackenbach, J. P., & Kunst, A. E. (2008). The diversity in associations between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health per health outcome, population group and location studied.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7(6): 1384-1392.
- Wikström, B. M., Theorell, T., & Sandström, S. (1993). Medical Health and Emotional Effects of Art Stimulation in Old Ag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0(3-4): 195-206.
- Wilkinson, R. G. (2005)저. 「평등해야 건강하다: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김홍수영(역)(2008). 서울: 후마니타스;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New York: New Press
- Wray, M., Colen, C., & Pescosolido, B. Cook, K. S., & Massey, D. S. (2011). The Sociology of Suicid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505-528.
- Yang, B. and D. Lester (2009). Is there a natural suicide rate? *Applied Economics Letters* 16(2): 137-140.
- Yip, P. F., Liu, K., Hu, J., & Song, X. M. (2005). Suicide rates in China during a decade of rapid social chang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0(10): 792-798.
- Yip, P. S. F., & Caine, E. D. (2011). Employment status and suicide: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changing unemployment rates and death rate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5(8): 733-736.

- Yip, P. S. F., Yang, K. C. T., Ip, B. Y. T., Law, Y. W., & Watson, R. (2007). Financial debt and suicide in Hong Kong SA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12): 2788–2799.
- Yur'yev, A., Värnik, A., Värnik, P., Sisask, M., & Leppik, L. (2011). Role of social welfare in European suicide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 Zhang, J. (2010). Marriage and Suicide among Chinese Rural Young Women. *Social Forces, 89*(1): 311–326.
- Zimmerman, F. J., & Katon, W. (2005). Socioeconomic status, depression disparities, and financial strain: what lies behind the income–depression relationship? *Health Economics, 14*(12): 1197–1215.
- Zimmerman, S. L. (2002). States' spending for public welfare and their suicide rates, 1960 to 1995: What is the problem?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6): 349–360.

부 록

<부록 1> 표준인구: 2005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연령 | 2005년 표준인구(명) | 가중치 |
|---------|---------------|----------|
| 계 | 48,683,040 | 1.000000 |
| 0세 | 432,539 | 0.008885 |
| 1 - 4 | 2,098,626 | 0.043108 |
| 5 - 9 | 3,297,888 | 0.067742 |
| 10 - 14 | 3,532,630 | 0.072564 |
| 15 - 19 | 3,137,403 | 0.064445 |
| 20 - 24 | 3,802,951 | 0.078117 |
| 25 - 29 | 3,894,504 | 0.079997 |
| 30 - 34 | 4,440,950 | 0.091222 |
| 35 - 39 | 4,418,296 | 0.090756 |
| 40 - 44 | 4,338,463 | 0.089117 |
| 45 - 49 | 3,986,582 | 0.081889 |
| 50 - 54 | 2,829,604 | 0.058123 |
| 55 - 59 | 2,249,970 | 0.046217 |
| 60 - 64 | 1,997,903 | 0.041039 |
| 65 - 69 | 1,676,881 | 0.034445 |
| 70 - 74 | 1,162,612 | 0.023881 |
| 75 ~ 79 | 727,179 | 0.014937 |
| 80 - 84 | 416,340 | 0.008552 |
| 80세이상 | 658,064 | 0.013516 |
| 85세이상 | 241,724 | 0.004965 |

<부록 2-1> 연도별 연령표준화 전체 자살률 하위 15대 지역(1)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
| 전국 | 23.41 | 24.2 | 24.67 | 21.33 |
| 서울 | 서초구(8.76) 강남구(11.83) 서대문구(14.58) 마포구(14.76) 동작구(14.96) 송파구(15.41) 성북구(15.72) | 종로구(12.2) 송파구(14.15) 서초구(15.23) 양천구(15.82) 강남구(16.68) 성북구(17.19) 영등포구(17.37) 광진구(17.45) 수성구(17.53) | 동작구(14.96) 양천구(16.22) 성동구(16.94) | 강남구(11.3) 서울중구(12.45) 서대문구(13.86) 관악구(13.95) 동작구(14.02) 도봉구(14.33) 강북구(14.57) |
| 부산 | 부산중구(15.25) 동래구(15.79) 수영구(15.95) | 부산남구(16.24) | | |
| 대구 | 대구중구(13.5) | | 대구중구(16.62) | |
| 인천 | | 연수구(16.71) | 옹진군(11.35) | |
| 울산 | | | | 울산동구(13.79) |
| 경기도 | 과천시(11.67) | 하남시(15.05) | 과천시(8.92) | |
| 충북 | | | 보은군(16.38) 증평군(16.65) | |
| 충남 | 계룡시(6.67) | | | |
| 전북 | 무주군(4.45) | | 남원시(16.55) | 진안군(9.45) 순창군(13.02) |
| 전남 | | 곡성군(15.42) 순천시(17.27) 완도군(17.78) | 완도군(13.33) 영암군(13.83) 무안군(16.64) | 구례군(12.79) 완도군(13.28) 고흥군(13.44) 여수시(13.94) 광양시(14.65) |
| 경북 | 영덕군(9.12) | | 울릉군(0) 고령군(16.33) | |
| 경남 | | | 거창군(16.7) | |

<부록 2-2> 연도별 연령표준화 전체 자살률 하위 15대 지역(2)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국 | 23.93 | 24.74 | 29.06 | 28.49 |
| 서울 | 종로구(14.87) 서초구(17.18) 서울중구(17.27) | 구로구(15.45) 양천구(16.49) 송파구(17.54) 광진구(17.71) | 서초구(15.12) 서대문구(18.09) 동작구(19.68) 송파구(20.99) 강남구(21.35) 광진구(21.34) | 마포구(18.94) 송파구(19.09) 서대문구(20.59) 서초구(21.11) 용산구(21.23) |
| 부산 | 수영구(16.44) | | | |
| 인천 | | 옹진군(17.43) | | |
| 울산 | 울산동구(13.64) | | 울산중구(19.51) 고양시(21.73) | 울산동구(21.32) 울주군(21.39) |
| 경기도 | 의왕시(8.68) 과천시(13.09) 안양시(15.64) | 안양시(14.83) 과천시(16.1) | 군포시(16.55) | 과천시(16.66) |
| 충남 | | | 금산군(20) | 계룡시(14.46) |
| 전남 | 구례군(12.59) 진도군(15.99) 여수시(16.35) 영암군(17.19) | 여수시(17.77) 순천시(18.34) 곡성군(16.58) | 진도군(16.87) 장흥군(21.94) | 완도군(16.59) 순천시(20.09) 영암군(20.47) 진도군(21.75) |
| 경북 | 울릉군(10.93) 울진군(13.49) 칠곡군(15.3) | 울릉군(5.96) 고령군(9.94) 문경시(18.26) | 울릉군(0) 청송군(15.33) 상주시(21.15) | 영주시(21.47) |
| 경남 | | 함양군(8.4) 의령군(15.9) | | 남해군(18.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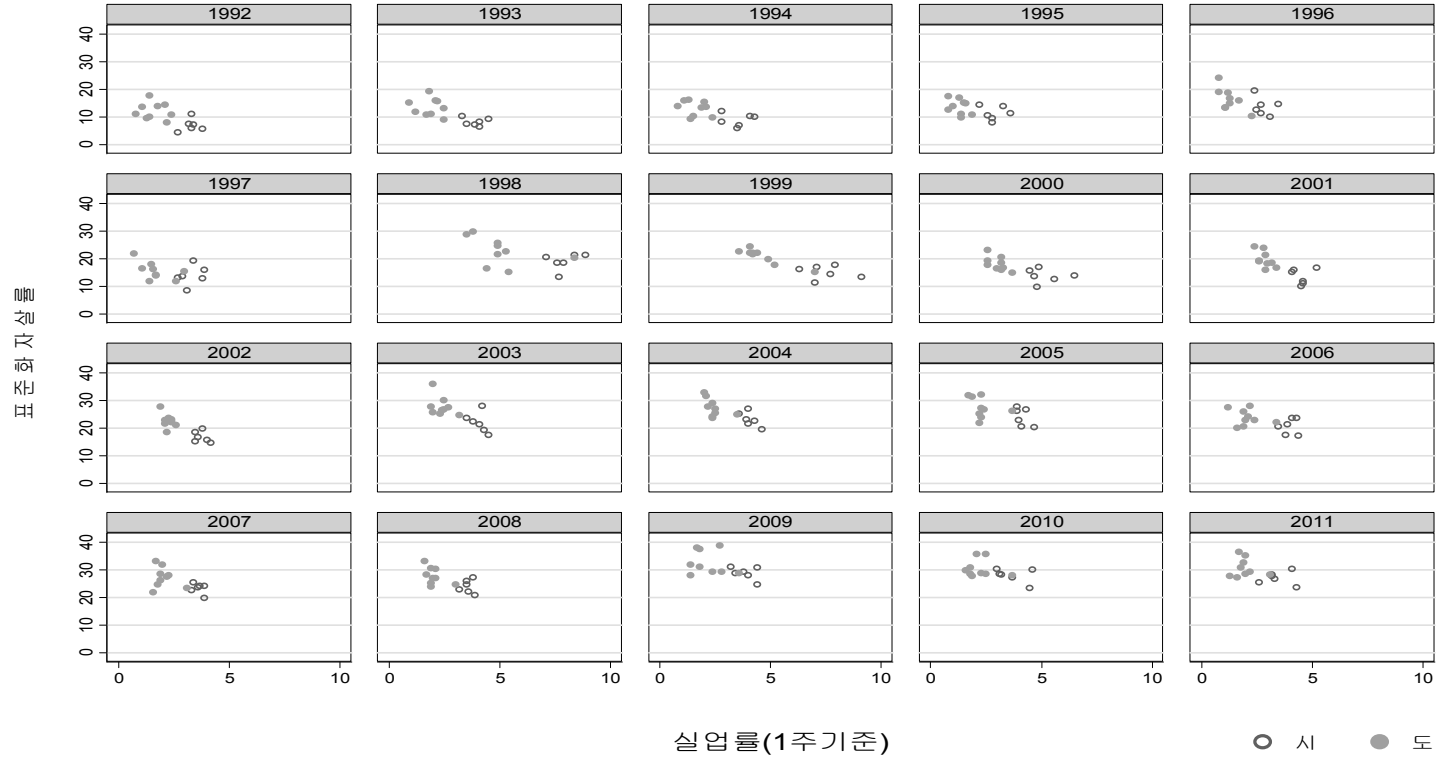
<부록 2-3> 연도별 연령표준화 전체 자살률 상위 15대 지역(1)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
| 전국 | 23.41 | 24.2 | 24.67 | 21.33 |
| 부산 | | 부산중구(56.54) | | |
| 인천 | 인천동구(42.24) | 옹진군(44.29) | | 옹진군(73.7) |
| 경기 | | | 연천군(52.69) 가평군(45.2) 동두천시(42.93) | 포천시(35.63) |
| 강원 | 양양군(56.97) 화천군(53.45) 횡성군(52.13) 양구군(51.34) 홍천군(50.38) 정선군(44.82) 철원군(43.82) 삼척시(41.11) | 영월군(57.83) 양구군(57.46) 홍천군(48.27) 인제군(46.27) 양양군(44.98) 평창군(44.49) | 철원군(51.71) 양양군(51.49) 강원고성군(47.6) 화천군(42.47) | 철원군(37.89) 정선군(37.76) 평창군(37.31) 영월군(35.63) 횡성군(35.59) |
| 충북 | 괴산군(41.18) | 보은군(53.94) | 괴산군(50.62) | 괴산군(54.25) 단양군(39.38) |
| 충남 | | 홍성군(45.6) | 청양군(45.44) 공주시(41.67) | 청양군(52.51) 금산군(35.64) |
| 전북 | 김제시(46.38) | 김제시(45.99) | | 부안군(41.4) |
| 전남 | 신안군(68.7) 진도군(40.81) | 함평군(50.4) 장성군(45.69) | 신안군(41.65) | 장흥군(45.84) |
| 경북 | 울릉군(48.36) 봉화군(46.94) | 청송군(69.28) 울릉군(56.7) | 청도군(45.51) | 군위군(41.43) |
| 경남 | | | 경남고성군(45.9) 산청군(44.36) 창녕군(43.97) | 창녕군(37.98) |

<부록 2-4> 연도별 연령표준화 전체 자살률 상위 15대 지역(2)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국 | 23.93 | 24.74 | 29.06 | 28.49 |
| 인천 | | | | 강화군(48.78) |
| 경기 | | | | 가평군(53.3) |
| 강원 | 정선군(64.31) 양양군(41.5) 철원군(39.71) 횡성군(39.49) | 화천군(52.42) 강원고성군(51.16) 정선군(48.25) 횡성군(47.41) | 영월군(66.78) 강원고성군(53.27) 양양군(52.07) 평창군(51.13) 철원군(50.31) 정선군(48.59) | 홍천군(58.86) 정선군(56.12) 화천군(52.96) 강원고성군(49.38) 횡성군(47.86) 속초시(45.85) 무주군(44.52) |
| 충북 | 진천군(42.54) | 괴산군(49.54) 단양군(48.37) 제천시(41.96) | 괴산군(56.61) 진천군(50.62) 옥천군(50.52) | |
| 충남 | 태안군(46.5) 서산시(41.54) 공주시(40.65) 보령시(40.28) | 보령시(40.54) | 청양군(75.84) 태안군(62.11) 예산군(51.75) | 예산군(58.19) 서산시(51.13) |
| 전북 | 임실군(39.87) | 장수군(52.36) 임실군(46.43) 고창군(42.12) | 순창군(49.98) 김제시(48.86) | 남원시(46.29) |
| 전남 | | 영광군(46.22) | | |
| 경북 | 영양군(51.72) 봉화군(49.63) 예천군(46.75) 함안군(43.03) 청도군(39.93) | | 예천군(47.82) | 청송군(55.37) 예천군(48.61) |
| 경남 | | 함안군(47.4) 창녕군(40.84) 경남고성군(40.71) | | 합천군(56.69) |

<부록 3-1> 연도별 전체자살률과 실업률 간 산점도



<부록 3-2> 연도더미를 제외한 분석결과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65세 이상) 자살률 | | | 청년층(15-34세) 자살률 | | | 장년층(35-64세)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경제적 특성 | 1인당 GRDP | -0.615 (3.211) | -1.131 (4.608) | 0.742 (2.565) | -2.844 (13.483) | -4.331 (22.114) | -6.957 (10.376) | 5.409 (3.997) | 8.663 (5.273) | 4.057 (3.763) | -4.729 (4.997) | -9.286 (7.818) | 0.520 (3.322) |
| | 실업률 | 0.304* (0.179) | 0.626** (0.256) | 0.021 (0.150) | -0.303 (0.724) | -0.389 (1.241) | -0.945* (0.573) | 0.254 (0.226) | 0.345 (0.294) | 0.301 (0.225) | 0.726*** (0.277) | 1.264*** (0.434) | 0.174 (0.195) |
| | 산업화수준 | -0.454*** (0.131) | -0.647*** (0.189) | -0.227** (0.105) | 0.981* (0.551) | 1.899** (0.905) | 0.729* (0.423) | -1.042*** (0.163) | -1.439*** (0.215) | -0.619*** (0.155) | -0.521** (0.204) | -0.799** (0.319) | -0.274** (0.136) |
| 사회통합 수준 | 조이혼율 | 1.103** (0.528) | 2.885*** (0.780) | -1.036** (0.429) | 6.744*** (2.151) | 4.732 (3.784) | 6.302*** (1.664) | -1.656*** (0.636) | 0.496 (0.829) | -4.879*** (0.623) | 2.227*** (0.783) | 4.572*** (1.226) | -0.678 (0.543) |
| | 조출생률 | -0.545*** (0.204) | -0.648** (0.288) | -0.549*** (0.166) | -2.293*** (0.849) | -4.398*** (1.388) | -1.689** (0.662) | 0.036 (0.250) | 0.277 (0.327) | -0.423* (0.241) | -0.705** (0.309) | -0.956** (0.484) | -0.572*** (0.211)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319*** (0.248) | -1.824*** (0.352) | -0.681*** (0.217) | -1.292 (0.962) | -2.775 (1.728) | -0.924 (0.783) | -1.431*** (0.312) | -2.087*** (0.399) | -0.482 (0.325) | -1.830*** (0.375) | -2.611*** (0.589) | -0.868*** (0.278) |
| | 세대규모 | -21.555*** (3.914) | -22.707*** (6.220) | -17.004*** (2.872) | -78.705*** (16.755) | -117.484*** (29.622) | -48.276*** (11.798) | -21.525*** (3.155) | -21.558*** (4.174) | -19.492*** (2.950) | -28.052*** (3.959) | -39.182*** (6.191) | -15.155*** (2.610) |
| 지역사회 특성 | 노인인구비 (전체:남성:여성) | -0.007 (0.287) | 0.500 (0.587) | -0.262 (0.172) | -3.715*** (1.214) | -7.288*** (2.802) | -2.462*** (0.689) | | | | | | |
| |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 -0.997 (0.743) | -1.844* (1.070) | -0.479 (0.597) | -0.460 (3.094) | 0.708 (5.145) | -0.512 (2.390) | -1.381 (0.916) | -2.696** (1.209) | -0.691 (0.860) | -0.975 (1.145) | -1.784 (1.791) | -0.685 (0.760) |
| 상수항 | cons | 184.644*** (15.028) | 228.731*** (22.408) | 121.668*** (15.353) | 305.568*** (48.424) | 482.003*** (115.438) | 204.813*** (43.290) | 219.508*** (17.088) | 269.638*** (20.222) | 148.820*** (22.877) | 246.537*** (18.607) | 358.125*** (29.394) | 126.128*** (17.964) |
| R2 | within | 0.749 | 0.692 | 0.756 | 0.643 | 0.685 | 0.589 | 0.470 | 0.326 | 0.625 | 0.660 | 0.613 | 0.662 |
| | between | 0.346 | 0.382 | 0.181 | 0.158 | 0.131 | 0.183 | 0.623 | 0.685 | 0.322 | 0.344 | 0.348 | 0.313 |
| | overall | 0.663 | 0.625 | 0.648 | 0.556 | 0.493 | 0.453 | 0.293 | 0.316 | 0.239 | 0.665 | 0.637 | 0.583 |
| F값 | | 86.358 | 65.187 | 89.888 | 52.201 | 63.097 | 41.476 | 29.061 | 15.806 | 54.591 | 63.646 | 51.786 | 64.277 |
| 관찰치 |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285 |

주: 1) *** p<0.01, ** p<0.05,

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3) 1992-2011년 시도 자료

<부록 3-3> 연도더미를 제외한 분석결과: 시 지역

| 시 지역 분석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65세 이상) 자살률 | | | 청년층(15-34세) 자살률 | | | 장년층(35-64세)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경제적 특성 | 1인당 GRDP | -6.343 (7.906) | -8.304 (12.072) | -8.996 (6.073) | -40.983 (28.799) | -65.811 (45.992) | -24.643 (25.655) | 1.534 (9.208) | 11.178 (12.758) | -7.166 (10.871) | -13.250 (12.266) | -16.647 (19.992) | -10.950 (7.167) |
| | 실업률 | -0.204 (0.295) | -0.016 (0.451) | -0.425* (0.227) | -2.838*** (1.075) | -4.249** (1.718) | -2.184** (0.958) | -0.048 (0.345) | -0.069 (0.482) | -0.017 (0.408) | 0.084 (0.459) | 0.636 (0.747) | -0.453* (0.269) |
| | 산업화수준 | -0.308 (0.493) | -0.105 (0.740) | -0.423 (0.381) | -1.251 (1.801) | -0.379 (2.861) | -2.126 (1.607) | -0.586 (0.558) | -1.351* (0.745) | -0.139 (0.662) | -0.561 (0.738) | -0.403 (1.202) | -0.605 (0.436) |
| 사회통합 수준 | 조이혼율 | 0.084 (0.773) | 1.773 (1.145) | -1.333** (0.619) | 4.149 (2.868) | 4.581 (4.703) | 4.175* (2.526) | -1.537* (0.877) | 1.855* (1.091) | -3.972*** (1.070) | -0.039 (1.122) | 1.024 (1.822) | -1.192* (0.705) |
| | 조출생률 | -0.814** (0.378) | -1.002* (0.550) | -0.486 (0.306) | -3.827*** (1.418) | -7.087*** (2.381) | -1.868 (1.232) | 0.225 (0.408) | 0.980** (0.485) | -0.342 (0.500) | -0.654 (0.517) | -0.937 (0.838) | -0.300 (0.329)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249*** (0.443) | -1.526** (0.636) | -0.763** (0.368) | -2.844* (1.667) | -6.260** (2.772) | -1.044 (1.465) | -1.455*** (0.513) | -2.053*** (0.583) | -1.121* (0.636) | -1.270** (0.643) | -1.545 (1.041) | -0.808* (0.418) |
| | 세대규모 | -19.981** (8.615) | -15.051 (13.285) | -25.974*** (6.584) | -89.557*** (31.985) | -135.704** (54.714) | -64.339** (26.874) | -29.329*** (6.854) | -31.566*** (9.148) | -30.239*** (8.199) | -37.794*** (8.993) | -47.699*** (14.635) | -28.923*** (5.403) |
| 지역사회 특성 | 노인인구비 (전체:남성:여성) | 0.753 (0.555) | 2.037* (1.048) | -0.151 (0.353) | -3.609* (2.047) | -6.781 (4.144) | -2.968** (1.453) | | | | | | |
| |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 -5.636*** (1.811) | -7.408*** (2.700) | -3.812*** (1.443) | -10.157 (6.717) | -18.349 (11.183) | -6.327 (5.896) | -5.514*** (2.086) | -9.287*** (2.712) | -2.321 (2.521) | -5.508** (2.706) | -6.815 (4.400) | -4.551*** (1.661) |
| 상수항 | cons | 187.108*** (56.048) | 169.468** (71.058) | 201.500*** (53.883) | 744.502*** (223.788) | 1,093.523*** (395.062) | 590.738*** (191.465) | 222.245*** (55.922) | 293.110*** (40.827) | 151.986** (74.586) | 290.681*** (63.408) | 335.859*** (101.551) | 232.255*** (48.975) |
| R2 | within | 0.833 | 0.735 | 0.855 | 0.791 | 0.785 | 0.641 | 0.702 | 0.451 | 0.716 | 0.737 | 0.662 | 0.803 |
| | between | 0.046 | 0.145 | 0.004 | 0.428 | 0.481 | 0.279 | 0.284 | 0.057 | 0.503 | 0.003 | 0.000 | 0.164 |
| | overall | 0.698 | 0.680 | 0.695 | 0.747 | 0.725 | 0.633 | 0.303 | 0.090 | 0.600 | 0.648 | 0.602 | 0.658 |
| F값 | | 54.905 | 30.568 | 64.936 | 41.647 | 40.065 | 19.656 | 29.399 | 10.274 | 31.537 | 34.993 | 24.517 | 50.995 |
| 관찰치 |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주: 1) *** p<0.01, ** p<0.05,

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3) 1992-2011년 자료

<부록 3-4> 연도더미를 제외한 분석결과: 도 지역

| 도 지역 분석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65세 이상) 자살률 | | | 청년층(15-34세) 자살률 | | | 장년층(35-64세)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경제적 특성 | 1인당 GRDP | -0.581 (3.459) | -0.945 (4.886) | 1.312 (2.916) | 3.746 (15.532) | 19.462 (26.107) | -8.711 (11.727) | 4.462 (4.666) | 7.053 (5.984) | 3.937 (4.460) | -5.628 (5.319) | -10.925 (8.192) | 0.329 (3.912) |
| | 실업률 | 0.503** (0.256) | 0.920** (0.362) | 0.132 (0.227) | -0.269 (1.040) | -0.182 (1.890) | -1.253 (0.817) | 0.489 (0.351) | 0.764* (0.454) | 0.368 (0.351) | 1.082*** (0.395) | 1.700*** (0.610) | 0.452 (0.310) |
| | 산업화수준 | -0.320* (0.166) | -0.525** (0.233) | -0.107 (0.142) | 0.229 (0.710) | 0.312 (1.235) | 0.369 (0.547) | -0.795*** (0.224) | -1.150*** (0.289) | -0.389* (0.217) | -0.232 (0.255) | -0.426 (0.393) | -0.040 (0.191) |
| 사회통합 수준 | 조이혼율 | 1.890*** (0.721) | 3.877*** (1.056) | -0.657 (0.616) | 6.475** (3.027) | 0.572 (5.545) | 6.852*** (2.320) | -1.690* (0.932) | -0.053 (1.200) | -4.632*** (0.911) | 4.330*** (1.055) | 8.088*** (1.627) | 0.098 (0.802) |
| | 조출생률 | -0.565** (0.255) | -0.670* (0.355) | -0.563*** (0.217) | -2.095* (1.153) | -3.681* (1.898) | -1.946** (0.875) | 0.108 (0.340) | 0.109 (0.437) | -0.090 (0.326) | -0.792** (0.388) | -1.041* (0.597) | -0.678** (0.286)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476*** (0.308) | -2.179*** (0.436) | -0.616** (0.279) | -0.489 (1.193) | -1.080 (2.258) | -0.651 (0.957) | -1.458*** (0.414) | -2.277*** (0.537) | -0.297 (0.419) | -2.346*** (0.465) | -3.545*** (0.719) | -0.993*** (0.370) |
| | 세대규모 | -18.673*** (4.611) | -21.645*** (7.076) | -13.281*** (3.593) | -99.366*** (21.891) | -138.643*** (38.404) | -57.355*** (15.140) | -18.729*** (3.966) | -17.871*** (5.068) | -17.542*** (3.720) | -21.466*** (4.546) | -30.371*** (6.992) | -10.139*** (3.254) |
| 지역사회 특성 | 노인인구비 (전체:남성:여성) | -0.024 (0.324) | 0.214 (0.674) | -0.174 (0.204) | -4.466*** (1.469) | -7.697** (3.625) | -2.647*** (0.805) | | | | | | |
| |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 -0.334 (0.843) | -0.773 (1.192) | -0.136 (0.715) | -1.870 (3.692) | -1.298 (6.345) | -1.218 (2.811) | -0.487 (1.122) | -1.312 (1.440) | 0.065 (1.074) | 0.187 (1.278) | -0.030 (1.969) | -0.003 (0.942) |
| 상수항 | cons | 168.179*** (19.245) | 226.676*** (29.204) | 93.807*** (20.067) | 391.381*** (50.234) | 557.789*** (140.404) | 267.873*** (46.577) | 186.329*** (22.526) | 240.176*** (30.052) | 107.046*** (26.638) | 222.961*** (24.140) | 337.197*** (37.760) | 96.349*** (24.098) |
| R2 | within | 0.776 | 0.745 | 0.742 | 0.624 | 0.701 | 0.598 | 0.363 | 0.281 | 0.488 | 0.717 | 0.685 | 0.640 |
| | between | 0.046 | 0.021 | 0.073 | 0.366 | 0.250 | 0.512 | 0.368 | 0.406 | 0.175 | 0.004 | 0.004 | 0.001 |
| | overall | 0.695 | 0.631 | 0.686 | 0.768 | 0.752 | 0.735 | 0.262 | 0.212 | 0.291 | 0.555 | 0.520 | 0.506 |
| F값 | | 58.869 | 49.611 | 48.965 | 28.158 | 39.847 | 25.249 | 10.985 | 7.510 | 18.345 | 48.791 | 41.849 | 34.273 |
| 관찰치 | | 171 | 171 | 171 | 171 | 171 | 171 | 171 | 171 | 171 | 171 | 171 | 171 |

주: 1) *** p<0.01, ** p<0.05,

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3) 1992-2011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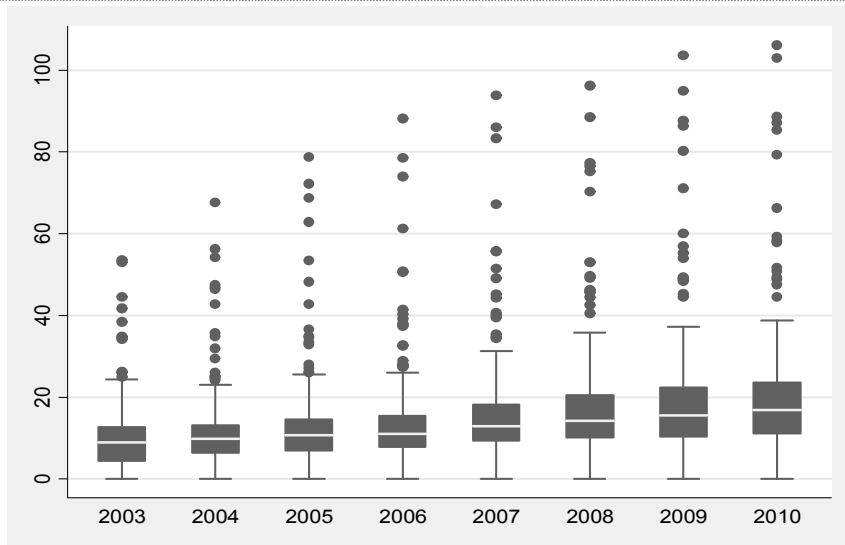
<부록 3-5> 1인당 GRDP 및 실업률 각각을 제외한 분석결과

| | | | 1인당 GRDP를 제외한 분석결과 | | | | | | 실업률을 제외한 분석결과 | | | | | |
|---------|-----------------|------|----------------------|----------------------|----------------------|------------------------|-------------------------|------------------------|-----------------------|-----------------------|----------------------|------------------------|-------------------------|------------------------|
|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65세 이상) 자살률 | | | 전체 자살률 | | | 노년층(65세 이상)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경제 위기 | 외환 위기 | 1998 | 8.792*** (0.968) | 13.917*** (1.430) | 3.864*** (0.959) | 9.491** (4.659) | 20.981** (8.553) | 3.254 (3.942) | 5.623*** (0.653) | 9.175*** (0.971) | 2.211*** (0.629) | 6.359** (3.070) | 12.702** (5.596) | 1.564 (2.563) |
| | | 1999 | 4.765*** (0.800) | 7.416*** (1.180) | 2.288*** (0.818) | 4.642 (3.741) | 12.916* (6.986) | -0.049 (3.205) | 2.121*** (0.546) | 3.440*** (0.807) | 0.909* (0.551) | 1.296 (2.464) | 5.285 (4.616) | -1.963 (2.105) |
| | 유동성 위기 | 2003 | 4.723*** (0.643) | 5.802*** (0.949) | 3.826*** (0.662) | 10.646*** (3.032) | 18.271*** (5.619) | 6.538** (2.580) | 4.916*** (0.662) | 6.024*** (0.980) | 4.000*** (0.663) | 10.796*** (3.018) | 18.637*** (5.614) | 6.667*** (2.564) |
| | | 2004 | 4.238*** (0.554) | 5.999*** (0.816) | 2.459*** (0.562) | 13.825*** (2.610) | 22.421*** (4.849) | 8.483*** (2.228) | 4.143*** (0.574) | 5.827*** (0.847) | 2.423*** (0.568) | 13.845*** (2.602) | 22.270*** (4.855) | 8.491*** (2.222) |
| | | 2005 | 3.862*** (0.543) | 5.282*** (0.800) | 2.134*** (0.575) | 12.435*** (2.426) | 23.920*** (4.673) | 4.623** (2.121) | 3.598*** (0.554) | 4.869*** (0.815) | 1.986*** (0.576) | 12.202*** (2.395) | 23.229*** (4.630) | 4.436** (2.096) |
| | 금융 위기 | 2009 | 3.855*** (0.487) | 3.616*** (0.697) | 3.997*** (0.527) | 5.334** (2.190) | 4.509 (4.048) | 5.776*** (1.931) | 3.976*** (0.511) | 3.796*** (0.726) | 3.996*** (0.540) | 6.192*** (2.237) | 5.510 (4.118) | 6.354*** (1.968) |
| | 시간특성 | | 0.829*** (0.221) | 0.987*** (0.327) | 0.696*** (0.203) | -1.610 (1.261) | -0.802 (2.048) | -2.190** (0.960) | 0.479* (0.254) | 0.403 (0.385) | 0.581*** (0.225) | -2.692** (1.338) | -2.649 (2.264) | -2.897*** (1.025) |
| 경제적 특성 | 1인당 GRDP | | | | | | | | 4.522* (2.610) | 7.724* (3.964) | 0.997 (2.287) | 23.887* (13.383) | 32.566 (23.230) | 15.319 (10.604) |
| | 실업률 | | -1.030*** (0.224) | -1.571*** (0.331) | -0.502** (0.219) | -1.592 (1.099) | -3.313* (1.993) | -0.908 (0.922) | | | | | | |
| | 산업화수준 | | -0.111 (0.086) | -0.160 (0.127) | -0.012 (0.079) | 0.954** (0.477) | 2.199*** (0.789) | 0.420 (0.377) | -0.285** (0.112) | -0.435*** (0.167) | -0.067 (0.099) | 0.286 (0.581) | 1.235 (0.980) | -0.020 (0.463) |
| 사회통합 수준 | 조이혼율 | | 0.060 (0.497) | 1.680** (0.758) | -1.733*** (0.460) | 3.595 (2.700) | 1.095 (4.671) | 3.248 (2.132) | -0.644 (0.490) | 0.697 (0.763) | -2.129*** (0.430) | 2.775 (2.590) | -0.565 (4.482) | 2.652 (2.009) |
| | 조출생률 | | 0.035 (0.187) | 0.143 (0.269) | -0.088 (0.182) | -1.897** (0.960) | -2.630 (1.638) | -2.261*** (0.792) | -0.146 (0.198) | -0.149 (0.286) | -0.155 (0.188) | -2.325** (0.962) | -3.381** (1.662) | -2.565*** (0.796)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0.100 (0.208) | -0.200 (0.306) | 0.065 (0.203) | 0.983 (1.021) | 1.144 (1.845) | 0.624 (0.859) | -0.203 (0.217) | -0.345 (0.320) | 0.003 (0.204) | 0.969 (1.018) | 1.024 (1.847) | 0.603 (0.855) |
| | 세대규모 | | -3.596 (3.580) | -2.889 (5.423) | -4.064 (3.194) | -85.416*** (21.286) | -109.738*** (34.164) | -63.859*** (16.021) | -6.292* (3.756) | -6.314 (5.782) | -5.578* (3.173) | -87.359*** (21.311) | -114.628*** (34.350) | -65.855*** (15.874) |
| | 노인인구비(전체;남성;여성) | | 0.251 (0.243) | 0.630 (0.504) | -0.165 (0.165) | -1.070 (1.406) | -3.418 (3.180) | -0.587 (0.803) | 0.440 (0.270) | 1.114* (0.575) | -0.135 (0.176) | -0.365 (1.448) | -1.668 (3.400) | -0.264 (0.826) |
| 지역사회 특성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 -0.932* (0.523) | -1.277 (0.777) | -0.614 (0.479) | -1.304 (2.865) | 0.603 (4.828) | -1.948 (2.273) | -1.376** (0.571) | -2.049** (0.861) | -0.760 (0.499) | -3.080 (2.989) | -2.010 (5.066) | -2.993 (2.349) |
| | 상수항 cons | | 36.199** (15.531) | 43.002* (23.100) | 24.034 (17.403) | 223.155*** (58.955) | 231.184* (129.755) | 210.436*** (56.139) | 54.771*** (15.442) | 67.355*** (22.868) | 34.588** (17.029) | 232.759*** (57.875) | 260.813** (127.102) | 221.564*** (54.991) |
| R2 | within | | 0.889 | 0.850 | 0.854 | 0.710 | 0.734 | 0.648 | 0.873 | 0.826 | 0.850 | 0.706 | 0.726 | 0.647 |
| | between | | 0.371 | 0.470 | 0.032 | 0.097 | 0.081 | 0.084 | 0.247 | 0.295 | 0.023 | 0.011 | 0.049 | 0.001 |
| | overall | | 0.814 | 0.798 | 0.781 | 0.680 | 0.585 | 0.625 | 0.666 | 0.604 | 0.758 | 0.625 | 0.650 | 0.492 |
| F값 | | | 135.477 | 96.091 | 99.771 | 41.568 | 46.832 | 31.328 | 117.118 | 80.723 | 96.237 | 40.753 | 45.002 | 31.1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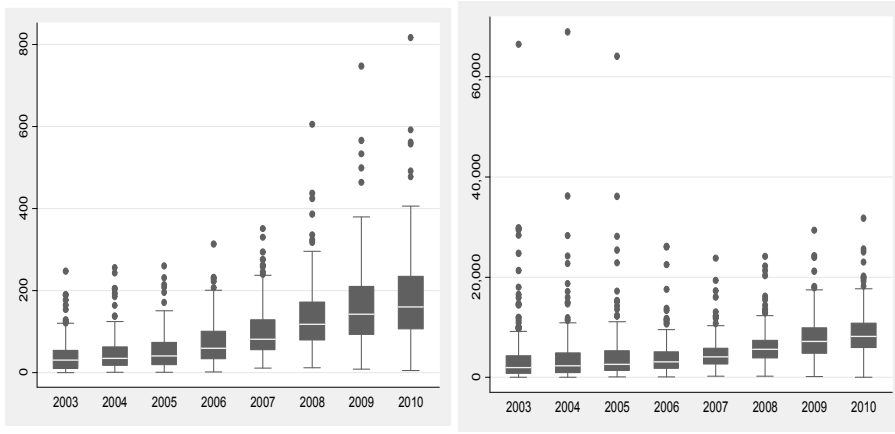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3) 각 분석에서 관찰치는 285개

<부록> 연도별 구조적 사회자본 변화

<부록 4-1> 연도별 시군구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상자그림



<부록 4-2> 연도별 시군구 자원봉사단체 및 회원 비율 상자그림
 자원봉사단체 비율 자원봉사단체 회원 비율



주1: 2008-2010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자원봉사단체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주2: 2003-2005년 전라북도 임실군의 자원봉사단체회원 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부록> 연간가구평균소득을 활용한 분석결과

일부 광역정부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소득범주와 각 범주에 속한 가구비중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동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연간가구평균소득을 산출하였다. 활용된 자료는 「서울서베이」,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 「부산의사회지표」, 경기도 「도민생활수준과의식조사」, 경상북도의 「사회지표」 경상남도의 「사회통계조사」, 「광주사회지표」, 「울산의사회지표」 이다.

<부록 4-3> 연간가구평균소득 기술통계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관측치 |
|-------------|---------|---------|--------|---------|---------|--------|
| 연평균가구 소득 | overall | 3229.39 | 973.13 | 1135.22 | 6124.17 | 975 |
| | between | | 878.69 | 1457.27 | 5221.09 | 지역=165 |
| | within | | 493.02 | 613.93 | 4934.93 | |

주: 각 자료는 범주자료로 제공되었기에 각 범주별 중앙값을 활용하여 연평균가구소득을 산출하였다.

<부록 4-4>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연평균가구소득

| | | 전체 자살률 | | | 노인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사회 자본 | 자원봉사단체 비율 | 0.108 (0.383) | 0.288 (0.578) | -0.112 (0.463) | -0.634 (1.641) | 0.600 (3.426) | -1.449 (1.602)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0.009 (0.303) | -0.317 (0.459) | 0.328 (0.366) | 0.663 (1.300) | -0.588 (2.719) | 1.429 (1.269) |
| |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 1.774* (1.079) | 3.728** (1.628) | -0.241 (1.304) | 9.092** (4.622) | 25.411*** (9.652) | -1.524 (4.513) |
| 문화 예술 활동 | 문화시설 이용자비율 | -0.775 (0.484) | -0.668 (0.731) | -0.882 (0.585) | -4.394** (2.074) | -6.718 (4.331) | -3.062 (2.024) |
| | 문화시설 비율 | 1.841* (1.008) | 3.742** (1.523) | -0.203 (1.217) | 2.223 (4.318) | 7.458 (9.024) | -0.586 (4.213)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0.505 (0.621) | 0.693 (0.937) | 0.122 (0.750) | -0.194 (2.660) | 1.654 (5.551) | -1.798 (2.597) |
| 경제 적 특성 | 연평균가구소득 | 0.577 (1.303) | -0.672 (1.968) | 1.940 (1.574) | -4.156 (5.583) | -14.260 (11.663) | 2.204 (5.450) |
| | 자동차보유율 | -0.012 (0.012) | -0.028 (0.018) | -0.004 (0.015) | -0.082 (0.052) | -0.070 (0.107) | -0.094* (0.051) |
| | 1인당 평업 제조업 생산액 | -0.625 (0.807) | 0.609 (1.225) | -1.948** (0.973) | -0.310 (3.459) | 0.370 (7.258) | -0.506 (3.369) |
| 사회 통합 수준 | 조이혼률 | 4.460*** (0.909) | 4.906*** (1.357) | 3.956*** (1.103) | 16.142*** (3.894) | 29.147*** (8.044) | 8.662** (3.818) |
| | 조출생률 | -0.891*** (0.342) | -0.185 (0.516) | -1.621*** (0.413) | -4.610*** (1.465) | -5.315* (3.061) | -4.554*** (1.430) |
| | 인구이동률 | -0.000 (0.007) | 0.000 (0.011) | 0.000 (0.009) | 0.006 (0.031) | -0.003 (0.064) | 0.020 (0.030) |
| | 외국인비율 | -0.716 (1.050) | -1.124 (1.589) | -0.284 (1.268) | -9.042** (4.500) | -22.530** (9.419) | -0.377 (4.390) |
| | 산업화 수준 | 0.232 (0.962) | -1.141 (1.452) | 1.822 (1.164) | 3.420 (4.123) | 7.358 (8.606) | 1.711 (4.029) |
| | 도시화 수준 | -1.381 (4.138) | -4.270 (6.245) | 1.860 (5.001) | 9.954 (17.730) | -10.578 (37.012) | 7.801 (17.315) |
| | 인구밀도 | -0.000 (0.001) | 0.001 (0.001) | -0.001 (0.001) | 0.004 (0.003) | 0.011 (0.007) | 0.000 (0.003) |
| 공공 부조 | 0.192*** (0.065) | 0.209** (0.099) | 0.183** (0.079) | 0.019 (0.280) | -0.375 (0.589) | 0.223 (0.274) | |
| 사회 특성 | -0.056* (0.034) | -0.055 (0.131) | -0.068 (0.064) | 0.321** (0.144) | 1.387* (0.776) | 0.432* (0.222) | |
| | 2004 | 2.762*** (0.984) | 2.926* (1.494) | 2.434** (1.183) | 10.419** (4.217) | 11.512 (8.857) | 9.224** (4.095) |
| | 2005 | 2.363* (1.271) | 1.828 (1.932) | 2.505 (1.524) | 8.342 (5.448) | 12.360 (11.453) | 4.116 (5.277) |
| | 2006 | -0.690 (1.518) | -2.658 (2.315) | 0.646 (1.815) | 2.080 (6.505) | -0.997 (13.719) | 1.305 (6.283) |
| | 2007 | 2.836 (1.756) | -1.674 (2.691) | 6.599*** (2.091) | 7.094 (7.525) | 4.104 (15.949) | 5.678 (7.238) |
| | 2008 | 3.812* (2.027) | 0.419 (3.129) | 6.015** (2.401) | 0.747 (8.685) | -9.117 (18.543) | 2.736 (8.313) |
| | 2009 | 7.035*** (2.187) | 4.536 (3.400) | 8.223*** (2.580) | 2.894 (9.373) | -9.295 (20.150) | 5.745 (8.933) |
| | 2010 | 8.873*** (2.399) | 5.334 (3.729) | 10.964*** (2.828) | 7.527 (10.279) | -3.488 (22.101) | 8.374 (9.790) |
| | 상수항 | -0.329 (97.054) | 132.604 (146.582) | -159.146 (117.336) | -251.466 (415.882) | -603.385 (868.797) | -114.914 (406.216) |
| R2 | within | 0.215 | 0.151 | 0.159 | 0.111 | 0.092 | 0.060 |
| | between | 0.110 | 0.053 | 0.059 | 0.151 | 0.151 | 0.023 |
| | overall | 0.154 | 0.055 | 0.080 | 0.064 | 0.040 | 0.014 |
| F값 | | 8.380 | 5.452 | 5.806 | 3.810 | 3.084 | 1.967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시군구 164개 및 관측치 954개

<부록 4-5> 연평균가구소득 제외 분석결과(단, 포함한 경우와 동일한 표본 활용)

| | | 전체 자살률 | | | 노인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사회 자본 | 자원봉사단체 비율 | 0.110 (0.383) | 0.286 (0.578) | -0.105 (0.463) | -0.651 (1.640) | 0.540 (3.427) | -1.440 (1.601)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0.006 (0.303) | -0.313 (0.458) | 0.318 (0.366) | 0.687 (1.300) | -0.498 (2.719) | 1.417 (1.268) |
| |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 1.782* (1.078) | 3.720** (1.627) | -0.218 (1.304) | 9.041* (4.621) | 25.226*** (9.654) | -1.498 (4.510) |
| 문화 예술 활동 | 문화시설 이용자비율 | -0.783 (0.484) | -0.660 (0.730) | -0.909 (0.584) | -4.339** (2.072) | -6.537 (4.330) | -3.092 (2.022) |
| | 문화시설 비율 | 1.835* (1.007) | 3.749** (1.522) | -0.222 (1.217) | 2.266 (4.316) | 7.625 (9.026) | -0.607 (4.210)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0.523 (0.619) | 0.672 (0.934) | 0.182 (0.749) | -0.321 (2.654) | 1.223 (5.542) | -1.729 (2.590) |
| 경제 적 특성 | 자동차보유율 | -0.013 (0.012) | -0.027 (0.018) | -0.006 (0.015) | -0.077 (0.052) | -0.053 (0.106) | -0.096* (0.051) |
| | 1인당 광업 제조업 생산액 | -0.648 (0.805) | 0.635 (1.221) | -2.031** (0.971) | -0.139 (3.451) | 0.920 (7.246) | -0.600 (3.360) |
| 사회 통합 수준 | 조이혼률 | 4.493*** (0.905) | 4.867*** (1.352) | 4.070*** (1.099) | 15.902*** (3.880) | 28.318*** (8.018) | 8.792** (3.803) |
| | 조출생률 | -0.893*** (0.342) | -0.181 (0.516) | -1.630*** (0.413) | -4.589*** (1.464) | -5.229* (3.061) | -4.565*** (1.429) |
| | 인구이동률 | -0.001 (0.007) | 0.001 (0.011) | -0.001 (0.009) | 0.007 (0.031) | 0.002 (0.064) | 0.020 (0.030) |
| | 외국인비율 | -0.693 (1.048) | -1.149 (1.586) | -0.204 (1.267) | -9.209** (4.493) | -23.064** (9.412) | -0.285 (4.382) |
| | 산업화 수준 | 0.219 (0.961) | -1.127 (1.451) | 1.776 (1.164) | 3.515 (4.120) | 7.656 (8.605) | 1.659 (4.025) |
| | 도시화 수준 | -1.458 (4.132) | -4.180 (6.235) | 1.601 (4.999) | 10.510 (17.710) | 12.501 (36.991) | 7.507 (17.290) |
| | 인구밀도 | -0.000 (0.001) | 0.001 (0.001) | -0.001 (0.001) | 0.004 (0.003) | 0.011 (0.007) | 0.000 (0.003) |
| 공공 부조 | 기초생활 수급자비율 | 0.190*** (0.065) | 0.212** (0.099) | 0.176** (0.079) | 0.037 (0.279) | -0.310 (0.586) | 0.214 (0.273) |
| | 노인 비율 | -0.055 (0.034) | -0.059 (0.130) | -0.063 (0.064) | 0.314** (0.144) | 1.315* (0.774) | 0.437** (0.221) |
| 사회 특성 | 2004 | 2.814*** (0.976) | 2.867* (1.484) | 2.615** (1.174) | 10.042** (4.185) | 10.262 (8.801) | 9.430** (4.061) |
| | 2005 | 2.422* (1.263) | 1.762 (1.921) | 2.714* (1.515) | 7.912 (5.415) | 10.948 (11.398) | 4.353 (5.241) |
| | 2006 | -0.598 (1.503) | -2.760 (2.294) | 0.964 (1.797) | 1.423 (6.443) | -3.161 (13.609) | 1.667 (6.216) |
| | 2007 | 2.914* (1.747) | -1.758 (2.678) | 6.873*** (2.080) | 6.539 (7.486) | 2.325 (15.887) | 5.989 (7.193) |
| | 2008 | 3.890* (2.018) | 0.336 (3.117) | 6.298*** (2.391) | 0.181 (8.650) | -10.887 (18.492) | 3.059 (8.270) |
| | 2009 | 7.078*** (2.184) | 4.496 (3.396) | 8.391*** (2.578) | 2.585 (9.361) | -10.145 (20.145) | 5.935 (8.916) |
| | 2010 | 8.840*** (2.397) | 5.383 (3.724) | 10.880*** (2.828) | 7.761 (10.272) | -2.454 (22.092) | 8.279 (9.782) |
| | 상수항 | 5.924 (95.972) | 125.477 (145.004) | -137.926 (116.105) | -296.471 (411.344) | -754.655 (860.220) | -90.798 (401.599) |
| R2 | within | 0.215 | 0.151 | 0.158 | 0.110 | 0.090 | 0.060 |
| | between | 0.114 | 0.050 | 0.067 | 0.152 | 0.150 | 0.024 |
| | overall | 0.156 | 0.053 | 0.082 | 0.065 | 0.040 | 0.014 |
| F값 | | 8.730 | 5.681 | 5.980 | 3.948 | 3.149 | 2.045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시군구 164개 및 관측치 954개

<부록 4-6>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범죄율

| | | 전체 자살률 | | | 노인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사회 자본 | 자원봉사단체 비율 | -0.135 (0.337) | -0.082 (0.513) | -0.154 (0.416) | -0.486 (1.441) | 0.638 (2.884) | -1.422 (1.384)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0.048 (0.260) | -0.145 (0.397) | 0.237 (0.321) | 0.110 (1.114) | -2.027 (2.230) | 1.541 (1.069) |
| |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 0.695 (0.677) | 1.247 (1.033) | 0.079 (0.836) | 7.041** (2.898) | 17.444*** (5.805) | 0.537 (2.783) |
| 문화 예술 활동 | 문화시설 이용자비율 | -0.710* (0.427) | -0.524 (0.650) | -1.062** (0.527) | -4.229** (1.825) | -6.323* (3.653) | -3.361* (1.752) |
| | 문화시설 비율 | 0.245 (0.834) | 0.172 (1.271) | 0.497 (1.029) | -2.214 (3.568) | -4.731 (7.144) | 0.225 (3.424)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0.210 (0.561) | 0.015 (0.856) | -0.480 (0.693) | -1.216 (2.402) | -0.258 (4.807) | -1.935 (2.306) |
| 경제적 특성 | 자동차보유율 | -0.009 (0.012) | -0.016 (0.017) | -0.006 (0.014) | -0.010 (0.049) | 0.077 (0.097) | -0.059 (0.048) |
| | 1인당 광업 제조업 생산액 | -1.818*** (0.672) | -1.458 (1.027) | -2.331*** (0.828) | 2.205 (2.874) | 2.960 (5.770) | 1.645 (2.755) |
| 사회 통합 수준 | 조이혼률 | 1.434** (0.693) | 1.695 (1.045) | 1.435* (0.858) | 10.442*** (2.966) | 19.419*** (5.869) | 5.864** (2.855) |
| | 조출생률 | 0.012 (0.258) | 0.611 (0.394) | -0.640** (0.319) | -0.737 (1.106) | 0.729 (2.213) | -1.894* (1.062) |
| | 인구이동률 | -0.012** (0.005) | -0.015** (0.008) | -0.008 (0.006) | -0.020 (0.022) | -0.007 (0.043) | -0.023 (0.021) |
| | 외국인비율 | 1.044 (0.888) | 1.194 (1.357) | 1.006 (1.094) | -3.206 (3.799) | -9.870 (7.625) | 1.845 (3.642) |
| | 산업화 수준 | 0.466 (0.447) | -0.252 (0.680) | 1.319** (0.551) | 2.129 (1.910) | 3.830 (3.821) | 1.607 (1.835) |
| | 도시화 수준 | 0.270 (4.681) | -2.008 (7.131) | 2.747 (5.780) | 12.661 (20.025) | 13.526 (40.069) | 10.254 (19.236) |
| | 인구밀도 | -0.001 (0.001) | -0.001 (0.001) | -0.001 (0.001) | 0.004 (0.003) | 0.009 (0.007) | -0.000 (0.003) |
| | 공공 부조 | 기초생활 수급자비율 | -0.042 (0.037) | -0.126** (0.056) | 0.043 (0.046) | -0.363** (0.158) | -0.827*** (0.315) |
| 사회 특성 | 노인 비율 | -0.024 (0.027) | -0.088 (0.104) | -0.044 (0.052) | 0.307*** (0.114) | 0.788 (0.584) | 0.445*** (0.172) |
| 불신 | 범죄율 | 0.234 (1.025) | 1.839 (1.562) | -1.638 (1.265) | -3.123 (4.383) | 1.559 (8.775) | -5.514 (4.210) |
| | 2004 | 1.527** (0.758) | 1.751 (1.158) | 1.566* (0.930) | 9.307*** (3.241) | 15.413** (6.509) | 5.975* (3.096) |
| | 2005 | 1.276 (0.988) | 2.027 (1.515) | 0.785 (1.209) | 9.878** (4.228) | 23.069*** (8.513) | 1.437 (4.022) |
| | 2006 | -1.556 (1.184) | -1.930 (1.826) | -1.007 (1.441) | 3.679 (5.065) | 9.617 (10.257) | -0.569 (4.797) |
| | 2007 | 1.190 (1.386) | -1.132 (2.155) | 4.091** (1.676) | 5.923 (5.928) | 13.836 (12.110) | 0.563 (5.577) |
| | 2008 | 2.032 (1.611) | 0.596 (2.516) | 3.876** (1.943) | 0.174 (6.893) | 5.272 (14.134) | -4.102 (6.465) |
| | 2009 | 6.924*** (1.740) | 6.845** (2.722) | 7.346*** (2.097) | 5.396 (7.443) | 10.024 (15.295) | 1.125 (6.979) |
| | 2010 | 6.480*** (1.924) | 6.437** (3.015) | 7.057*** (2.317) | 5.912 (8.231) | 13.387 (16.939) | -0.640 (7.711) |
| | 상수항 | 4.571 (45.655) | 75.876 (69.586) | -75.408 (56.369) | -159.341 (195.323) | -375.023 (390.978) | -78.560 (187.608) |
| R2 | within | 0.165 | 0.107 | 0.109 | 0.060 | 0.049 | 0.032 |
| | between | 0.187 | 0.087 | 0.105 | 0.066 | 0.034 | 0.005 |
| | overall | 0.158 | 0.082 | 0.068 | 0.015 | 0.006 | 0.000 |
| F값 | | 12.242 | 7.475 | 7.632 | 3.954 | 3.228 | 2.044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시군구 230개 및 관측치 1,807개

<부록> 사회단체활동 기술통계

<부록 4-7> 성별 사회활동 인구(2010)

(단위 : 천명, %)

| | 15세 이상 | 사회활동 미참여 | 사회활동 참여 | 사회 | 경제 | 문화 | 정치 | 종교 | 지역 | 친목 | 교육 | 기타 |
|----|-------------------|------------------|-----------------|--------------|--------------|----------------|-------------|-----------------|--------------|-----------------|--------------|-------------|
| | | |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단체 | 단체 | 단체 | |
| 남자 | 19,194 (100.0) | 12,711 (66.2) | 6,483 (33.8) | 551 (2.9) | 582 (3.0) | 1,316 (6.9) | 84 (0.4) | 1,608 (8.4) | 343 (1.8) | 3,762 (19.6) | 231 (1.2) | 41 (0.2) |
| 여자 | 20,497 (100.0) | 14,255 (69.5) | 6,242 (30.5) | 528 (2.6) | 238 (1.2) | 909 (4.4) | 35 (0.2) | 2,461 (12.0) | 329 (1.6) | 2,843 (13.9) | 594 (2.9) | 40 (0.2) |

주1: 사회활동은 해당 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조사하였으며, 다중응답을 해당 응답항목에 각각 반영하여 사회활동 참여(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2011b: 34)

<부록 4-8> 연령별 사회단체활동 인구(2010)

(단위 : 천명, %)

| | 15세이상 | 사회활동 미참여 | 사회활동 참여 | 사회 | 경제 | 문화 | 정치 | 종교 | 지역 | 친목 | 교육 | 기타 |
|-------|-------------------|------------------|------------------|----------------|--------------|----------------|--------------|-----------------|--------------|-----------------|--------------|-------------|
| | | |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단체 | 단체 | 단체 | |
| 계 | 39,692 (100.0) | 26,967 (67.9) | 12,725 (32.1) | 1,079 (2.7) | 820 (2.1) | 2,225 (5.6) | 119 (0.3) | 4,069 (10.3) | 672 (1.7) | 6,605 (16.6) | 825 (2.1) | 81 (0.2) |
| 15-19 | 3,344 (100.0) | 2,864 (85.7) | 480 (14.3) | 80 (2.4) | 1 (0.0) | 104 (3.1) | 1 (0.0) | 231 (6.9) | 1 (0.0) | 90 (2.7) | 8 (0.2) | 23 (0.7) |
| 20-24 | 2,636 (100.0) | 2,067 (78.4) | 569 (21.6) | 54 (2.1) | 34 (1.3) | 138 (5.2) | 3 (0.1) | 184 (7.0) | 5 (0.2) | 229 (8.7) | 31 (1.2) | 5 (0.2) |
| 25-29 | 3,517 (100.0) | 2,545 (72.4) | 972 (27.6) | 56 (1.6) | 84 (2.4) | 220 (6.3) | 5 (0.1) | 255 (7.2) | 12 (0.3) | 454 (12.9) | 84 (2.4) | 5 (0.1) |
| 30-34 | 3,700 (100.0) | 2,584 (69.8) | 1,116 (30.2) | 61 (1.6) | 103 (2.8) | 232 (6.3) | 9 (0.2) | 288 (7.8) | 27 (0.7) | 534 (14.4) | 111 (3.0) | 5 (0.1) |
| 35-39 | 4,105 (100.0) | 2,660 (64.8) | 1,445 (35.2) | 107 (2.6) | 123 (3.0) | 294 (7.2) | 16 (0.4) | 393 (9.6) | 61 (1.5) | 696 (17.0) | 176 (4.3) | 6 (0.1) |
| 40-44 | 4,135 (100.0) | 2,509 (60.7) | 1,625 (39.3) | 159 (3.8) | 136 (3.3) | 312 (7.5) | 21 (0.5) | 440 (10.6) | 96 (2.3) | 865 (20.9) | 172 (4.2) | 6 (0.1) |
| 45-49 | 4,075 (100.0) | 2,424 (59.5) | 1,651 (40.5) | 171 (4.2) | 145 (3.5) | 293 (7.2) | 20 (0.5) | 463 (11.4) | 113 (2.8) | 949 (23.3) | 112 (2.8) | 6 (0.1) |
| 50-54 | 3,799 (100.0) | 2,227 (58.6) | 1,573 (41.4) | 155 (4.1) | 124 (3.3) | 249 (6.5) | 17 (0.4) | 489 (12.9) | 113 (3.0) | 935 (24.6) | 60 (1.6) | 6 (0.2) |
| 55-59 | 2,769 (100.0) | 1,671 (60.3) | 1,099 (39.7) | 98 (3.6) | 36 (1.3) | 151 (5.5) | 11 (0.4) | 385 (13.9) | 83 (3.0) | 687 (24.8) | 35 (1.3) | 4 (0.1) |
| 60-64 | 2,184 (100.0) | 1,374 (62.9) | 810 (37.1) | 62 (2.9) | 18 (0.8) | 99 (4.5) | 7 (0.3) | 305 (14.0) | 58 (2.6) | 489 (22.4) | 17 (0.8) | 3 (0.1) |
| 65이상 | 5,427 (100.0) | 4,043 (74.5) | 1,384 (25.5) | 76 (1.4) | 15 (0.3) | 133 (2.5) | 9 (0.2) | 637 (11.7) | 104 (1.9) | 675 (12.4) | 17 (0.3) | 14 (0.3) |

주1: 사회활동은 다중응답임

자료: 통계청(2011b: 35)

<부록 4-9> 분석결과: 사회문화자본과 정신요양시설

| | | 전체 자살률 | | | 노인 자살률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사회 자본 | 자원봉사단체 비율 | -0.131 (0.338) | -0.107 (0.515) | -0.123 (0.417) | -0.423 (1.445) | 0.607 (2.893) | -1.323 (1.389) |
| | 자원봉사단체 회원비율 | 0.047 (0.261) | -0.111 (0.398) | 0.202 (0.322) | 0.040 (1.116) | -1.993 (2.234) | 1.425 (1.072) |
| |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 0.701 (0.677) | 1.263 (1.034) | 0.069 (0.836) | 7.024** (2.898) | 17.452*** (5.805) | 0.498 (2.784) |
| 문화 예술 활동 | 문화시설 이용자비율 | -0.711* (0.427) | -0.493 (0.651) | -1.098** (0.527) | -4.297** (1.826) | -6.291* (3.655) | -3.476** (1.754) |
| | 문화시설 비율 | 0.240 (0.835) | 0.220 (1.273) | 0.443 (1.030) | -2.324 (3.572) | -4.676 (7.151) | 0.053 (3.429) |
| | 동네체육시설 비율 | -0.210 (0.562) | 0.062 (0.856) | -0.528 (0.693) | -1.312 (2.403) | -0.210 (4.809) | -2.092 (2.308) |
| 경제적 특성 | 자동차보유율 | -0.009 (0.012) | -0.015 (0.017) | -0.006 (0.014) | -0.010 (0.049) | 0.077 (0.097) | -0.059 (0.048) |
| | 1인당 광업 제조업 생산액 | -1.818*** (0.672) | -1.406 (1.028) | -2.391*** (0.828) | 2.091 (2.876) | 3.013 (5.773) | 1.451 (2.757) |
| 사회 통합 수준 | 조이혼률 | 1.424** (0.692) | 1.646 (1.044) | 1.481* (0.857) | 10.522*** (2.963) | 19.382*** (5.863) | 6.023** (2.853) |
| | 조출생률 | 0.012 (0.258) | 0.608 (0.394) | -0.636** (0.319) | -0.729 (1.106) | 0.725 (2.213) | -1.883* (1.063) |
| | 인구이동률 | -0.013** (0.005) | -0.016** (0.008) | -0.007 (0.006) | -0.019 (0.022) | -0.007 (0.043) | -0.021 (0.021) |
| | 외국인비율 | 1.034 (0.891) | 1.291 (1.363) | 0.895 (1.099) | -3.429 (3.814) | -9.760 (7.654) | 1.491 (3.658) |
| | 산업화 수준 | 0.467 (0.447) | -0.249 (0.680) | 1.317** (0.552) | 2.126 (1.910) | 3.832 (3.821) | 1.602 (1.836) |
| | 도시화 수준 | 0.265 (4.681) | -1.933 (7.135) | 2.658 (5.782) | 12.488 (20.028) | 13.609 (40.072) | 9.969 (19.245) |
| | 인구밀도 | -0.001 (0.001) | -0.001 (0.001) | -0.001 (0.001) | 0.004 (0.003) | 0.009 (0.007) | 0.000 (0.003) |
| | 공공 부조 | 기초생활 수급자비율 | -0.042 (0.037) | -0.129** (0.056) | 0.047 (0.046) | -0.356** (0.158) | -0.830*** (0.315) |
| 사회 특성 | 노인 비율 | -0.024 (0.027) | -0.092 (0.104) | -0.044 (0.052) | 0.309*** (0.114) | 0.785 (0.583) | 0.447*** (0.172) |
| 정신요양시설 유무 | | -0.615 (3.382) | 2.197 (5.154) | -3.184 (4.177) | -6.397 (14.468) | 3.031 (28.949) | -9.842 (13.902) |
| 2004 | | 1.527** (0.758) | 1.729 (1.159) | 1.599* (0.931) | 9.363*** (3.242) | 15.390** (6.509) | 6.082** (3.097) |
| 2005 | | 1.246 (0.976) | 1.724 (1.499) | 1.085 (1.193) | 10.443** (4.176) | 22.798*** (8.417) | 2.437 (3.970) |
| 2006 | | -1.587 (1.170) | -2.318 (1.807) | -0.613 (1.423) | 4.421 (5.006) | 9.262 (10.151) | 0.736 (4.737) |
| 2007 | | 1.179 (1.383) | -1.391 (2.154) | 4.382*** (1.672) | 6.467 (5.918) | 13.585 (12.098) | 1.519 (5.566) |
| 2008 | | 2.037 (1.613) | 0.444 (2.521) | 4.083** (1.945) | 0.555 (6.902) | 5.106 (14.157) | -3.431 (6.475) |
| 2009 | | 6.923*** (1.741) | 6.608** (2.727) | 7.639*** (2.099) | 5.941 (7.450) | 9.779 (15.315) | 2.079 (6.985) |
| 2010 | | 6.451*** (1.914) | 5.958** (3.005) | 7.574*** (2.304) | 6.883 (8.191) | 12.933 (16.878) | 1.065 (7.668) |
| 상수항 | | 6.280 (45.236) | 86.372 (68.968) | -84.179 (55.873) | -175.956 (193.549) | -366.622 (387.357) | -108.456 (185.963) |
| R2 | within | 0.165 | 0.107 | 0.109 | 0.060 | 0.049 | 0.031 |
| | between | 0.195 | 0.103 | 0.075 | 0.064 | 0.034 | 0.020 |
| | overall | 0.161 | 0.086 | 0.062 | 0.016 | 0.006 | 0.002 |
| F값 | | 12.241 | 7.421 | 7.583 | 3.941 | 3.227 | 1.994 |

주1: *** p<0.01, ** p<0.05, * p<0.1 주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주3: 시군구 230개 및 관측치 1,807개

Abstract

An Analysis on the Suicide Rates of Korea

-Focusing on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Factors of the Community-

Kim, Min Yo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the rapidly increasing suicide rates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suicide rates. More than ten years, the suicide rates of South Korea have been increased, even though the economic status has been growing up steadily. Especially after experiencing the economic crises, not only the economic situation has suffered but also the social structure has changed: The income inequality has widened, family relationship has weakened, and the relative deprivation has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is and suicide rates and tried to find out the effective policies to lower the suicide rates at the ecological level.

First, with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of Korea, the age and

gender specific suicide rates were calculated. The trend showed that the suicide rates of men are higher than those of women and the suicide rates of elderly are higher than those of youth. And the gender gap of the suicide rates increased as getting old. This is because the age and gender groups are affected from the social factors. So for the 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used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which enable comparing the regional suicide rates by controlling the demographic structures.

Second,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external and internal economic crises on suicide rates us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1998~1999),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2009) and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2003~2005). Two-way fixed effect model with AR(1) disturbance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gional suicide rates of the 15 provinces(si-do) with special emphasis on age-specific and gender-specific differences during 1992~2011. The result showed that Suicide rates increased markedly at the time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was the next, an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as the last. This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ult (Kim et al., 2011). That is because in this study the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were used instead of the crude suicide rates and the time span has expanded from 2009 to 2011 unlike the previous study. Therefore the negative impact of Subprime mortgage crisis could be analyzed more clearly. More specifically, male suicide rates were increased higher than female ones by the economic crises. While the suicide rates of the youth (15-34) increased more due to the external economic crises than the internal one, the suicide rates of the elderly (above age 65) increased more due to the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than other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 with respect to not only the characters of economic crises but also the target group's gender and age.

Thir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enjoyment of art, and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on the regional suicide rates were analyzed.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and enjoyment of art as the socio-psychological approach and tha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as the safety net. Two-way fixed effect model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gional suicide rates of the 230 provinces(si-gun-gu) with special emphasis on age-specific (total and elderly) and gender-specific differences during 2003~2010.

It is shown that structural social capital has no impact on or rather increasing suicide rates. The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volunteer organization membership or high percentage of volunteer organization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uicide rates. On the other hand,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are registered on the governmental list voluntarily- have higher suicide rates. There are many possible explanations. First, as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more than one hundred members could register to the governmental list, they may not have horizontal structure which could create the positive externality like general trust or reciprocity. Second, because of the nepotism of the Korean society, the nonprofit organizations may have generated the bonding social capital and the negative externality could be enforced. Third, as the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yongochipdan-the traditional community based on kinship, home region and school (Lew, Wang, & Park, 2008)- or religious organizations

could not enroll the governmental list, the expected positive externality may not be generated. Fourth,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laces with serious problems could have more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are established and enrolled in order to help the residents with the governmental subsidy.

Additionally, places with high local turnout rates have higher suicide rates. This is because in South Korea the high local turnout rates is a way to express the dissatisfaction or complaints

As expe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laces with high rates of enjoyment of art -the percentage of users of public library and museum among residents- have low suicide rate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total female suicide rates and all of the elderly suicide rates. The art facility rates or neighborhood sports facility rates do not have impact on suicide rates. This implies that what is more important is time to enjoy the art in the public sphere. So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make the people to locate time for the art.

The percentage of previous year's welfare expenditure has som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female suicide rates. Also the previous year's per capita welfare expenditure has som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suicide rates and total female suicide rates. In sum, the previous year's welfare expenditure lowers the female suicide rates by relieving the economical and psychological hardships. On the other hand, places with higher per capita welfare expenditure have lower elderly men suicide rates. This implies that for the elderly men, the economic hardship of the time is more stressful than the anxiety for the future.

In addition, the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ve low suicide rates of all the age and gender specific groups. It means that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verty is really important for lowering suicide rates.

In accord with the previous research,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status was confirmed. Especially, the places with high divorce rate have high suicide rate.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ow social integra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policies which would create social capital with positive externality.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during that this study used aggregation data.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apply a multi-level model to identify macro-economic shocks on individual suicidal behaviors. Second, the social capital variable in this study measured simply by structural aspects and does not include other aspec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or reciprocity. Further research with more detailed data and the cognitive aspect of social capital is needed. Third, as the results suggest the negative externality of nepotism, a further study on the yongo chipdan as a unique feature of social capital is needed.

Keywords: age-specific suicide rate, gender-specific suicide rate, economic crisis, social capital, enjoyment of art, welfare spending

Student Number: 2008-30651